



■ 연구보고서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이삼식·김익기·최효진
杜鵬·陆杰华
奥山正司·高橋泉

【책임연구자】

이삼식 (Lee Samsik)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김익기 (Kim Ikki) 동국대학교 교수

최효진 (Choi Hyoji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杜鹏 (Du Peng) 中国人民大学 교수

陆杰华 (Lu Jiehua) 北京大学 교수

奥山正司 (Okuyama Shoji) 東京經濟大学 교수

高橋泉 (Takahashi Izumi) 仙台白百合女子大学 교수

연구보고서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발행일 2013년

저자 이삼식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가격 7,000원

발간사 <<

국가 간 인구이동은 각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의 인구 변화와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는 그 규모가 큰 만큼 상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로 한국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 정도는 한국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및 일본 인구의 변동과 인구사회학적인 상호 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및 일본 인구의 변동과 인구사회학적인 상호 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에 따른 인구전략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 추이와 미래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그간의 인구정책 변천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술적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3국의 인구와 경제·사회·문화 간의 연관성 규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에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인구관련 국가 간 역학관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 간 연동성에 대한 논의의 준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현 교수, 충남대학교 전광희 교수, 본 원의 이상림 박사와 이소영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한·중·일 인구동태 변화	15
제1절 한국의 인구동태 변화	17
제2절 중국의 인구동태 변화	21
제3절 일본의 인구동태 변화	28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동태 변화 비교	37
 제3장 한·중·일 인구의 현재와 미래	45
제1절 한국의 인구 변동	47
제2절 중국의 인구 변동	54
제3절 일본의 인구 변동	61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변동 비교	66
 제4장 한·중·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71
제1절 한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73
제2절 중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85
제3절 일본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120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변동의 영향 비교	131

제5장 한·중·일 인구정책 변화	135
제1절 한국의 인구정책 변화	137
제2절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144
제3절 일본의 인구정책 변화	156
제4절 한·중·일 간 인구정책 비교	164
 제6장 미래 인구전략	 167
제1절 인구변동, 인구정책, 경제성장 간 연관성	169
제2절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173
제3절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	183
 제7장 결론	 187
 참고문헌	 197

표 목차

〈표 2- 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8
〈표 2- 2〉 한국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수명) 변동 추이	19
〈표 2- 3〉 한국의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20
〈표 2- 4〉 중국인구 평균수명 추이	24
〈표 2- 5〉 중국의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1949~2012	27
〈표 2- 6〉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33
〈표 2- 7〉 일본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여명) 변동 추이	34
〈표 2- 8〉 일본의 인구변천: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36
〈표 3- 1〉 한국의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48
〈표 3- 2〉 한국의 인구부양비 변동 추이와 전망	52
〈표 3- 3〉 중국의 인구 변동 추이	55
〈표 3- 4〉 중국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56
〈표 3- 5〉 중국 연간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 추이	58
〈표 3- 6〉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전망	61
〈표 3- 7〉 일본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62
〈표 3- 8〉 일본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64
〈표 3- 9〉 한·중·일 인구변천 시기와 기간	67
〈표 3-10〉 한·중·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68
〈표 3-11〉 한·중·일 인구고령화 수준 및 속도	68
〈표 4- 1〉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증가율 추이	76
〈표 4- 2〉 중국 인구 및 경제 관련 지표(2001~2010)	86
〈표 4- 3〉 중국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 추이	91
〈표 4- 4〉 중국의 최종 소비와 GDP, 최종 소비율(2001~2010)	94
〈표 4- 5〉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비 전망	129
〈표 5- 1〉 한국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구조(중점추진과제)	142
〈표 5- 2〉 한국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구조(중점추진과제)	144

〈표 5- 3〉 일본의 어린이·자녀양육비전(2010~2014)	163
〈표 5- 4〉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 전개	164
〈표 6- 1〉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시기 구분	176

그림 목차

[그림 2- 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8
[그림 2- 2] 중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2
[그림 2- 3] 중국의 조출생율 변동 추이	23
[그림 2- 4] 중국의 조사망율 변동 추이	24
[그림 2- 5] 중국의 조출생율,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1949~2012	26
[그림 2- 6]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32
[그림 2- 7] 일본의 인구변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추이	35
[그림 2- 8] 한·중·일 합계출산율 변천 비교	38
[그림 2- 9] 한·중·일 남녀 평균수명(0세 기준) 변동 추이	39
[그림 2-10] 한·중·일 인구변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42
[그림 3- 1] 한국의 총인구 및 연령집단별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49
[그림 3- 2] 한국 인구의 연령집단별 변동 추이와 전망	50
[그림 3- 3] 한국의 고령화 수준 추이와 전망	51
[그림 3- 4] 한국 인구부양비 추이와 전망	53
[그림 3- 5] 2011년 중국 인구 피라미드	59
[그림 3- 6] 일본 인구의 변동 추이와 전망	63
[그림 3- 7] 일본 인구의 부양비 변동 추이와 전망	65
[그림 3- 8] 한·중·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67
[그림 3- 9]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 비교(노인인구 비율)	69
[그림 4- 1]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와 핵심노동인구 추이 및 전망	76
[그림 4- 2]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자 및 지출액 추이, 2004~2011	78
[그림 4- 3]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전망	79
[그림 4- 4] 한국의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80
[그림 4- 5]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 2012~2030	81
[그림 4- 6] 한국의 초·중·고 학교 수 추이, 1999~2012	82
[그림 4- 7] 한국의 교원 수 추이, 1999~2012	82

[그림 4- 8] 한국의 학령인구 규모 전망, 2010~2060	83
[그림 4- 9] 한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총원률 전망, 2010~2030	84
[그림 4-10] 인구변동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용원리	90
[그림 4-11] 중국의 출생 성비 변화	102
[그림 4-12] 중국의 1982년 이래 유동인구 변화 추이	104
[그림 4-13] 중국의 도시 및 농촌 인구의 비율 변화	106
[그림 4-14] 중국의 10만명 당 대학교육 수준의 인구	110
[그림 4-15] 일본의 피용자수 및 정규직·비정규직 비중	124
[그림 4-16] 일본의 연령별 남녀 비정규직 비율	125
[그림 4-17] 일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속연수 및 임금 비교	125
[그림 4-18]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와 사회보험료수입	128
[그림 6- 1] 한국의 취업 및 비취업 유배우여성의 평균 자녀수	179

Abstract <<

Population Change and Future Strategies in China, Japan and Korea

A country's population changes with change of the other countries' population; therefore, any country cannot be kept as a close population. In the same manner, one country' socio-economic situation is affected by population change of the other countries'. Thu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future strategies for popul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s the change in population dynamics, its socio-economic impacts and related polic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demographic transition has progressed with strong similarity among three countries. Of course, the timing and speed of the transition diff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because of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Population decline started from 2011 in Japan and will start from 2031 in Korea and from 2030~2035 in China. Population ageing will accelerate in the future for all three countries. Due to such demographic change, all three countries will experience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in burden for social security in the future. Three countries started pro-natality policy after anti-natality policy;

in 2004 for Japan, in 2006 for Korea, and in 2014 for China.

Based on tho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population strategies into future for Korea and for three countries in collaborative manner. The population strategies for Korea include the fertility level, increasing utilization of potential workforce, and encouraging immigration of highly skilled foreign workforce; the last strategy needs to be adopted in the long-ter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wo former strategies. The strategy for three countries include co-research on population change and its impacts with co-establishing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holding population forum at the governmental level, co-establishing the institute for co-ordinating the balance of demand and supply of manpower among three countries, establishing collaborative system for fostering aging-friendly industries, etc.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는 상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ulation)의 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 한국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 정도는 한국인구의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및 일본 인구의 변동과 인구사회학적인 상호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에 따른 인구전략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술적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에 대한 기초자료 및 인구와 경제·사회·문화 간 연관성 규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국가 간 역학관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중국, 일본의 인구 변동에 따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2. 주요 연구결과

한·중·일 3국의 인구동태율(출산율, 사망률)의 변천과정은 변천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우선, 출산율의 경우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시점은 일본(1974년), 한국(1983년), 중국(1992년) 순으로 10여년씩 차이를 두고 있는데, 출산율 감소 속도가 한국과 중국에서 매우 빨라 2001년부터는 일본보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

4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며 최근 중국도 일본이나 한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사망률의 경우 근대화 수준에 따라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평균수명이 높게 나타나, 그 차이가 좁혀졌으며 3국이 어느 정도 근대화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이 일정한 수준에 수렴할 것이다. 출산율과 사망률 변천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인구변천은 시기와 속도만 다를 뿐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조사망률이 조출생율을 상회하여 마이너스 증가가 시작된 시점은 일본의 경우 2007년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28년, 2030~2035년으로 예측된다.

한·중·일 3국의 인구변천 패턴은 유사하나 시기와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인구변천 전기(출산율 증가와 사망률 저하로 인구규모 급증)는 일본 1955년, 중국 1964년, 한국 1972년까지 진행되었다. 인구변천 중기(사망률 저하와 출산율 급감으로 인구규모증가세 둔화)는 일본 44년(1956~2010년), 중국 60년(1965~2025년), 한국 57년(1973~20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율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인구변천 후기는 일본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중국은 2026년, 한국은 2031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천의 후기 진입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5에서 2100년 1/10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한·중·일 3국의 급격한 고령화로 전 세계적으로 나이든 지역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의 인구변동이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전개된 관계로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도 약간씩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이 가장 먼저 인구규모 축소 및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경험하였으며, 뒤이어 한국, 중국에서도 유사한 영향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경제성장 둔화, 노동인력 감소 및 고령화,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따른 젊은층의 부양부담 증가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현재 중국의 인구 및 사회가 지닌

특징(성비불균형, 도시화, 대규모의 유동인구, 소수민족 해체 등)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와 결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나 경로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중·일은 인구변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3국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보다 명확하게는 한국과 일본은 급격한 인구 증가 이후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출산장려 순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중국은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출산억제완화 순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출산억제정책은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한국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1년, 중국은 건국 이후 찬반논의를 거쳐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3국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시기에 인구자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출산장려 혹은 출산억제완화정책으로의 전환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인데, 일본은 1989년 1.57쇼크를 계기로 1994년 엔젤플랜을 도입하였으며 한국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출산억제정책을 완화하여 2014년부터 ‘단독이태(單獨二胎)’ 정책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중·일 3국의 인구동향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과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로 해결할 수 없고, 각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해외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잠재인력 활용도 제고방안도 고려하고, 이들 대내적 정책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외국인력 유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문제와 관련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3국의 인구문제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며 그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국가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일 공동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공동 인구프로젝트 실시, 상설 인구문제 연구 공동기구 설치 등),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정책 포럼 등 구성), 3국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노동력 교류 공조체계 구축, 유학생 교류 체계화 등),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고령친화산업 공동 육성 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인구에 관한 향후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는 각국의 이해정도가 깊은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한·중·일 3국의 인구와 경제·사회·문화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에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심화된 인구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 인구전략을 국내 상황만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미래 경제·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요용어: 한국, 중국, 일본, 인구동향, 인구정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 초반기 인구 구조는 계속해서 예측 불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전 세계 인구는 1950년 25억 명에서 1987년 50억 명, 다시 2011년 70억 명으로 총 인구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인구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공업화, 도시화, 현대화, 그리고 국가 정책 다양화의 영향으로 20세기 후반기 무렵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하강함과 동시에 출산율 또한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세계 인구가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의 절대적인 인구수가 향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증가하는 추세가 이미 대폭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적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인구가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郭志剛, 2012).

인구변동이 가지고 온 새로운 동향은 세계 각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거대한 도전과 기회를 가지고 올 것이다. 가장 명확한 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에서 나타난다. 인구고령화는 일부 국가와 지역에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율 하강을 야기하였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유럽 국가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자본스톡 감소, 사회보장 지출 증가, 재정수지 불균형, 경제성장 둔화 등을 야기하여 급기야는 미래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삼식 외, 2011).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인구는 2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동북아시아의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다. 중국의 인구가 이미 13억 명을 상회하였으며, 일본의 인구도 1억 3천 명에 근접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의 인구는 총 15억 명 수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20%에 이른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은 현재 빠르게 인구변천을 경험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인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 왔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적지 않은 유사점을 공유하여 왔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는 그 규모가 큰 만큼 상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ulation)의 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인구이동은 각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경제적으로도 한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부족이나 인구 고령화 정도 등은 다른 국가의 인력수급이나 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화와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인구 변동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미래 한국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 정도는 한국 인구의 저출

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및 일본 인구의 변동과 인구사회학적인 상호 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에 따른 인구전략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 추이와 미래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변천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술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3국의 인구와 경제·사회·문화 간의 연관성 규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에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인구관련 국가 간 역학관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 간 연동성에 대한 논의의 준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요인을 분석한다. 인구변동요인은 출생, 사망의

로 구분된다. 3국 각각의 출생과 사망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한다. 3국의 인구변동요인의 변화를 통해 공통점과 상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3국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단계를 비교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일 각각의 인구 변동 추이와 향후 변화를 분석한다. 전체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연령집단별 인구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인구감소 시기와 정도 등이 포함된다. 인구고령화와 인구부양비 등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실시한다. 한·중·일 3국의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상이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3국에서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동에 따른 파급효과를 진단한다. 인구 변동의 영향 영역으로 경제성장, 노동력, 사회보장, 교육 등이 포함된다. 3국 간의 인구 변동 영향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상이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 변화를 비교한다. 한·중·일 각국의 인구정책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특히, 인구정책의 변화와 관련한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이유를 조망한다. 이후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 변화의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제6장에서는 향후 인구 변동에 따른 전략을 모색한다. 그 일환으로 한·중·일 3국에서의 인구변동, 인구정책 및 경제성장 간의 연관성을 논의한다. 미래 인구전략은 한국의 관점과 한·중·일 3국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즉,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토대로 한국이 추구하여야 할 전략을 모색한다. 미래에 한 국가의 인구와 경제성장 등은 다른 국가들과의 역학관계를 통해 변화하기 마련

이다. 따라서 각국에서의 미래 인구전략이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하여 한·중·일 3국간의 미래지향적인 공동인구전략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함의를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 고찰, 기존통계 분석, 현지 방문을 통한 전문가와의 면담, 국제공동연구 등의 연구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인구 관련 연구 경향과 주요 논의점들을 각종 문헌들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인구 변동이 경제,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방대하여 모든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관련 자료와 연구들이 미흡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로 향후 인구 변동이 어느 특정한 사회 또는 경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방법론 등에 있어서 매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환언하면, 본 연구에서 인구 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하기에는 연구의 방대함과 더불어 시간과 예산의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에 부분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함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기존통계 분석은 한·중·일 3국의 인구통계(인구센서스, 인구동태통계, 인구추계 등), 국제기구(UN, OECD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료는 과거 시계열 자료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치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추계 자료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국에서 직접 실시한 추계자료를 이용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UN의 인구추계자료를 이용한다. 이들 인구추계 모두 공통

적으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고 있다. 분석에는 인구분석기법(demographic analysis) 등이 적용된다.

연구진은 중국을 방문하여 인구 관련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 대상은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들이다. 주요 면담 내용은 각국의 인구자료 생산현황 및 수집(이용) 가능성, 인구 변동 추이와 주요 특징, 정책 현황, 인구 관련 주요 논쟁, 향후 인구정책 방향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문가와 동국대학교 교수, 중국에서는 북경대학교 교수와 인민대학교 교수,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쿄 케이자이대 교수와 센다이시라유리여자대학교 교수가 각각 참여하였다. 이들 국가별 전문가들 간 연구 방향을 통일시키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과 한국 서울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2장 한·중·일 인구동태 변화

제1절 한국의 인구동태 변화

제2절 중국의 인구동태 변화

제3절 일본의 인구동태 변화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동태 변화 비교

2

한중일 인구동태 변화 <<

제1절 한국의 인구동태 변화

1. 출산 동향

한국 전쟁(1950~1953) 이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출생아수는 연간 1백만 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의 일환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잠식하고 있었던 인구증가율을 낮추기 위하여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채택하면서 출산율은 급격하게 낮아졌다. 즉, 출산율(이하에서는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을 의미함)은 1960년 6.0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2.06까지 낮아졌다. 이후 출산율은 다소 불규칙하나마 1.5~1.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였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에 기인하여 2자녀가 보편화되고 1자녀를 선호하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이래 출산율이 1.7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자 정부는 1996년에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그 영향으로 출산율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처음으로 1.5 미만인 1.45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에는 1.3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2005년에는 1.076으로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후 다소 불규칙하게나마 출산율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1.297로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의 출산율은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3미만에서 지속되어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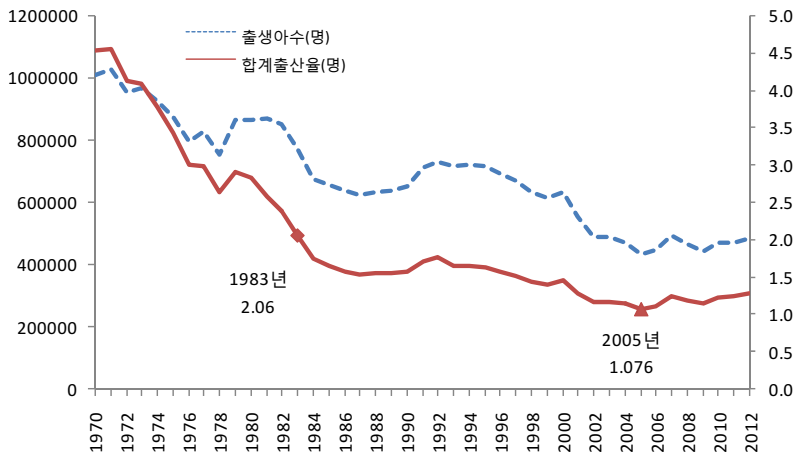
〈표 2-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여성 1명 당 가임기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1960	6.00	1981	2.57	1991	1.710	2001	1.297
1970	4.53	1982	2.39	1992	1.760	2002	1.166
1971	4.54	1983	2.06	1993	1.654	2003	1.180
1972	4.12	1984	1.74	1994	1.656	2004	1.154
1973	4.07	1985	1.66	1995	1.634	2005	1.076
1974	3.77	1986	1.58	1996	1.574	2006	1.123
1975	3.43	1987	1.53	1997	1.520	2007	1.250
1976	3.00	1988	1.55	1998	1.448	2008	1.192
1977	2.99	1989	1.56	1999	1.410	2009	1.149
1978	2.64	1990	1.57	2000	1.467	2010	1.226
1979	2.90					2011	1.244
1980	2.82					2012	1.297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출생

〔그림 2-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출생

2. 사망 동향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영양상태 개선, 보건위생 수준 향상, 선진 의료기술 도입,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생활 습관 개선 및 조기검진 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67세, 여성 65.57세에서 2011년 남성 77.65세, 여성 84.45세로 높아졌다. 특히, 전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2008년 80.08세로 ‘인생 80세 시대’에 진입하였다.

〈표 2-2〉 한국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수명) 변동 추이

(단위: 세)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70	61.93	58.67	65.57	1991	71.72	67.74	75.92
1971	62.33	58.99	66.07	1992	72.21	68.22	76.38
1972	62.72	59.30	66.56	1993	72.81	68.76	76.80
1973	63.09	59.61	67.03	1994	73.17	69.17	77.11
1974	63.46	59.90	67.48	1995	73.53	69.57	77.41
1975	63.82	60.19	67.91	1996	73.96	70.08	77.77
1976	64.17	60.47	68.33	1997	74.39	70.56	78.12
1977	64.51	60.75	68.74	1998	74.82	71.09	78.45
1978	64.84	61.02	69.13	1999	75.55	71.71	79.22
1979	65.17	61.28	69.51	2000	76.02	72.25	79.60
1980	65.69	61.78	70.04	2001	76.53	72.82	80.04
1981	66.19	62.28	70.54	2002	77.02	73.40	80.45
1982	66.67	62.75	71.02	2003	77.44	73.86	80.81
1983	67.14	63.21	71.47	2004	78.04	74.51	81.35
1984	67.81	63.84	72.17	2005	78.63	75.14	81.89
1985	68.44	64.45	72.82	2006	79.18	75.74	82.36
1986	69.11	65.13	73.44	2007	79.56	76.13	82.73
1987	69.76	65.78	74.04	2008	80.08	76.54	83.29
1988	70.30	66.31	74.57	2009	80.55	76.99	83.77
1989	70.82	66.84	75.08	2010	80.79	77.20	84.07
1990	71.28	67.29	75.51	2011	81.20	77.65	84.45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사망

3. 인구 변천

한국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 당 출생아수)은 1970년 31.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8.9까지 낮아졌다. 이후에는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면서 9~10 사이에서 다소 불규칙성이 있으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조사망률(인구 1천명 당 사망자수)은 이미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낮아져, 1970년 8.0에서 2001년 5.0으로 약 30년 동안 3.0정도 감소하는데 그쳤다. 조사망률은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다소 높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970년대 전반만 해도 아주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4.3으로 나타났다.

〈표 2-3〉 한국의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단위 : 천명당)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1970	31.2	8.0	23.2	1984	16.7	5.9	10.8	1998	13.6	5.2	8.4
1971	31.2	7.2	24.0	1985	16.1	5.9	10.2	1999	13.0	5.2	7.8
1972	28.4	6.3	22.1	1986	15.4	5.8	9.6	2000	13.3	5.2	8.1
1973	28.3	7.8	20.5	1987	15.0	5.9	9.1	2001	11.6	5.0	6.6
1974	26.6	7.2	19.4	1988	15.1	5.6	9.5	2002	10.2	5.1	5.1
1975	24.8	7.7	17.1	1989	15.1	5.6	9.5	2003	10.2	5.1	5.1
1976	22.2	7.4	14.8	1990	15.2	5.6	9.6	2004	9.8	5.0	4.8
1977	22.7	6.8	15.9	1991	16.4	5.6	10.8	2005	8.9	5.0	3.9
1978	20.3	6.8	13.5	1992	16.7	5.4	11.3	2006	9.2	5.0	4.2
1979	23.0	6.4	16.6	1993	16.0	5.2	10.8	2007	10.0	5.0	5.0
1980	22.6	7.3	15.4	1994	16.0	5.4	10.6	2008	9.4	5.0	4.4
1981	22.4	6.1	16.3	1995	15.7	5.3	10.4	2009	9.0	5.0	4.0
1982	21.6	6.2	15.3	1996	15.0	5.2	9.8	2010	9.4	5.1	4.3
1983	19.3	6.4	12.9	1997	14.4	5.2	9.2	2011	9.4	5.1	4.3
								2012	9.6	5.3	4.3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

제2절 중국의 인구동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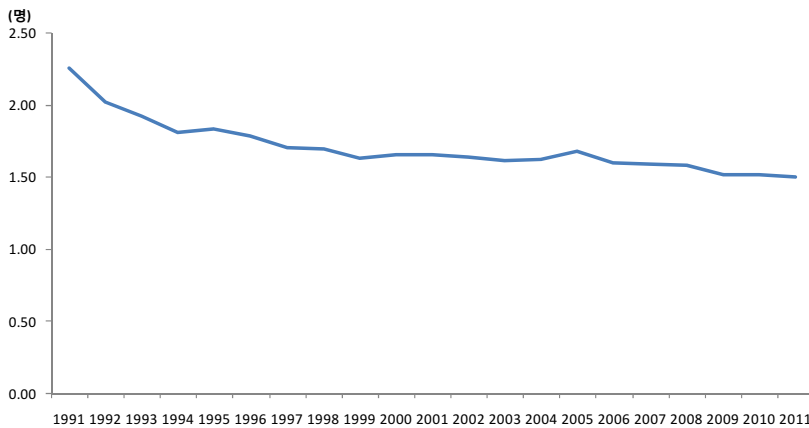
1. 출산 동향

1949년 이후 중국에는 3차례의 베이비붐 시기가 있었다. 제1차 베이비붐 시기는 1951~1954년으로 출생아수가 2,100~2,300만 명에 달하였다. 제2차 베이비붐 시기는 1962~1973년으로 출생아수가 2,500~3,000만 명에 달하였다. 제3차 베이비붐 시기는 1985~1991년으로 출생아수는 2,200~2,550만 명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베이비붐은 높은 출산수준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상의 베이비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베이비붐은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연령구조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최근에는 세 번째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혼인 및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제4차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인구동태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출생아수는 2007~2009년 간 연 평균 10만 명씩 증가하였다. 2010년 출생아수는 2009년보다 하락하였지만, 2011년 출생아수는 2010년에 비해 12만 명이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제4차 베이비붐도 제3차 베이비붐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베이비붐 현상이 연령구조에 의한 결과 즉, 출산적령기 여성(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시기)의 증가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환언하면, 연령구조 관성의 영향이 약해지면 중국은 앞으로 몇 년간 출생아가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이며 안정적으로 제4차 베이비붐 시기를 지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년간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변동하였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92년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

하였고, 2000년에는 1.65로 더욱 낮아졌다. 2011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51로 추정되었다. 2009년 이후에 합계출산율은 1.5에 근접하면서 안정적인 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2] 중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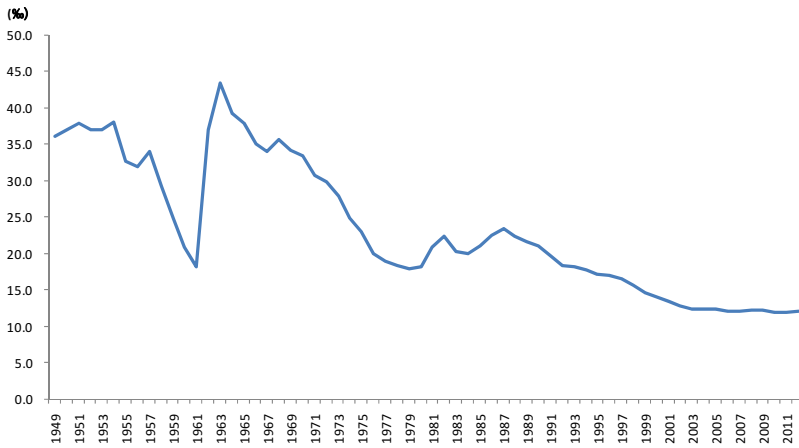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중국 2010년도 인구센서스를 근거로 1%의 인구 샘플링 조사와 인구변동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추정

다음으로 인구 1천명 당 출생아수로 측정하는 조출생률을 살펴본다. 조출생률은 1949년 건국 초기부터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1954년까지 조출생률은 37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¹⁾과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1960년과 1961년에는 하락하였다. 그 반동으로 1963년에는 43까지 급상승하였고 1971년까지 계속 30대의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尹豪, 2013; 伊藤正一, 2013). 그러나 1972년에는 처음으로 조출생률이 30대 밑으로 내려갔고, 1976년에는 20을 밑돌게 되었다. 그 후 한 자녀 정책이 전개된 전후 한 번 하락하였다가 1982년까지 다시 상승하였

1) 1958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 하에 추진 된 경제성장 운동

다. 그러나 이후 조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991년에는 20 이하로 1999년에는 15 이하로 하락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12 정도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 중국의 조출생률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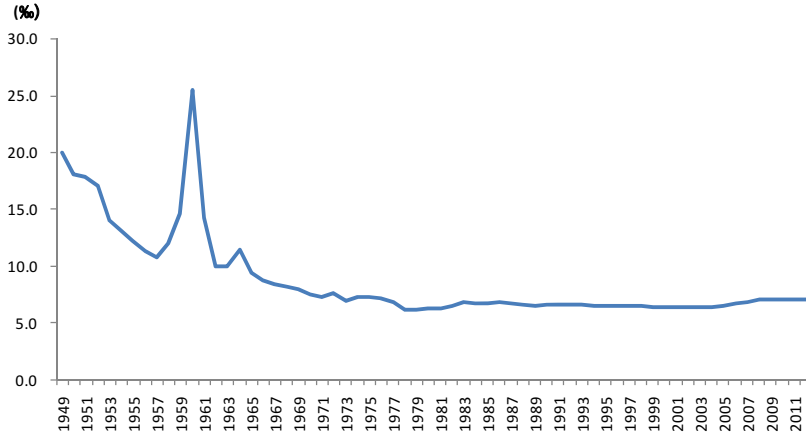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 사망 동향

조사망률(인구 1천명 당 사망자수)은 현저히 감소하여 장기간에 걸쳐 급격한 인구 증가가 계속되었다. 다만, 1960년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 등의 영향으로 조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는 조출생률을 상회하여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伊藤正一, 2013). 이후 조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조사망률은 1965년 10을 밑돌게 되었고, 1970년대 전반에는 7대로 그리고 1977년 이후에는 6대 수준이 지속되었다.

24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그림 2-4] 중국의 조사망율 변동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중국 인구의 평균수명은 건국 초기인 1950년에는 남녀 각각 46.7세와 49.2세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尹豪, 2013). 1981년 남성 66.3세, 여성 69.3세에서 1990년 남성 66.8세, 여성 70.5세, 2000년 남성 69.6세, 여성 73.3세, 그리고 2010년 남성 72.4세, 여성 77.4세로 증가하였다.

〈표 2-4〉 중국인구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년도	전체	남성 (A)	여성 (B)	남녀 간 차이 (A-B)
1981	67.77	66.28	69.27	-2.99
1990	68.55	66.84	70.47	-3.63
2000	71.40	69.63	73.33	-3.70
2010	74.83	72.38	77.37	-4.99

자료: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중국인 평균 기대여명 74.83세
(http://www.stats.gov.cn/tjgb/rkpcgb/qgrkpcgb/t20120921_402838652.htm)

3. 인구 변천

이상 출생률과 사망률을 조합해보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6단계의 중요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중국인구의 증가를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제1단계는 1950~1957년으로 출생률이 비교적 높은 동시에 사망률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조출생률은 모두 30% 이상인 반면, 사망률은 1949년 20%에서 1957년 10.08%까지 하락했다. 인구증가율은 모두 2%이상으로 신중국(新中國) 건국 이래 인구증가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제2단계는 1958~1961년으로 출생률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사망률은 높아져 비정상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난 시기이다. 조출생률은 1958년 29.22%에서 1961년 18.20%으로 하락하였고, 동시에 조사망률은 1958년 11.98%에서 1961년 14.24%로 증가하였다. 1960년은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신중국(新中國) 건국 이래 유일하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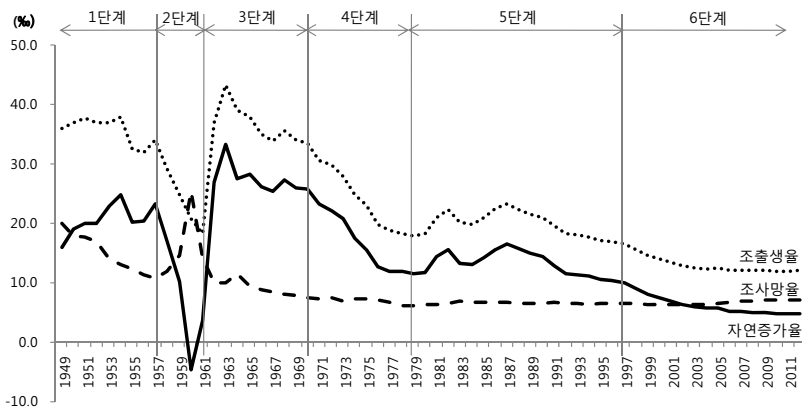
제3단계는 1962~1970년으로 이 시기에 출산율은 다시 높아지고 사망률은 낮아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62년 이후 잠시 둔화되었던 인구성장률이 다시 회복되어 보상형 출산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최고의 인구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1962년에서 1970년까지 매년 조출생률은 3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964년에는 43.37%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 사망률은 정상 수준을 회복하여 빠르게 하락세를 보였다. 조사망률이 1962년 10.08%에서 1970년 7.6%으로 하락하면서 중국 역사상 유래 없는 인구증가가 나타났다.

제4단계는 1971~1979년으로 출생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동시에 사망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인구증가세가 둔화된 시기이다. 이 기간의 사망률은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여 1971년 7.32%에서 1979년 6.21%로 감소하였다. 출생률은 1971년 30.65%에서 1979년 17.82%로 감소하여 9년간 12.83%이 감소하였다.

제5단계는 1980~1997년으로 출생률이 낮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사망률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인구 증가가 완만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출생률은 20%에서 16%까지 하락하였고, 사망률은 기본적으로 6~7%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6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이다. 1998년에는 자연증가율이 처음으로 1% 이하로 하락하는 등 인구성장이 둔화되었다. 출생률은 12% 정도로 안정적이며, 사망률은 2003년 최저 수준인 6.40%을 기록한 후 인구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2년 7.15%까지 상승하였다.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5% 이하로 낮아졌다.

[그림 2-5] 중국의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1949~2012



〈표 2-5〉 중국의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1949~2012

(단위: ‰)

년도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년도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1949	36.00	20.00	16.00	1981	20.91	6.36	14.55
1950	37.00	18.00	19.00	1982	22.28	6.60	15.68
1951	37.80	17.80	20.00	1983	20.19	6.90	13.29
1952	37.00	17.00	20.00	1984	19.90	6.82	13.08
1953	37.00	14.00	23.00	1985	21.04	6.78	14.26
1954	37.97	13.18	24.78	1986	22.43	6.86	15.57
1955	32.60	12.28	20.32	1987	23.33	6.72	16.61
1956	31.90	11.40	20.50	1988	22.37	6.64	15.73
1957	34.03	10.80	23.23	1989	21.58	6.54	15.04
1958	29.22	11.98	17.24	1990	21.06	6.67	14.39
1959	24.78	14.59	10.19	1991	19.68	6.70	12.98
1960	20.86	25.43	-4.57	1992	18.24	6.64	11.60
1961	18.20	14.24	3.78	1993	18.09	6.64	11.45
1962	37.01	10.02	26.99	1994	17.70	6.49	11.21
1963	43.37	10.04	33.33	1995	17.12	6.57	10.55
1964	39.14	11.50	27.64	1996	16.98	6.56	10.42
1965	37.88	9.50	28.38	1997	16.57	6.51	10.06
1966	35.05	8.83	26.22	1998	15.64	6.50	9.14
1967	33.96	8.43	25.53	1999	14.64	6.46	8.18
1968	35.59	8.21	27.38	2000	14.03	6.45	7.58
1969	34.11	8.03	26.08	2001	13.38	6.43	6.95
1970	33.43	7.60	25.83	2002	12.86	6.41	6.45
1971	30.65	7.32	23.33	2003	12.41	6.40	6.01
1972	29.77	7.61	22.16	2004	12.29	6.42	5.87
1973	27.93	7.04	20.89	2005	12.40	6.51	5.89
1974	24.82	7.34	17.48	2006	12.09	6.81	5.28
1975	23.01	7.32	15.69	2007	12.10	6.93	5.17
1976	19.91	7.25	12.66	2008	12.14	7.06	5.08
1977	18.93	6.87	12.06	2009	12.13	7.08	5.05
1978	18.25	6.25	12.00	2010	11.90	7.11	4.79
1979	17.82	6.21	11.61	2011	11.93	7.14	4.79
1980	18.21	6.34	11.87	2012	12.10	7.15	4.95

자료 : 1982년 이전의 데이터는 중국公安부서의 연간 보고서 데이터 인용

1982~1989년 데이터는 1982 및 1990년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근거로 추정

1990~2000년 자료는 2000년 중국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근거로 조정

2001~2012년 자료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역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보고서를 근거로 함.

제3절 일본의 인구동태 변화

1. 출산 동향²⁾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 일본의 출산율 변화는 세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는 출산율이 절반 이상 떨어진 1947~1957년이며, 두 번째 시기는 출산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1957~1973년이며, 세 번째 시기는 1973년 이후 현재까지로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는 시기이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 시기를 출산율이 최저점에 이르는 시기인 2005년까지로 한정하고, 이후 출산율이 다소 회복하는 시기를 네 번째 시기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시기(1947~1957년)에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1940년 4.11에서 1947년 4.54로 높아졌으며, 이후 1949년까지만 하더라도 4.0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비교적 짧은 베이비붐세대(1947~1949년생)³⁾의 기간을 거친 후, 1950년 출산율이 3.65로 처음으로 4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년 후인 1952년에는 처음으로 3미만인 2.98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전후 폐허가 된 지역을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가족들은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되었다. 소자녀 선호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 것은 1948년 발효된 “우생보호법(Eugenic Protection Law)”이다. 동 법은 인공유산에 대한 접근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으며, 기혼부부들이 주요 출산통제방법으로 인공유

2) 일본의 출산율 변화 시기 중 첫 번째~세번째 시기에 대해서는 Retherford and Ogawa(2005)의 Japan's Baby Bust: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East-West Center,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18.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참고자료도 활용하였다. 별도의 인용처가 없는 경우에는 Retherford and Ogawa(2005)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년(1947~1949) 동안 연간 출생아수가 2.7백만 명을 넘어서는 베이비붐이 발생하였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⁴⁾ 결국 출산율은 1947년 4.54명에서 1957년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2.04명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두 번째 시기(1957~1973년)는 출산율이 대체적으로 인구대체수준 전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시기이다. 1957~1973년은 1인당 실질소득이 연간 약 10%씩 상승하는 전례 없는 경기호황기였다. 출산율은 1957년 2.04에서 1973년 2.14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으나, 1966년에는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비정상적으로 1.58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1966년이 적말띠(Year of the Fire Horse, Hinoe-Uma)해로서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를 가지려 하지 않았던 해이기 때문이다(Aoki, 2013).⁵⁾

세 번째 시기(1974~2005년)에는 출산율이 1973년 2.14에서 2005년 1.26으로 떨어져 최저점에 이르렀다.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았다. OPEC에 의한 석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다른 국가보다 특히 일본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상당 부분이 석유와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일쇼크로 인해 일본은 경기불황을 경험하였다. 경기후퇴는 3년 이상 53%에 달하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였다. 당시 기업들에서는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들의 급여를 조정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제 비조합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제 근로자들이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여 불황기 동안 기업들에게 인원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까지 가정 내에서 샅일을 하다가 가정 밖의 노동시

4) 이후 공공과 사적분야에서 가족계획이 유행하게 되면서 피임이 인공유산 대신하여 주요 출산통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5) 일본의 미신에 의하면 적마의 해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불행하다고 여겨져 당시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장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즉, 1973년 이후 젊은 여성들이 유급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결혼연령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출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9년 출산율은 1.57로 떨어져 일본 사회에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1.57 쇼크'로 불린다). 1966년 적합치 해의 출산율인 1.58명보다 더 낮은 수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1989년의 낮은 출산율은 출산율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경제와는 달리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Aoki, 2013).

세 번째 시기의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1973년 이후 일본 사회에서 TFR(합계출산율)은 TMFR(total marital fertility rate)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결혼 내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연령과 비혼율의 증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전체 출산의 2%정도가 혼외 출산으로 출산율에 대한 결혼연령과 비혼율의 영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1973년 이후 출산율 감소의 절반 정도는 결혼을 늦게 하고 덜 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결혼 전 미혼으로 산 기간(SMAM,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⁶⁾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975~2000년 기간 동안 남성의 SMAM은 27.6년에서 30.8년으로 여성은 24.5년에서 28.8년으로 증가하였다. 생애기간 동안의 독신율(synthetic lifetime celibacy rate)⁷⁾은 197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70~2000년 간 독신율은 남성의 경우 2%에서 25%로 여성의 경우 3%에서 19%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

6) 50세 이전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으로 산 기간

7) 50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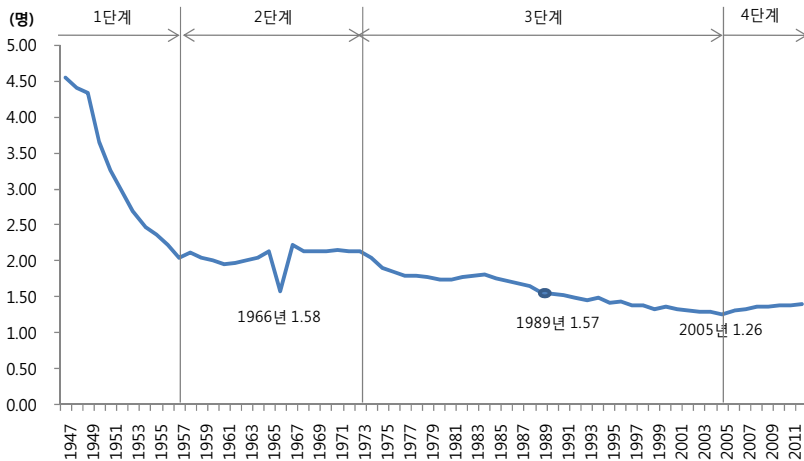
이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사회”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결혼 후 첫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기간도 길어졌다(Retherford 외, 1996: Retherford and Ogawa, 200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1973년 이후 만혼과 결혼 기피 현상의 원인들로는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일하는 미혼 여성의 비율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중매결혼 비율의 감소, 부모와 동거하는 부부의 감소, 혼전 성 관계 증가, ‘싱글에 대한 새로운 개념(결혼에 대한 부담 없이 싱글의 삶을 즐기는 것을 선호)’ 등장, 결혼관계에서의 평등관계 추구 - 이다. 이 중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대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모든 교육 계층에서 출산율이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다. 1966~1970년 중학교 졸업 여성의 출산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1996~2000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여성의 출산율이 동일하고, 대학교 졸업 여성의 출산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교 졸업 여성의 출산율 감소는 1986~1990년 시작되는데, 이 시점은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인 양성평등법(the Equal Opportunity Act, 1986)이 통과된 시기이다. 1985년 이후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 여성의 전문직으로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증가는 대학교 졸업 여성과 다른 집단 여성간의 출산율 차이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시기(2005년~현재)는 합계출산율이 2005년 1.26으로 최저치에 도달한 후 2012년 현재 1.41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기간이다. 2000년대 후반 이래 일본의 출산율 상승에 대한 원인들은 명확하지 않다. 출산율이 상승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데다가 상승폭이 아직 낮은 수준으로 보다 장기간에 걸쳐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기인하여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다수 존재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경기 회복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 및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증가하고,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이 안정(남성, 정규직 증가 등)되어 20~30대의 결혼 및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7). 거품경제 붕괴 후 불황기에는 젊은층이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였으나,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생)들 사이에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 이삼식 외, 200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일본의 출산율 수준은 아직 차세대 인구를 현재와 동일하기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2.1)과 거리가 있다.

[그림 2-6]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표 2-6〉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낳을 평균 자녀수)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1925	5.10	1961	1.96	1981	1.74	2001	1.33
1930	4.70	1962	1.98	1982	1.77	2002	1.32
1940	4.11	1963	2.00	1983	1.80	2003	1.29
1947	4.54	1964	2.05	1984	1.81	2004	1.29
1948	4.40	1965	2.14	1985	1.76	2005	1.26
1949	4.32	1966	1.58	1986	1.72	2006	1.32
1950	3.65	1967	2.23	1987	1.69	2007	1.34
1951	3.26	1968	2.13	1988	1.66	2008	1.37
1952	2.98	1969	2.13	1989	1.57	2009	1.37
1953	2.69	1970	2.13	1990	1.54	2010	1.39
1954	2.48	1971	2.16	1991	1.53	2011	1.39
1955	2.37	1972	2.14	1992	1.50	2012	1.41
1956	2.22	1973	2.14	1993	1.46		
1957	2.04	1974	2.05	1994	1.50		
1958	2.11	1975	1.91	1995	1.42		
1959	2.04	1976	1.85	1996	1.43		
1960	2.00	1977	1.80	1997	1.39		
		1978	1.79	1998	1.38		
		1979	1.77	1999	1.34		
		1980	1.75	2000	1.3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2. 사망 동향

일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아사망률이 낮고 평균수명이 긴 국가이다. 일본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여명)은 1921~1925년 남성 42.06세, 여성 43.20세에서 1947년 50.06세, 여성 53.96세로 증가하였다. 메이지유신시기(1870년대)~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사망률이 감소한 것은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⁸⁾ ① 현대의학의 보급·성공 및 정부 주도하의 공중보건환경 개선, ② 경제성장을 통한 영양 개선 및 삶의 질적

8) JICA Research Institute(2003). Japan's Demographic Experience.

수준 향상, ③ 의무교육의 확대를 통한 위생개념의 보급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전쟁 후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항생제와 DDT 사용의 증가로 인해 사망률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평균수명은 1960년 남성 65세, 여성 70세로 서구 선진국의 최소수준까지 따라잡게 되었다. 평균수명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증가하여 2012년 남성은 79.9세, 여성은 86.4까지 도달하였다(Aoki, 2013)

〈표 2-7〉 일본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여명) 변동 추이

(단위: 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21-25	42.06	43.20	1990	75.92	81.90
1926-30	44.82	46.54	1995	76.38	82.85
1935-36	46.92	49.63	2000	77.72	84.60
1947	50.06	53.96	2005	78.56	85.52
1950-52	59.57	62.97	2006	79.00	85.81
1955	63.60	67.75	2007	79.19	85.99
1960	65.32	70.19	2008	79.29	86.05
1965	67.74	72.92	2009	79.59	86.44
1970	69.31	74.66	2010	79.64	86.39
1975	71.73	76.89	2010	79.55	86.30
1980	73.35	78.76	2011	79.44	85.90
1985	74.78	80.48	2012	79.94	86.4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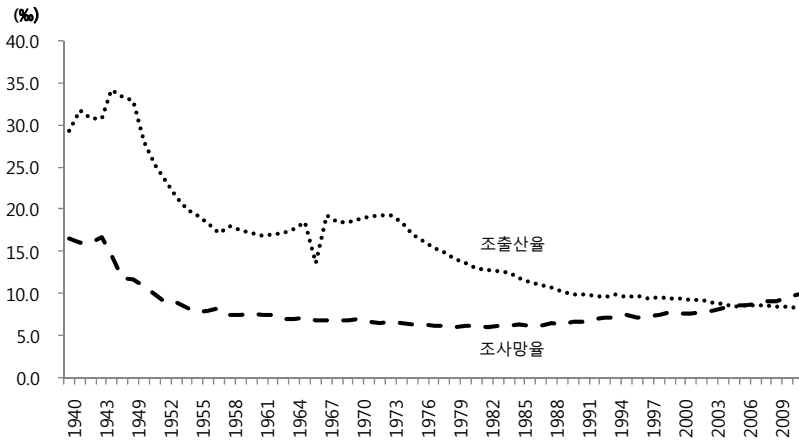
3. 인구 변천

일본의 조출생률은 1949년까지 30 이상에서 높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950년 28.1에서 2012년 8.2까지 낮아졌다. 조사망률은 195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10 수준에서 변동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1979년에 6.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여파로 조사망률은 완만한 폭이나마 계속 높아져 2011년 9.9까지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장기간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출생률이 급격하

게 낮아지는 반면, 인구고령화로 조사망률이 계속 증가했다.

결국 2007년부터 사망률이 출산율을 상회하여 마이너스 자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사망률이 인구고령화의 진척으로 계속 높아짐에 따라 사망률이 출생률을 초과하는 폭은 점차 커질 것이다. 이는 국제이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총인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2-7] 일본의 인구변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추이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표 2-8〉 일본의 인구변천: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단위: ‰)

	조 출생률	조 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 출생률	조 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 출생률	조 사망률	자연 증가율
1899	32.0	21.5	10.5	1936	30.0	17.5	12.5	1976	16.3	6.3	10.0
1900	32.4	20.8	11.6	1937	30.9	17.1	13.8	1977	15.5	6.1	9.4
1901	33.9	20.9	13.0	1938	27.2	17.7	9.5	1978	14.9	6.1	8.8
1902	33.6	21.3	12.3	1939	26.6	17.8	8.8	1979	14.2	6.0	8.2
1903	32.7	20.4	12.3	1940	29.4	16.5	12.9	1980	13.6	6.2	7.4
1904	31.2	20.7	10.5	1941	31.8	16.0	15.8	1981	13.0	6.1	6.9
1905	31.2	21.6	9.6	1942	30.9	16.1	14.8	1982	12.8	6.0	6.8
1906	29.6	20.3	9.3	1943	30.9	16.7	14.2	1983	12.7	6.2	6.5
1907	34.0	21.4	12.6	1947	34.3	14.6	19.7	1984	12.5	6.2	6.3
1908	34.7	21.5	13.2	1948	33.5	11.9	21.6	1985	11.9	6.3	5.6
1909	34.9	22.5	12.4	1949	33.0	11.6	21.4	1986	11.4	6.2	5.2
1910	34.8	21.6	13.2	1950	28.1	10.9	17.2	1987	11.1	6.2	4.9
1911	35.1	20.9	14.2	1951	25.3	9.9	15.4	1988	10.8	6.5	4.3
1912	34.4	20.5	13.9	1952	23.4	8.9	14.5	1989	10.2	6.4	3.8
1913	34.3	20.0	14.3	1953	21.5	8.9	12.6	1990	10.0	6.7	3.3
1914	34.8	21.2	13.6	1954	20.0	8.2	11.8	1991	9.9	6.7	3.2
1915	34.1	20.7	13.4	1955	19.4	7.8	11.6	1992	9.8	6.9	2.9
1916	33.7	22.2	11.5	1956	18.4	8.0	10.4	1993	9.6	7.1	2.5
1917	33.5	22.2	11.3	1957	17.2	8.3	8.9	1994	10.0	7.1	2.9
1918	32.7	27.3	5.4	1958	18.0	7.4	10.6	1995	9.6	7.4	2.2
1919	32.3	23.3	9.0	1959	17.5	7.4	10.1	1996	9.7	7.2	2.5
1920	36.2	25.4	10.8	1960	17.2	7.6	9.6	1997	9.5	7.3	2.2
1921	35.1	22.7	12.4	1961	16.9	7.4	9.5	1998	9.6	7.5	2.1
1922	34.3	22.4	11.9	1962	17.0	7.5	9.5	1999	9.4	7.8	1.6
1923	35.2	22.9	12.3	1963	17.3	7.0	10.3	2000	9.5	7.7	1.8
1924	33.9	21.3	12.6	1964	17.7	6.9	10.8	2001	9.3	7.7	1.6
1925	34.9	20.3	14.6	1965	18.6	7.1	11.5	2002	9.2	7.8	1.4
1926	34.6	19.1	15.5	1966	13.7	6.8	6.9	2003	8.9	8.0	0.9
1927	33.4	19.7	13.7	1967	19.4	6.8	12.6	2004	8.8	8.2	0.6
1928	34.1	19.8	14.3	1968	18.6	6.8	11.8	2005	8.4	8.6	-0.2
1929	32.7	19.9	12.8	1969	18.5	6.8	11.7	2006	8.7	8.6	0.1
1930	32.4	18.2	14.2	1970	18.8	6.9	11.9	2007	8.6	8.8	-0.2
1931	32.1	19.0	13.1	1971	19.2	6.6	12.6	2008	8.7	9.1	-0.4
1932	32.9	17.7	15.2	1972	19.3	6.5	12.8	2009	8.5	9.1	-0.6
1933	31.5	17.7	13.8	1973	19.4	6.6	12.8	2010	8.5	9.5	-1.0
1934	29.9	18.1	11.8	1974	18.6	6.5	12.1	2011	8.3	9.9	-1.6
1935	31.6	16.8	14.8	1975	17.1	6.3	10.8	2012	8.2	-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동태 변화 비교

인구변천은 특정 국가가 농촌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및 도시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의미한다(Coale, 1973). 근대화가 인구변천의 과정, 즉 출생률과 사망률 감소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인구동태요인 변화는 근대화 시기와 과정을 반영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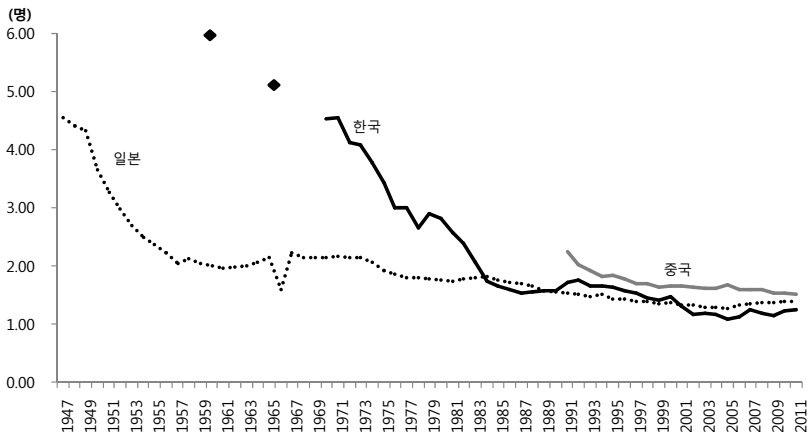
한·중·일 3국의 인구동태율 즉, 출산율과 사망률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변천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근대화가 진행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25년 5.10에서 1947년 4.54, 1950년 3.65, 1957년 2.04로 감소하였다. 이후 1973년 2.14까지 인구대체수준 내외에서 안정되었으나, 1974년 2.05로 낮아진 이래 인구대체수준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1.5 미만에서 변동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70년 4.53으로 낮아졌으며, 1983년 2.06으로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진 이래 1996년까지 1.7 내외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출산율이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1년 이래 1.3 미만에서 변동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 변화 패턴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출산율이 1947년 4.5에서 급락한 후 1957년(2.04)에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지기까지 10년이 소요되었으며,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4.5에서 급락하여 1983년에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지기까지 13년이 소요되었다. 즉, 일본과 한국의 경우 시기는 거의 20년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수준(4.5)에서 유사한 기간(10여년)에 걸쳐 출산율이 급락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게 '제1차 출산율 급락' 이후 안정적인 변화 시기를 경험하였다. 즉, 일본은 1958~1973년 사이 약 15년 동안 2.1 내외에서 안정적인 변동 시기를 거쳤으며, 한국은

1984~1996년 사이 약 12년 동안 1.7 내외에서 안정적인 변화 시기를 거쳤다. 안정화 시기에도 일본이 한국보다 약 20년 앞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국가 모두 안정화시기를 거친 후 '제2차 출산율 감소' 시기를 겪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율 변천을 약 20년 뒤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 변천 속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92년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최근에는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년간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변동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이 한국보다 더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출산율도 보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림 2-8] 한·중·일 합계출산율 변천 비교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출생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10년도 중국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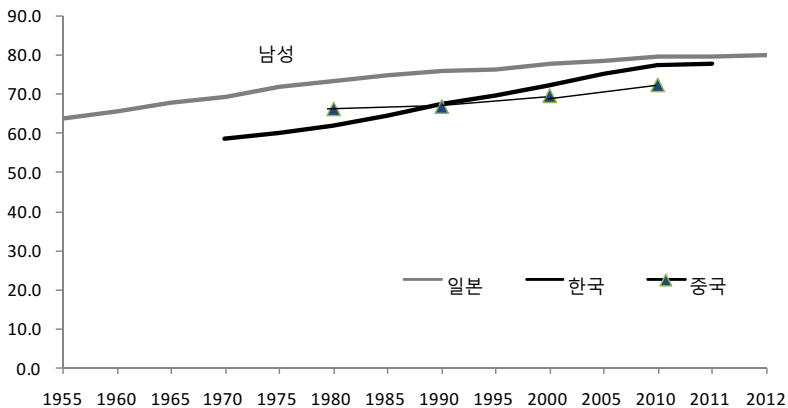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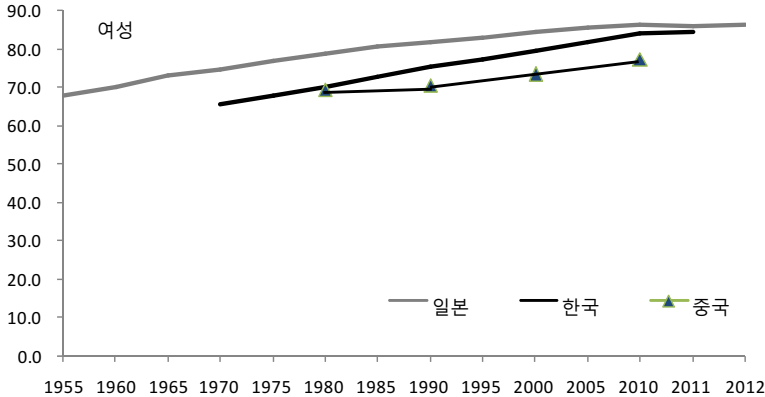
사망률을 결정하는 요인들 즉, 경제 발전, 보건위생수준 개선, 의료기술 발달, 영양상태 향상, 생활습관 개선 등은 근대화 요인으로 볼릴 수 있다. 즉, 국가의 근대화 수준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화론에 입각하면, 일본, 한국 및 중국 순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였으나 급격하게 줄어들어 2011년에는 1.79세로 미세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09세에서 2011년 1.45세로 더욱 줄어들었다. 일본과 중국의 평균수명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90년 9.1세에서 2010년 7.2세로, 여성의 경우에는 동 기간 11.4세에서 8.9세로 감소하였다.

요컨대, 후발 근대화된 국가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선발 근대화된 국가의 평균수명을 따라 잡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결국, 3국이 어느 정도 근대화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평균수명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2-9] 한·중·일 남녀 평균수명(0세 기준) 변동 추이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출생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한·중·일 3국의 출산과 사망 간의 역학관계는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을 도식화하여 비교해볼 수 있다. 인구변천이 먼저 진행된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의 기간 중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다(Sodei and Kudo, 1996). 이 당시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은 1,000명당 30이었고 조사망률(crude death rate, CDR)은 1,000명당 20으로 나타났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출생률은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갑자기 상승하여 1947년에 조출생률이 34.3을 기록하였다. 사망률은 2차 세계대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2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해 왔다. 즉,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4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은 낮은 인구성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일본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195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조출생률과 조사망률간의 차이는 20세기 중반까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나, 20세기 후반기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 21세기 초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급기야 2007년부터는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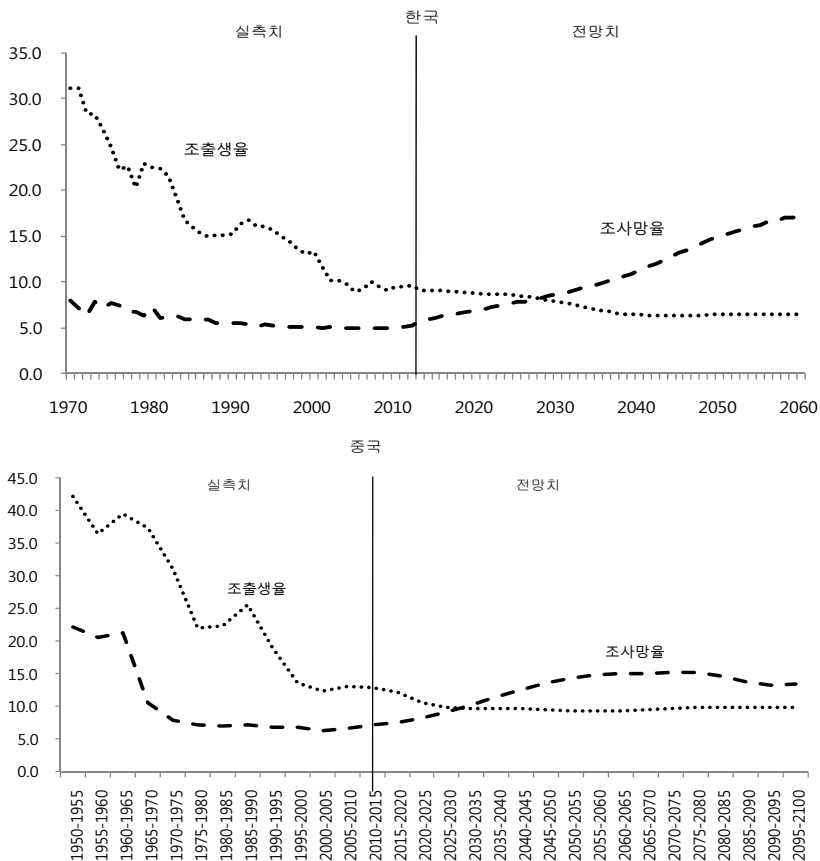
한국의 조출생률은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던 1971년 31.2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사망률은 그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간의 차이(자연증가율)는 1971년 24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조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조사망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간의 차이는 더욱 좁혀졌다. 2012년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간의 차이는 4.3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이가 계속될 경우 조만간에 일본과 같이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상회하기 시작할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8년에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상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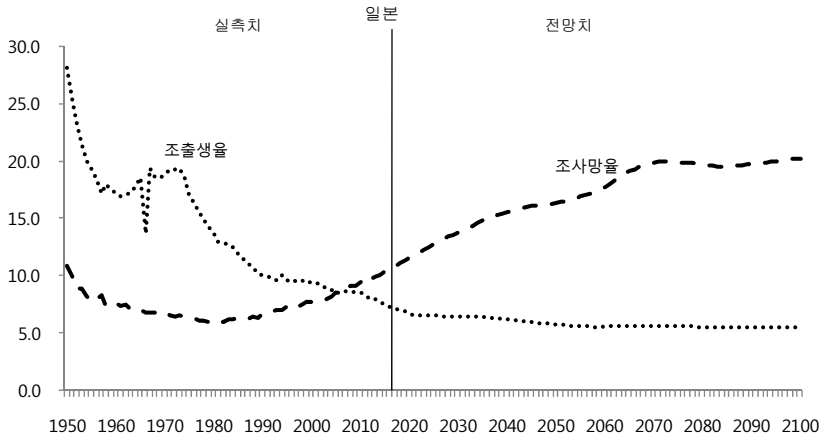
중국은 1949년 건국 초기부터 계속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였다. 반면 사망률은 현저히 감소해서 장기간에 걸쳐 급격한 인구 증가가 계속되었다. 사망률의 감소 속도가 출생률의 감소 속도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조출생률은 1963년 43을 정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반면, 조사망률은 1950년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중국은 1979년에 전국적으로 '한자녀정책'이라는 중국식가족계획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통제하게 되었다. 1969년에 34.1의 수준을 보였던 조출생률이 10년 후인 1979년에 17.8을 나타나게 되었다. 보통 선진국에서 출생률이 반으로 떨어지는데 50~100년이 걸렸던 것이 중국에서는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Hong, 1996). 결과적으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간의 차이(자연증가율)는 1963년에 33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약 5로 줄어들었다. 중국 역시 조만간에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자연적 인구증가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도 일본의 패턴을 쫓아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다는 중국이 인구변천의 후발국가로 더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으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간 차이는 한국의 경우 4.3이며, 중국의 경우 5.0으로 근소한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중국에서도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상회하는 역전현상이 2030~2035년경에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모두 한국의 그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림 2-10] 한·중·일 인구변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태. 장기인구추계.
중국 UN(2013).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일본 후생노동성.



제3장 한·중·일 인구의 현재와 미래

제1절 한국의 인구 변동

제2절 중국의 인구 변동

제3절 일본의 인구 변동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변동 비교

3

한중일 인구의 현재와 미래 <<

제1절 한국의 인구 변동

1. 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한국의 총인구는 1950년 19.2백만 명에서 2012년 50백만 명으로 지난 약 60년 동안 2.5배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폭은 시대마다 상이하다. 한국전쟁 이후 1953~1963년 기간에는 제1차 베이비붐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어서 1968~1974년 기간 동안 제2차 베이비붐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총인구는 1955년 21.2백만 명에서 1975년 35.3백만 명으로 약 14.1백만 명(66.7% 또는 연평균 2.6%)이 증가하였다. 이후 총인구는 1975년 35.3백만 명에서 1995년 45.1백만 명으로 9.8백만 명(27.8%, 연평균 1.23%)이 증가하였다. 1955~1975년 기간에 비해 1975~1995년 기간에 총인구 증가율은 절반 수준 미만으로 낮아졌다. 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이미 도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1996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존속되었기 때문이다. 총인구는 1995년 45.1백만 명에서 2012년 50.0백만 명으로 4.9백만 명(10.9% 또는 연평균 0.61%)이 증가하였다. 1995~2012년 기간 동안 인구증가율은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2001년부터 1.3이하의 초저출산현상(2005년에는 1.08로 최저점 기록)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저출산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0년 52백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2년 기준으로 약 2백만 명이 추가적으로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44백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표 3-1〉 한국의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천명, %)

	규모(천명)				구성비(%)			
	총인구	유소년 인구 (0~14세)	생산가능 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계	유소년 인구 (0~14세)	생산가능 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1950	19,211	8,163	10,497	551	100.0	42.5	54.6	2.9
1955	21,169	8,528	11,923	718	100.0	40.3	56.3	3.4
1960	25,012	10,588	13,698	726	100.0	42.3	54.8	2.9
1965	28,705	12,578	15,246	881	100.0	43.8	53.1	3.1
1970	32,241	13,709	17,540	991	100.0	42.5	54.4	3.1
1975	35,281	13,614	20,449	1,217	100.0	38.6	58.0	3.5
1980	38,124	12,951	23,717	1,456	100.0	34.0	62.2	3.8
1985	40,806	12,305	26,759	1,742	100.0	30.2	65.6	4.3
1990	42,869	10,974	29,701	2,195	100.0	25.6	69.3	5.1
1995	45,093	10,537	31,900	2,657	100.0	23.4	70.7	5.9
2000	47,008	9,911	33,702	3,395	100.0	21.1	71.7	7.2
2005	48,138	9,241	34,530	4,367	100.0	19.2	71.7	9.1
2010	49,410	7,975	35,983	5,452	100.0	16.1	72.8	11.0
2015	50,617	7,040	36,953	6,624	100.0	13.9	73.0	13.1
2020	51,435	6,788	36,563	8,084	100.0	13.2	71.1	15.7
2025	51,972	6,739	34,902	10,331	100.0	13.0	67.2	19.9
2030	52,160	6,575	32,893	12,691	100.0	12.6	63.1	24.3
2035	51,888	6,247	30,890	14,751	100.0	12.0	59.5	28.4
2040	51,091	5,718	28,873	16,501	100.0	11.2	56.5	32.3
2045	49,810	5,171	27,171	17,468	100.0	10.4	54.6	35.1
2050	48,121	4,783	25,347	17,991	100.0	9.9	52.7	37.4
2055	46,125	4,594	23,817	17,713	100.0	10.0	51.6	38.4
2060	43,959	4,473	21,865	17,622	100.0	10.2	49.7	40.1

자료: 1) 1950년과 1955년은 UN(2013),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2) 1960년부터 자료는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태, 장기인구추계(201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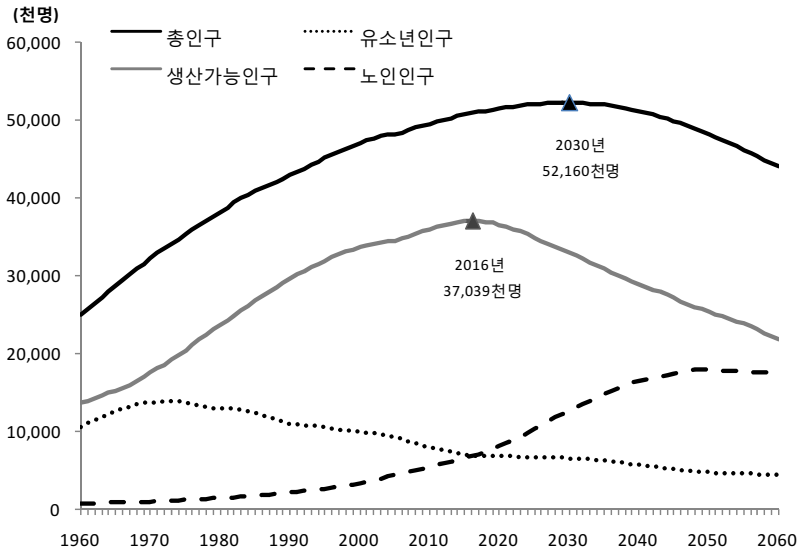
유소년인구(0~14세)는 1960년 10.6백만 명에서 1972년 13.9백만 명까지 증가한 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힘입어 2010년 8.0백만 명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향후에도 유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

년에는 4.5백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60년 13.7백만 명에서 2010년 36.0백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016년 37.0백만 명까지 증가하여 정점을 이를 전망이다. 이후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21.9백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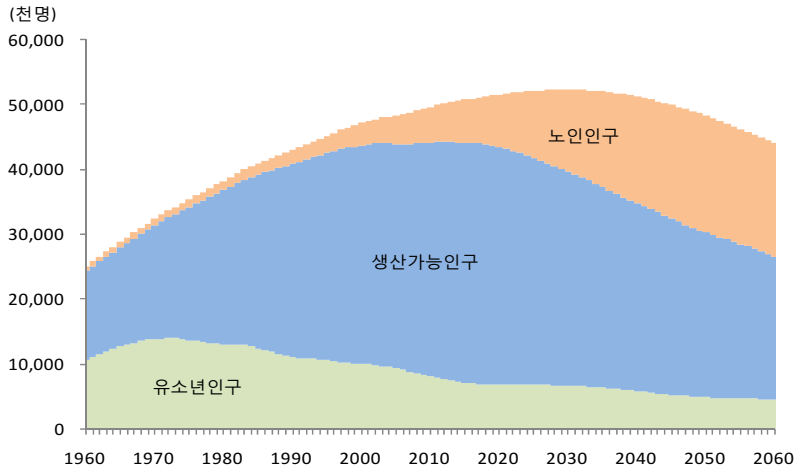
노인인구(65세 이상)는 1960년 726천 명에서 2010년에는 5.5백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노년층 진입으로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9년에 18.0백만 명으로 정점을 이를 전망이다. 이후 저출산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 역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17.6백만 명이 될 전망이다.

[그림 3-1] 한국의 총인구 및 연령집단별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그림 3-2] 한국 인구의 연령집단별 변동 추이와 전망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2. 인구구조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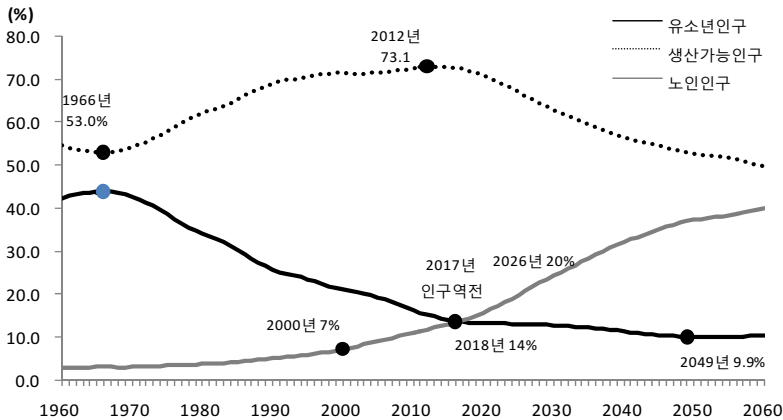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령집단의 변동에 따라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1960년 42.3%에서 1966년 43.9%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출산율 하락과 함께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16.1%로 나타났다. 최근의 낮은 출산율이 2045년까지 1.42로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향후 유소년인구 비중은 2052년 9.9%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2050년부터 노인인구 감소에 힘입어 2050년부터 다시 높아져 2060년 10.2%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1960년 54.8%에서 1966년 53.0%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유소년인구 감소에 힘입어 2012년 73.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저출산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까지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데다가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인하여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0년 49.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비중(고령화수준)은 1960년에 2.9%에서 2010년 11.0%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노인인구 비중이 2000년에 7%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로 높아져 고령사회에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17년부터는 노인인구 비중이 유소년인구 비중을 상회하여 ‘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림 3-3] 한국의 고령화 수준 추이와 전망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인구부양비는 크게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총부양비로 구분된다. 유소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여야 할 유소년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여야 할 노인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여야 할

피부양인구의 수(유소년인구+노인인구)를 의미한다.

1960년 이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생산가능연령층으로의 진입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유소년부양비는 1960년 77.3에서 2010년 22.2로 1/3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유소년부양비는 2019년 18.4까지 감소할 것이며, 이후에는 그 폭은 작으나 증가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20.5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6년부터 부양인구 즉, 생산가능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년부양비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률 저하에 따른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에 힘입어 빠르게 높아졌다.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15.2로 높아졌으며, 향후에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80.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노년부양비 상승은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추이에 따라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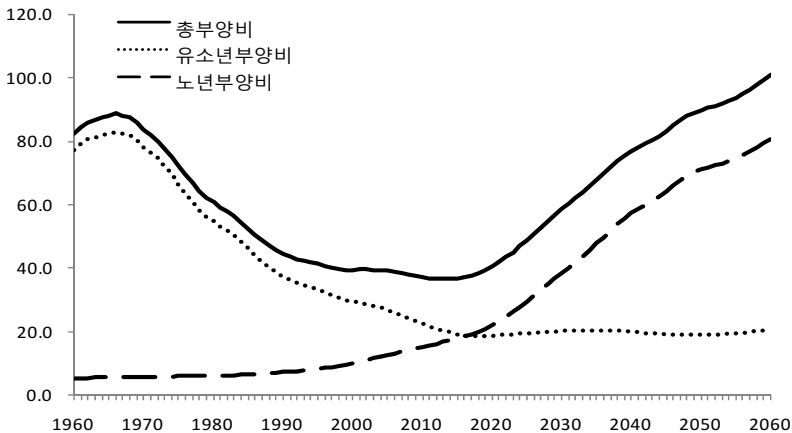
〈표 3-2〉 한국의 인구부양비 변동 추이와 전망

연도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연도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1960	82.6	77.3	5.3	2010	37.3	22.2	15.2
1965	88.3	82.5	5.8	2015	37.0	19.0	17.9
1970	83.8	78.2	5.7	2020	40.7	18.6	22.1
1975	72.5	66.6	6.0	2025	48.9	19.3	29.6
1980	60.7	54.6	6.1	2030	58.6	20.0	38.6
1985	52.5	46.0	6.5	2035	68.0	20.2	47.8
1990	44.3	36.9	7.4	2040	77.0	19.8	57.2
1995	41.4	33.0	8.3	2045	83.3	19.0	64.3
2000	39.5	29.4	10.1	2050	89.8	18.9	71.0
2005	39.4	26.8	12.6	2055	93.7	19.3	74.4
				2060	101.0	20.5	80.6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개념인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를 부양하여야 할 부담을 의미한다. 출산율이 높은 시기에는 유소년부양비가 크고, 출산율이 낮고 인구고령화 수준이 높아지면 노인부양비가 커지게 된다. 즉, 과거부터 2012년에 이를 때까지 총부양비 중 유소년부양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후 인구고령화 수준이 아직 낮은 시기에 저출산현상 지속으로 인한 유소년부양비 감소는 총부양비를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총부양비는 2012년을 저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경부터는 노년부양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부양비도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의미한다.

[그림 3-4] 한국 인구부양비 추이와 전망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제2절 중국의 인구 변동

1. 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자 과거 60년간 인구 증가도 가장 많은 국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당시 중국 인구는 54,145만 명이었으며, 1953년 제1차 인구센서스 당시 총인구는 약 6억 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 전후 3년간의 자연재해로 심각한 기아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1958년부터 시작된 대약진정책(大躍進運動, 1958~1960)⁹⁾의 실패, 자연 재해 등의 영향으로 인구,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와 유아 상당수가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 인구는 1959년 67,207만 명에서 2년 연속 감소하여 1961년에는 65,859만 명으로 나타났다(伊藤正一, 2013) 이후 대약진정책과 자연재해로 억제되었던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1962~1973년 간 인구증가율은 연 2%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1974년에는 처음으로 인구증가율이 2%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그 후에도 인구 증가율은 점차 하락하여 1998년에는 1%, 2004년부터는 0.5%대로 낮아졌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2013년 발표한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중국의 총 인구는 135,404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시인구는 71,1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6%를 차지했다. 한 해 동안 태어난 인구는 1,635만 명으로 조출생률은 12.1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망자수는 966만 명으로 조사망률은 7.15%를 나타냈으며, 결과적으로 자연증가율은 4.95%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근래에 와서 출생률과 자연

9) 1958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 하에 추진 된 경제성장 운동

증가율이 하락하여 매년 인구 증가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규모는 2012년 669만 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표 3-3〉 중국의 인구 변동 추이

(단위: 만명)

연도	자료	총인구
1953년	제1회 인구센서스(人口普查)	59,435
1964년	제2회 인구센서스(人口普查)	69,458
1982년	제3회 인구센서스(人口普查)	100,818
1990년	제4회 인구센서스(人口普查)	113,368
2000년	제5회 인구센서스(人口普查)	126,583
2010년	제6회 인구센서스(人口普查)	133,972
2012년 말	201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 보고서	135,404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각년도 인구센서스(人口普查)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1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201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중국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지만, 20세기 이후부터는 인구 변동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구 증가 속도가 하락하고 증가하는 인구 규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둘째,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률은 2003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셋째, 노동인구가 2012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인구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절반 이상의 인구가 도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섯째,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유동인구가 총 2.3억 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족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2010년 가족 당 평균 인구는 3.10명으로 2000년 실시된 제5차 인구조사의 3.44명에 비해 0.3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UN(2013)의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¹⁰⁾ 중국 인구는 2015년 14.0억

10) 참고로 UN의 인구추계에서는 출산율 추이에 대해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함으로써 유소

명에서 2030년 14.5억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13.1억 명에 이를 전망이다. 유소년인구는 2015년 2.5억 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60년에 1.9억 명이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도 2015년 10.1억 명에서 2060년 7.5억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2015년 1.3억 명에서 2060년 3.69억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3-4〉 중국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명)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2015	1,402	255	1,015	132
2020	1,433	261	1,004	168
2025	1,449	251	1,002	196
2030	1,453	231	988	235
2035	1,449	215	951	282
2040	1,435	209	909	317
2045	1,414	207	885	322
2050	1,385	204	849	331
2055	1,350	199	789	363
2060	1,313	192	752	369

자료: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 인구구조 추이와 전망

인구동태요인의 변동으로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중은 1953년 제1차 인구센서스에서 36.3%, 1964년 제2차 인구센서스에서 40.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유소년인구 비중은 출생률 감소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소년인구 비중은 1982년 33.8%에서 2010년 16.6%로 낮아졌으며,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는 16.5%로 나타났다.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은 1953년 59.3%에서 2010년 74.5%까지

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높아졌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2년에는 74.1%로 나타났다. 특히, 15~59세 인구는 9.37억 명(총인구 중 69.2%)으로 전년 대비 345만 명(0.6% 감소)이 하였다. 이는 건국 후 60년 이래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인구보너스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어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은 1953년 4.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2년에는 9.4%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이 안정세를 보이던 시기의 인구와 1950년대 출생률 최고치를 보이던 인구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중국 인구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다.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총인구 약 13억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1억 명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유소년인구는 2.23억 명, 생산가능인구는 10.04억 명, 노인인구는 1.27억 명이었다(国家统计局, 2012). 인구동태요인의 변화에 따라 수십 년 후 중국은 방대한 규모의 고령 인구를 떠안은 ‘노인대국’이 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중국 인구의 평균수명은 2050~2055년 80.5세(UN, 2013)¹¹⁾가 되어 중국도 ‘인생 80년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尹豪, 2013)는 점에서 후기고령인구의 비중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유소년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노인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증가하였다. 유소년부양비는 1953년 61.2에서 1964년 73.1로 높아졌으나 이후 출산율 감소 추이에 따라 2011년 22.1로 낮아졌다. 2012년에는 22.3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이는 가임연령인구 구조에 따른 출산율의 불규칙적인 상승(제4차 베이비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부양비는

11) 남자는 2060~2065년(80.4세), 여자는 2035~2040년(80.0세)에 80세 도달 전망

1953년 7.4에서 2012년 12.7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유소년부양비와 노인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는 1953년 68.6, 1964년 79.5로 높게 나타났다. 이후 출생률 감소 추이의 영향으로 2010년 34.2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로의 전환 및 노인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총부양비는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2년에 35.0으로 높아졌다.

인구고령화 초기에는 유소년부양비가 비교적 낮았을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비 역시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부양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를 ‘인구보너스시기(人口紅利, 인구홍리)’로 부른다. 현재 중국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부양 부담이 비교적 가벼워 경제발전에 유리한 ‘제1차 인구보너스 시기(人口紅利)’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총부양비도 201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표 3-5〉 중국 연간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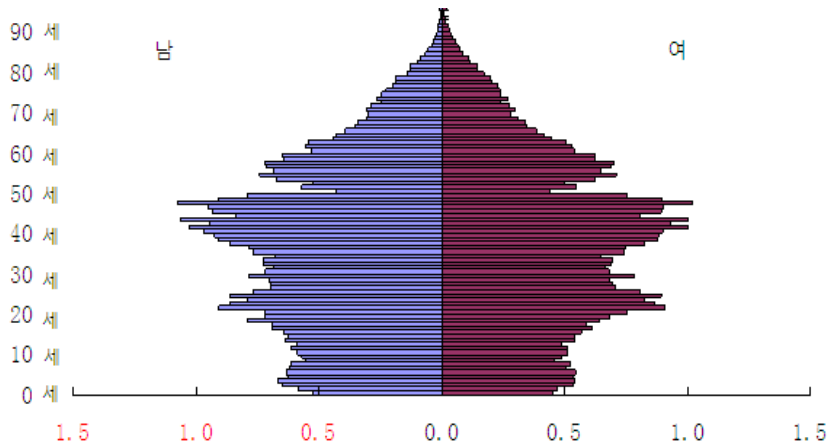
(단위: %)

년도	인구 비중			부양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1953(제1차 조사)	36.3	59.3	4.4	68.6	61.2	7.4
1964(제2차 조사)	40.7	55.7	3.6	79.5	73.1	6.5
1982(제3차 조사)	33.6	61.5	4.9	63.1	55.1	8.0
1990(제4차 조사)	27.7	66.7	5.6	49.9	41.5	8.4
1995	26.6	67.2	6.2	48.8	39.6	9.2
2000(제5차 조사)	22.9	70.1	7.0	42.7	32.7	10.0
2005	20.3	72.0	7.7	38.8	28.1	10.7
2008	19.0	72.7	8.3	37.6	26.1	11.4
2009	18.5	73.0	8.5	37.0	25.3	11.6
2010(제6차 조사)	16.6	74.5	8.9	34.2	22.3	11.9
2011	16.5	74.4	9.1	34.4	22.1	12.3
2012	16.5	74.1	9.4	35.0	22.3	12.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1953, 1964, 1982, 1990, 2000, 2010 자료는 인구센서스(人口普查), 2005년 자료는 1%의 인구표본조사를 근거로 추산, 기타 년도의 자료는 인구변동(人口变动) 조사

인구피라미드는 전체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2011년 중국의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연령구조의 기복이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21~25세, 37~47세, 53~57세 연령층의 비율 변화가 매우 크다. 58세 이후 각 연령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중국이 서로 다른 시대 태어난 인구의 출생률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각 연령 집단의 기본 변화가 서로 다른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노동인구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림 3-5] 2011년 중국 인구 피라미드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11년 인구변동(人口变动) 샘플링 조사 자료를 근거로 계산.

인구피라미드의 변화는 일정한 주기성을 보이는데, 2011년 인구피라미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년층(40~60세)이 시간이 흐르면서 피라미드 상위 부분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이로 인해 피라미드의 상위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피라미드의 아래 부분

은 출생아의 감소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50년대, 1960년대, 1980년대 3차례에 걸쳐 베이비붐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1960년대(3년간의 자연재해), 1970년대, 1990년대 3차례에 걸쳐 출산율의 저하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인구가 계속해서 노인층에 진입하면서 피라미드의 최상단 부분이 불규칙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UN(2013)의 인구 전망치에 의하며,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2015년 18.2%에서 2040년 14.6%까지 낮아지나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세로 전환한 후 2060년에는 다시 약간 감소하여 14.6%가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에도 2015년 72.4%에서 2060년 57.3%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5년 9.5%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60년에는 28.1%가 될 전망이다. 중국 인구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중 7%)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25년경에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그리고 2035년경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에 진입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도 2015년 25.0에서 감소하다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높아져서 2060년에는 26.0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2015년 13.0에서 2060년 49.0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는 주로 노년부양비 증가의 영향을 받아 2015년 38.0에서 2060년 75.0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표 3-6〉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전망

	인구구성비(%)				부양비		
	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2015	100.0	18.2	72.4	9.5	38.0	25.0	13.0
2020	100.0	18.2	70.1	11.7	43.0	26.0	17.0
2025	100.0	17.3	69.2	13.5	45.0	25.0	20.0
2030	100.0	15.9	68.0	16.2	47.0	23.0	24.0
2035	100.0	14.9	65.7	19.5	52.0	23.0	30.0
2040	100.0	14.6	63.4	22.1	58.0	23.0	35.0
2045	100.0	14.7	62.6	22.8	60.0	23.0	36.0
2050	100.0	14.7	61.3	23.9	63.0	24.0	39.0
2055	100.0	14.7	58.4	26.9	71.0	25.0	46.0
2060	100.0	14.6	57.3	28.1	75.0	26.0	49.0

자료: UN(2013).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제3절 일본의 인구 변동

1. 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일본 인구의 변동은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 지난 140년 동안 일본 사회는 근대화의 흐름 속에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과 수차례의 경제 불황 등을 경험하면서도 대체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인구는 근대 이후 급격히 변화하였는데 1872년 34,806천 명이었던 것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0년에 128,057천 명에 이르렀다. 일본 인구는 2005년에 127,768천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전체 인구(127,787천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후 2011년에는 127,799천 명으로, 역시 전년도의 인구보다 258천 명이 적었다. 2011년 3월 11일에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서 18천 명 이상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 된 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인구는 향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추계 결과, 총인구는 2060년 86,737천 명으로 감소하여 1950년 인구 83,200천 명과 유사한 등 1950년대 전반의 인구로 회귀할 전망이다. 이는 약 100년 전의 인구인 동시에 1950년대 후반부터 1973년까지의 ‘고도 경제 성장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유소년인구는 1960년 28,067천 명에서 2010년 16,839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향후에도 감소세가 계속되어 2060년에 7,912천 명이 될 전망이다. 즉, 유소년인구는 100년 간 1/4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960년 60,002천 명에서 1995년 87,261천 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0년에 81,735천 명에 이르렀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2060년에는 2010년에 비해 37,552천 명이나 줄어든 44,183천 명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1960년 5,350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29,484천 명에 이르렀다. 향후에도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60년에는 34,642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표 3-7〉 일본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천명, %)

	인구규모(천명)				구성비(%)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계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인구
1960	93,419	28,067	60,002	5,350	100.0	30.0	64.2	5.7
1965	98,275	25,165	66,928	6,181	100.0	25.6	68.1	6.3
1970	103,720	24,823	71,566	7,332	100.0	23.9	69.0	7.1
1975	111,940	27,233	75,838	8,869	100.0	24.3	67.7	7.9
1980	117,060	27,524	78,884	10,653	100.0	23.5	67.4	9.1
1985	121,049	26,043	82,535	12,472	100.0	21.5	68.2	10.3
1990	123,611	22,544	86,141	14,928	100.0	18.2	69.7	12.1
1995	125,570	20,033	87,261	18,277	100.0	16.0	69.5	14.6
2000	126,926	18,506	86,380	22,041	100.0	14.6	68.1	17.4
2005	127,768	17,585	84,422	25,759	100.0	13.8	66.1	20.2

〈표 3-7〉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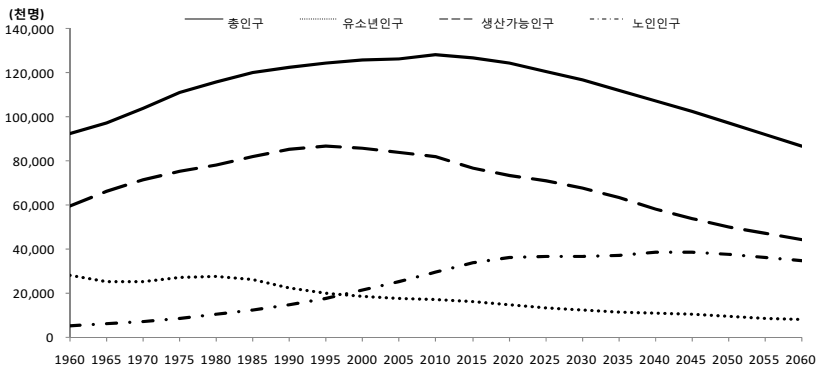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인구규모(천명)				구성비(%)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계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인구
2010	128,057	16,839	81,735	29,484	100.0	13.1	63.8	23.0
2015	126,597	15,827	76,818	33,952	100.0	12.5	60.7	26.8
2020	124,100	14,568	73,408	36,124	100.0	11.7	59.2	29.1
2025	120,659	13,240	70,845	36,573	100.0	11.0	58.7	30.3
2030	116,618	12,039	67,730	36,849	100.0	10.3	58.1	31.6
2035	112,124	11,287	63,430	37,407	100.0	10.1	56.6	33.4
2040	107,276	10,732	57,866	38,678	100.0	10.0	53.9	36.1
2045	102,210	10,116	53,531	38,564	100.0	9.9	52.4	37.7
2050	97,076	9,387	50,013	37,676	100.0	9.7	51.5	38.8
2055	91,933	8,614	47,063	36,257	100.0	9.4	51.2	39.4
2060	86,737	7,912	44,183	34,642	100.0	9.1	50.9	39.9

자료: 1960~2005년 자료는 일본 통계청.

2010~2060년 자료는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그림 3-6] 일본 인구의 변동 추이와 전망



자료: 일본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2. 인구구조 추이와 전망

일본의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30.2%에서 2010년 13.1%까지 낮아졌으며, 향후 2060년에는 9.1%로 더 낮아질 전

망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60년 64.1%에서 1970년 68.8%로 높아졌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0년에 63.8%에 이르렀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60년에는 50.9%에 이를 전망이다.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5.7%에서 2010년 23.0%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현재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 출생)가 65세를 맞이하고 있고 향후 계속해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60년에는 39.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에 7.0%로 일본은 고령화사회에 돌입했다. 1994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유소년부양비는 1960년 47.0에서 2010년에 20.6으로 낮아졌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낮아져 2030년에는 17.8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후에 유소년부양비는 다른 연령층의 변화로 인하여 다소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나 18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1960년 8.9에서 2010년 36.1로 높아졌으며, 향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2060년에 78.4로 나타날 전망이다.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는 1960년 56.0에서 1990년 43.4로 낮아진 이후에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즉, 총부양비는 2010년에 56.7로 증가하였으며, 2060년에는 96.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표 3-8〉 일본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

	연령구성				부양비		
	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1960	100.0	30.2	64.1	5.7	56.0	47.0	8.9
1965	100.0	25.8	68.0	6.3	47.1	37.9	9.2
1970	100.0	24.1	68.8	7.0	45.2	35.0	10.2
1975	100.0	24.3	67.8	7.9	47.5	35.9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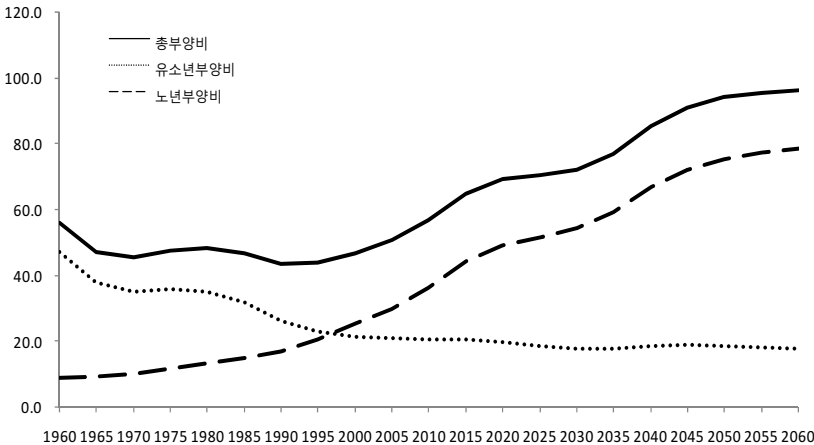
〈표 3-8〉 계속

(단위: %)

	연령구성				부양비		
	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1980	100.0	23.6	67.4	9.0	48.4	35.0	13.4
1985	100.0	21.6	68.2	10.2	46.7	31.7	15.0
1990	100.0	18.3	69.7	11.9	43.4	26.3	17.1
1995	100.0	16.0	69.6	14.4	43.8	23.1	20.7
2000	100.0	14.6	68.2	17.2	46.6	21.4	25.2
2005	100.0	13.8	66.3	19.9	50.7	20.8	29.9
2010	100.0	13.1	63.8	23.0	56.7	20.6	36.1
2015	100.0	12.5	60.7	26.8	64.8	20.6	44.2
2020	100.0	11.7	59.2	29.1	69.1	19.8	49.2
2025	100.0	11.0	58.7	30.3	70.3	18.7	51.6
2030	100.0	10.3	58.1	31.6	72.2	17.8	54.4
2035	100.0	10.1	56.6	33.4	76.8	17.8	59.0
2040	100.0	10.0	53.9	36.1	85.4	18.5	66.8
2045	100.0	9.9	52.4	37.7	90.9	18.9	72.0
2050	100.0	9.7	51.5	38.8	94.1	18.8	75.3
2055	100.0	9.4	51.2	39.4	95.3	18.3	77.0
2060	100.0	9.1	50.9	39.9	96.3	17.9	78.4

자료: 일본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그림 3-7〕 일본 인구의 부양비 변동 추이와 전망



자료: 일본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변동 비교

지금까지 한·중·일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동 추이와 미래 전망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중·일 인구 변동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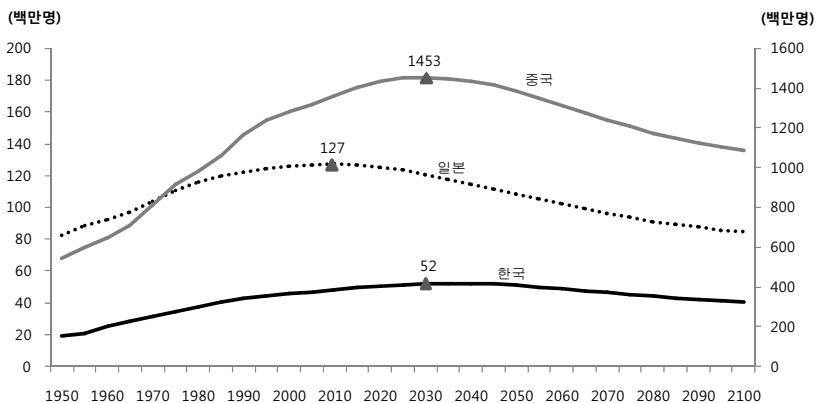
첫째, 한·중·일 간 인구규모는 큰 차이가 있으나 변동 패턴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인구변천의 전기에는 출산율 상승과 사망률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어 인구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구변천의 중기에는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인구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인구변천의 후기에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결국 인구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물론,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인구변천 시기와 속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인구변천의 전기는 1955년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중기는 201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현재 후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구변천의 전기는 1972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는 2030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후기는 2031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변천은 전기의 경우 1964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는 2025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며, 후기는 2026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중기 변천은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그 기간 역시 44년간으로 가장 짧다. 한국의 중기 변천은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시작되었으나 57년간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중기 변천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되었으나 기간은 60년 간으로 한국에 비해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표 3-9〉 한·중·일 인구변천 시기와 기간

	일본	한국	중국
전기	~1955 유소년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	~1972 유소년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	~1964 유소년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
중기	1956~2010(44년간 지속)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1956)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1996)	1973~2030(57년간 지속)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1973)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2017)	1965~2025(60년간 지속)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1965)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2011)
후기	2011~ 총인구 감소 시작	2031~ 총인구 감소 시작	2026~ 총인구 감소 시작

둘째, 첫 번째의 결과로서 한국, 중국 및 일본 모두 인구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인구변천의 후기로 진입하면서 인구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인구의 약 1/4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5, 2100년에는 약 1/10(11.2%)로 줄어든 전망이다. 즉, 한·중·일은 세계적인 ‘인구 중심’ 지역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위치를 잃어버릴 전망이다.

[그림 3-8] 한·중·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자료: 2100년까지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모두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자료를 활용함.

〈표 3-10〉 한·중·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명, %)

	규모		구성비			
	전세계	한·중·일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1950	2,526	645	25.5	0.8	21.5	3.3
2000	6,128	1,452	23.7	0.8	20.9	2.1
2050	9,551	1,544	16.2	0.5	14.5	1.1
2100	10,854	1,211	11.2	0.4	10.0	0.8

자료: 2100년까지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모두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자료를 활용함.

셋째, 게다가 한·중·일 인구 모두 급격하게 고령화될 전망이다. 일본 인구가 먼저 고령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과 중국은 뒤늦게 고령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초저출산 수준이 강세를 보임으로써 인구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60년에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일본 수준과 유사해지거나 다소 초월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 출산율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인구 고령화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나, 인구고령화 수준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표 3-11〉 한·중·일 인구고령화 수준 및 속도

	고령화 수준(노인인구 비율)					고령화 속도(도달기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30%	40%	7%→20% (7→14%, 14→20%)
한국	2000년	2018년	2026년	2037년 (30.1%)	2060년 (40.1%)	26년 (18년, 8년)
중국	2000년	2025년	2035년	2060년 (29.5%)	na	35년 (25년, 10년)
일본	1970년	1994년	2006년	2024년 (30.1%)	2060년 (39.9%)	36년 (24년, 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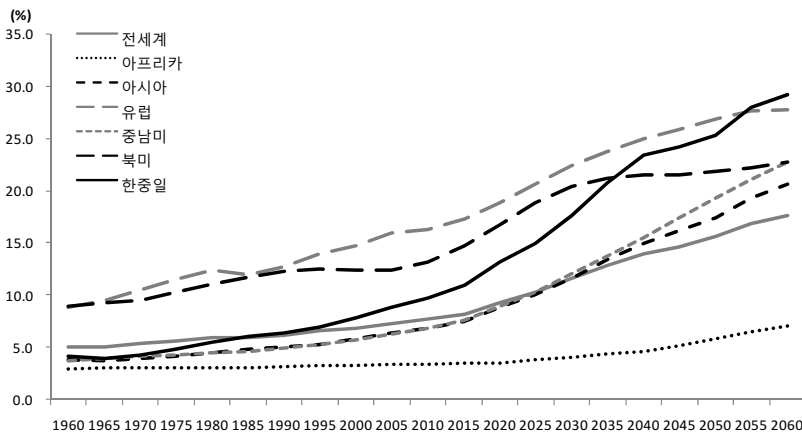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전세계와 중국은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넷째,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진행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빨라 가장 나이든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9.6%로 전 세계의 인구고령화 수준 7.7%에 비해서는 높으나, 유럽(16.3%)과 북미(13.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으로 인구고령화 수준은 2060년 기준으로 29.0%로 높아져, 전 세계(17.6%), 아프리카(7.1%) 및 중남미(22.7%)는 물론 북미(22.7%)와 유럽(27.8%)에 비해서도 높을 전망이다. 이는 미래에 한·중·일 3국의 '인구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3-9]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 비교(노인인구 비율)



	전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1960	5.1	3.0	3.8	8.8	3.7	9.0	4.2	2.9	4.0	5.7
1980	6.0	3.1	4.5	12.4	4.5	11.1	5.4	3.8	5.1	9.0
2000	6.9	3.3	5.8	14.7	5.7	12.4	7.8	7.2	6.9	17.2
2020	9.3	3.6	8.8	18.9	8.9	16.7	13.1	15.7	11.7	29.1
2040	13.9	4.7	14.9	25.0	15.5	21.5	23.2	32.3	22.1	36.1
2060	17.6	7.1	20.6	27.8	22.7	22.7	29.0	40.1	28.1	39.9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일본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그 외 자료는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제4장 한·중·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1절 한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2절 중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일본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변동의 영향 비교

4

한·중·일 인구변동의 << 사회경제적 영향

제1절 한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인구변동의 경제적 영향

가. 경제성장

한국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실제 1970~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약 7.2%에 달한다. 이러한 경제 발전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풍부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한 ‘인구 보너스(population bonus)’의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의 인구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으로 연결되어 경제발전 및 소득향상에 일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부양인구가 적어 경제 활성화가 용이하였던 것이다(이찬영 외, 2011).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저출산현상 특히, 21세기에 들어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으로 인하여 가까운 미래에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이른바 ‘인구오너스(population onus)’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노동투입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 모두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취업자 수와 취업인구의 생산성이 모두 본격적으로 하락하여(장인성, 2010), 경제성장에 대해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결과들이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2010~2060) 결과를 통해 보면 인구오너스 효과의 도래에 대하여 더욱 체감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2028년경에는 연평균 30만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노인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30년 2배 이상, 2060년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2028년 연평균 5%p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수반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es)의 소비이론에 의하면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하고 중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저출산고령화는 민간저축을 하락을 유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인구 증가로 의료, 복지 등 공공지출은 증가하나 저출산으로 조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정부저축(fiscal savings)이 줄어들게 된다(김소영·이종화, 2006). 저축의 감소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세수는 감소하여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실로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용하 외, 2011).

한국의 경우에도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 간 부적인 관계가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의 저출산 추이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의한 저축률 감소로 노동생산성 증가가 지체되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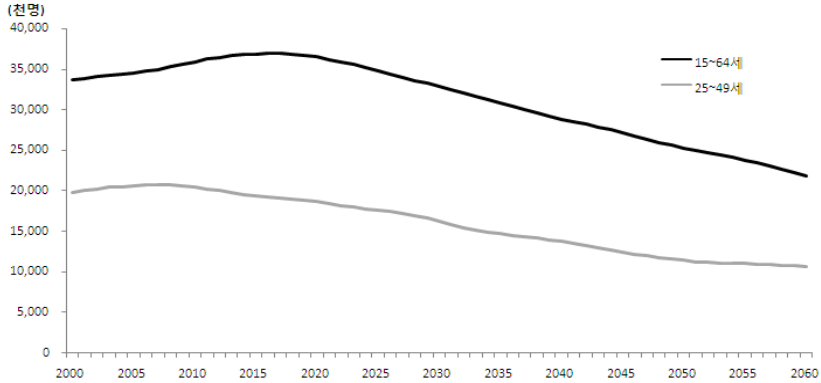
로 인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전영준, 2011). 우선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저축률은 하락할 전망이다. 실제 1980~2010년 기간 동안 인구부양비가 1%p 증가하면 총저축률은 0.32%p 감소하며, 인구부양비를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로 분리하였을 경우 노년부양비의 1%p 증가는 총저축률 2.22% 하락을 유발하며 유소년부양비의 1%p 증가는 총저축률 0.74%p 하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호·문형표, 2011). 2018년까지 노동력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4.1%)에 비해 0.4%p 하락하고, 2019~2030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에 비해 1.08%p 하락할 것이다(이찬영 외, 2011). 순수하게 생산가능인구의 변동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11~2020년 평균 3.6%, 2021~2030년 2.4% 수준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동렬, 2013).

여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한국의 노인세대가 가진 특성이다. 가까운 미래에 노인층으로 진입할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그간의 경제활동에 비해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총인구 대비 노인가구의 증가로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과 함께 소비둔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이는 향후 경제성장에 더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노동력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변화는 노동인력의 절대적 규모 감소, 노동인력의 고령화,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다. 우선 노동인력의 감소와 관련하여 그간 장기간 진행되어온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까운 미래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며, 핵심노동인구(25~49세)는 이미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통계청, 2011).

[그림 4-1]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와 핵심노동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물론 생산가능인구규모를 통해 노동력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으며, 노동력 규모는 인구구조 변화나 고령화와는 상관없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 참여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방하남 외, 2004). 그러나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할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규모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466만 명에서 2020년 2,623만 명으로 연평균 0.6% 증가하지만, 2030년에는 2,578만 명으로 0.2% 감소할 것이다(이진면, 2011).

<표 4-1>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천명, %)

	경제활동인구 규모			연평균 증가율		
	2010	2020	2030	2001-10	2011-20	2021-30
전체	24,661	26,232	25,784	1.1	0.6	-0.2

자료: 이진면(2011). 고용축진형 경제 성장 구조 변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

인구고령화는 노동인력의 고령화를 유발한다. 2000~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00년 40.3세

에서 2013년 44.6세로 4.3세 상승하였다. 203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한 결과, 남녀 모두 40대까지의 청장년층 구성비가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구성비가 증가할 전망이다(이진면, 2011). 통상 노동경제학에서 생산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연령을 40세 초반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인력의 고령화 문제가 생산성을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오호영, 2013).

노동인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의 저성장은 자본생산성을 낮추고 기술혁신에 따른 수익성을 낮춰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령사회에서의 역동성(dynamism)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술진보가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방하남 외, 2004). 실제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찬영 외, 2011). 다만 향후 고령층의 교육수준 상승을 고려할 때 노동생산성 하락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인력부족 및 노동인력 고령화 현상은 과거 인구요인 변동의 결과로 불가피한 미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참가율 및 생산성 증가율이 증가하게 되면 인구고령화가 다음 세대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음(방하남 외, 2004)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인구변동의 사회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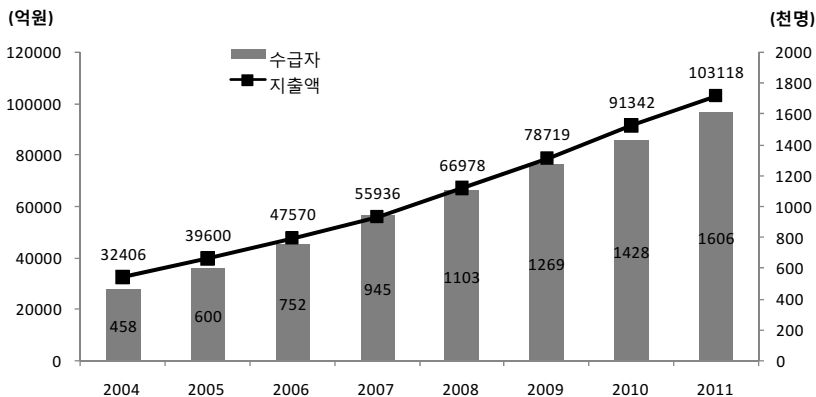
가. 사회보장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

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의 운영과 인구구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수급자는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지불계층이 줄어들어 재정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부담·고급여의 사회보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0년대 초반 40여만 명에서 2008년 10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161만 명 정도이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28%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급자의 증가로 국민연금 지출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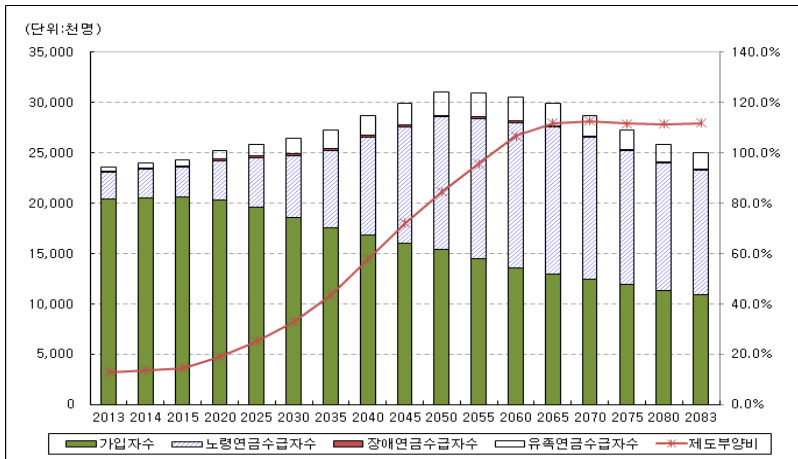
[그림 4-2]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자 및 지출액 추이, 2004~2011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연금관리공단(2013). 「국민연금통계연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201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부모 부양의식도 약화되어 노후소득원으로서 공적연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¹²⁾.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3)에서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 명에서 2015년 2,062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83년에는 1,100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 명에서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1,460만 명까지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2060년에는 78.6%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그림 4-3]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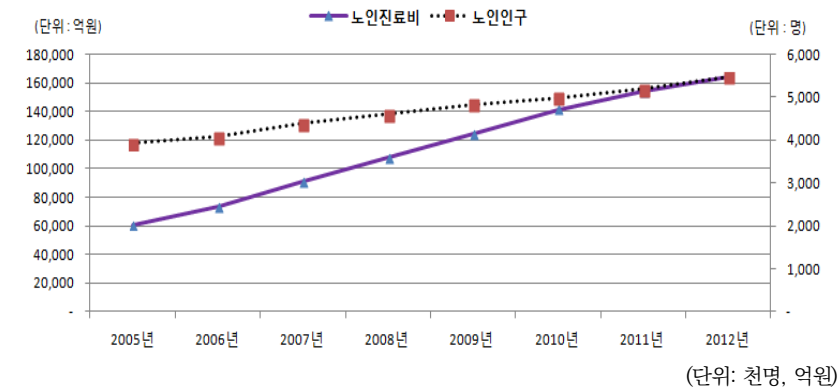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2013).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2013.03.29. 보도자료

12) 보건복지부(2013).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2013.10.08. 보도자료

한편 인구고령화는 질병 유형 변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신의철 외, 2011). 노인인구는 젊은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급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선우덕 외, 2004), 여기에 더해 의료기술 고도화, 양질의 의료 소비 욕구 증대로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정우진, 2005).

실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3%(392만 명)에서 2012년 11.0%(547만 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4-4] 한국의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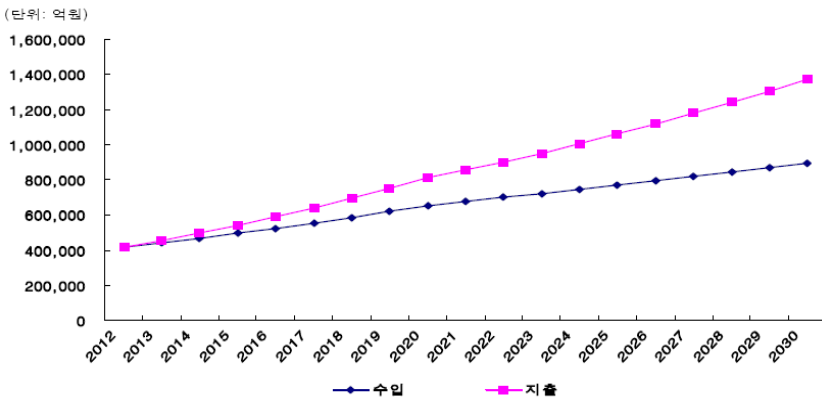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인구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65세 이상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184	5,468
총 진료비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65세 이상	60,731	73,504	91,190	107,371	124,236	141,350	153,893	164,49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보험료와 수가 인상 없이 현 상황 그대로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건강보험 수입은 65조 2천억원 지출은 81조 1천억원이며, 2030년에는 수입 89조3천억원, 지출 137조원으로 추계되었다(박일수이동헌, 2010). 평균 물가인상 수준(2.5~3%)으로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매년 약 3~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5]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 2012~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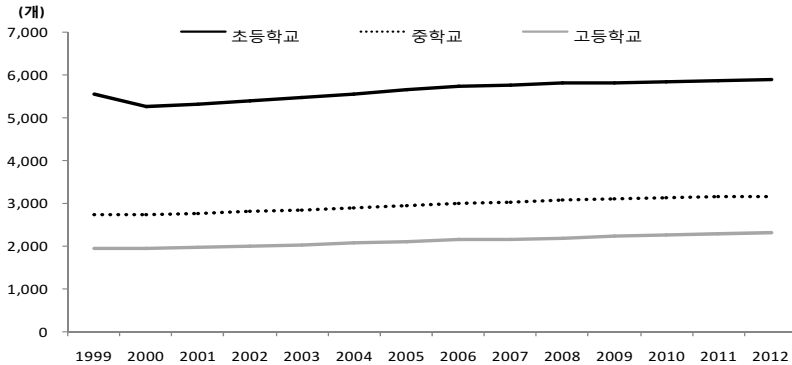


자료: 박일수이동헌(2010).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나. 교육

1980년대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현상은 학령인구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의 누적된 효과로서 학생 수 감소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강동욱, 2011). 이와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육 인적·물적 인프라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먼저 학교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5,267개에서 2012년 5,895개(628개 증가), 동 기간 중학교는 2,741개에서 3,162개(421개 증가), 고등학교는 1,943개에서 2,303개(360개 증가)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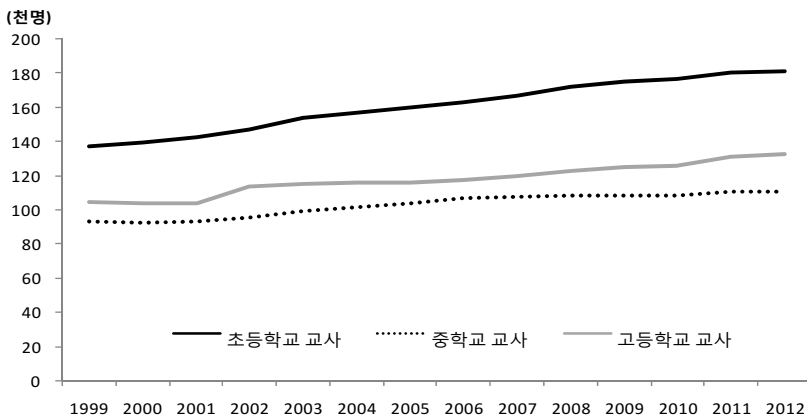
[그림 4-6] 한국의 초·중·고 학교 수 추이, 1999~2012



자료: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교원 수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수는 1999년 138천 명에서 2012년 181천 명으로 44천 명이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학교 교원수는 93천 명에서 111천 명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교원수는 105천 명에서 133천 명으로 각각 20~30만 명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4-7] 한국의 교원 수 추이, 199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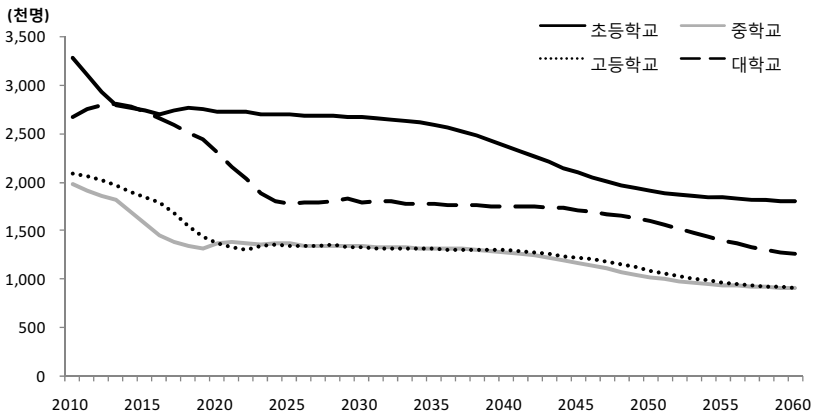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학교 및 교원 1인당 대비 학생 수 감소를 가져와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한국의 경우 19.6명이나, OECD 국가의 평균은 15.4명이다. 중등교육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한국 17.2명, OECD 국가 평균 13.6명이다(OECD, 2013). 저출산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나 그간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급증하여 교육인프라에 대한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학령인구(6~21세)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비해 2060년 초등학교와 대학교 학령인구는 약 1,500천 명, 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약 1,000천여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대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다소 늦게 진행될 전망이다. 출산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늦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4-8] 한국의 학령인구 규모 전망, 201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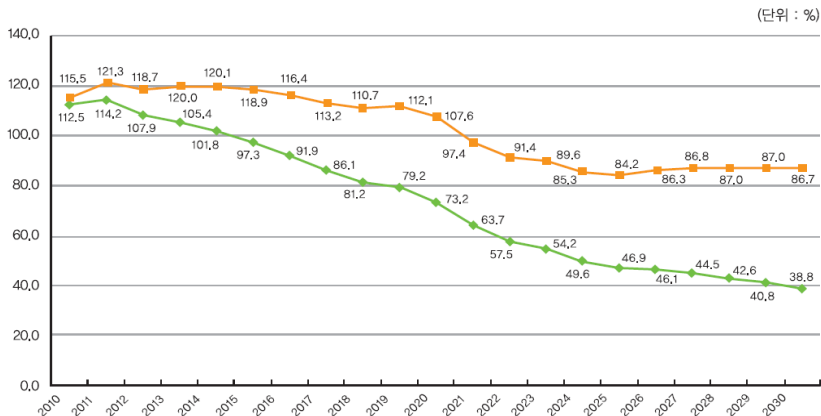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소

규모 학교들 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60명 이하 학교(초·중·고) 수는 1,924개교로 나타났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1980년 224개교에서 2005년 361개교로 증가하여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0년에는 346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¹³⁾. 그간 대학의 대형화로 정원은 늘어났으나 저출산현상의 누적효과 및 대학진학을 감소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 통폐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2018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유기홍, 2012), 외국인 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 국내 학생만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대학의 정원충족률이 2019년 80%를 하회하기 시작하여 2020년대 후반에는 40%내외로 급격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는 지방 소재 대학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채창균, 2012).

[그림 4-9] 한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률 전망, 2010~2030



자료: 채창균(2012). 고등교육 충원률 전망. KRIVET Issue Brief 제1호 2012.4.13

13) 뉴시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경북도 전국 최고. 2012.07.12일자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교시설 감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에서 학생 수가 일시에 제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수의 감축이 쉬운 일은 아니다(황양주·최유성, 2011). 또한 교원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드시 지정된 과정을 거쳐야만 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신속한 충원에 한계가 있고 공급이 과잉일 경우에는 신분 보장으로 인하여 인력 축소가 곤란하여 학생 수 및 정책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급을 조정하기 곤란하다(이삼식 외, 2009c).

미래 고령사회에서 성장 잠재력 유지 및 확충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체계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이혜영 외, 2007).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정책적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교원 수급을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기관의 양적 구조개혁과 질적 내실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한국장학재단, 2011).

제2절 중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인구변동의 경제적 영향

인구는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한 국가의 인구변동은 총 인구규모, 생산가능인구 규모, 인구의 연령 구조, 인구의 지역 분포 등 다방면을 포함하며, 이들 개별 요소는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장기간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여 인구학적 이점을 누렸고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몇 십 년간의 중국 경제 고속성장에 기여하였다. <표 4-2>에는 2001~2010년 중국의 총 부양비, 경제활동인

구, 구직인구, 노동 참여율, GDP 및 1인당 GDP 등의 변화를 제시하였다(国家统计局, 2011). 최근 중국은 총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인구변동이 경제 성장, 노동력 공급, 소비, 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표 4-2〉 중국 인구 및 경제 관련 지표(2001~2010)

년도	총 부양비(%)	노인 부양비(%)	경제활동 인구(만명)	구직 인구(만명)	노동 참여율(%)	GDP (억 위안)	1인당 평균 GDP(위안)
2001	42.0	10.1	74,432	73,025	82.84	109655.2	8,622
2002	42.2	10.4	75,360	73,740	83.45	120332.7	9,398
2003	42.0	10.7	76,075	74,432	83.62	135822.8	10,542
2004	41.0	10.7	76,823	75,200	83.34	159878.3	12,336
2005	38.8	10.7	77,877	75,825	82.67	184937.4	14,185
2006	38.3	11.0	76,315	74,978	80.27	216314.4	16,500
2007	37.9	11.1	76,531	75,321	79.86	265810.3	20,169
2008	37.4	11.3	77,046	75,564	79.69	314045.4	23,708
2009	36.9	11.6	77,510	75,828	79.51	340902.8	25,608
2010	34.2	11.9	78,388	76,106	78.44	401202.0	29,992

자료: 연도별 국가통계연감(国家统计局年鉴)에 근거하여 정리

가. 경제성장

18세기 말 맬서스의 「인구론」이 세상에 나온 이래 인구변동과 경제 성장 간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구학과 경제학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총 인구규모, 인구증가속도, 인구구조 및 인구 분포 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된다.

개혁개방이래 중국 경제는 연속 30년간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인구학, 경제학, 더 나아가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였다. 21세기 중기부터 중국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인구학적 이점의 이론을 활용하여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면,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동향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에 더해 여러 통계지표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인구변동요인의 기여도를 검증하거나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30년간 인구요소는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이 확실하다. 차이팡(蔡昉, 2004)에 의하면 1982년부터 2000년까지 20년의 기간 동안 총 부양을 감소는 1인당 GDP 성장률을 2.3%로 상승시켰으며, 동 기간 1인당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5%로 나타났다. 왕펑 외(王丰等, 2006)은 개혁 개방 이래 인구요소가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을 15%정도로 분석하였다.

인구 변화, 인구학적 이점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만의 독특한 규칙이 나타난다. 인구구조가 이상적이고 생산성이 풍부한 단계의 국가 및 지역에서 인구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경제성장의 기적이 창조된다. 실로 중국의 경우 인구 변동으로 인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경제성장에 유리한 노동력이 공급되고 저축률도 높았는데, 이는 개혁 개방 이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蔡昉, 2004). 중국의 인구변동과 경제성장의 기적은 다음을 설명해 준다. 첫째, 인구 변화는 정책을 통해 유도될 수 있다. 즉, 타당하고 적절한 인구 조절정책은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리한 인구 구조를 유지하게 하여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인구학적 요소를 보장해 준다. 둘째, 인구학적 이점을 활용할 때에는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 및 체계가 함께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와 같은 빠르고 큰 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구함정(人口陷阱)’에 빠지지 않을까? 이 문제는 오늘날 인구변동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1950년대부터 인구경제학자들은 인구함정(人口陷阱)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1인당 평균소득이 정체하는 이유를 해석하려 시도하였으며 인구성장이 일정 수준에서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높은 인구 성장은 낮은 경제 성장을 잠식하여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변화 추이를 국제사회와 비교하여 인구분포이론곡선과 인구최적선을 분석하였는데, 인구최적선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경사도가 인구함정(人口陷阱) 판단 기준이 된다. 연구 결과, 중국의 인구분포는 매우 불균등하고 인구요소의 방해가 비교적 크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인구함정(人口陷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인구규모가 크고 경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여 서로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학자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속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발전의 원 상태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는 인구함정(人口陷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李昕, 徐滇庆, 2009).

이외에도 중국은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인구보너스(人口红利, population bonus, 인구홍리), 산업 개선, 경제성장이라는 삼자간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제1차 인구보너스(人口红利)란 출산율의 감소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양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유리한 인구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제1차 인구보너스(人口红利)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장시간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였다. 제2차 인구보너스(人口红利)란 총 부양비가 대폭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개인들이 자본축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와 저축 행위를 조절하고 자본축적과 ‘자본-노동’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

고, 이전에 축적한 것을 이용하여 산업 패턴을 변화·향상시키고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을 집약적·포괄적인 성장 방식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제1차 인구보너스(人口红利)에서 제2차 인구보너스(人口红利)로 이동해가는 과정에 있으나, 지역별 인구보너스(人口红利)의 진행은 상이하다(孟令国, 2013). 동부지역의 후발 주자는 산업구조의 개선으로 제2차 인구보너스(人口红利)의 이점을 얻었으며, 중서부지역의 후발 주자는 지속적인 노동력 유입으로 제1차 인구보너스(人口红利)를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부지역은 자본기술 집약형 산업을 위주로, 중서부지역은 노동집약형 가공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 차별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대다수 학자들은 산업 패턴의 변화, 투자유치, 노동력 자질 등 외에 인구 정책의 조정 및 개선, 이상적인 인구구조의 유지가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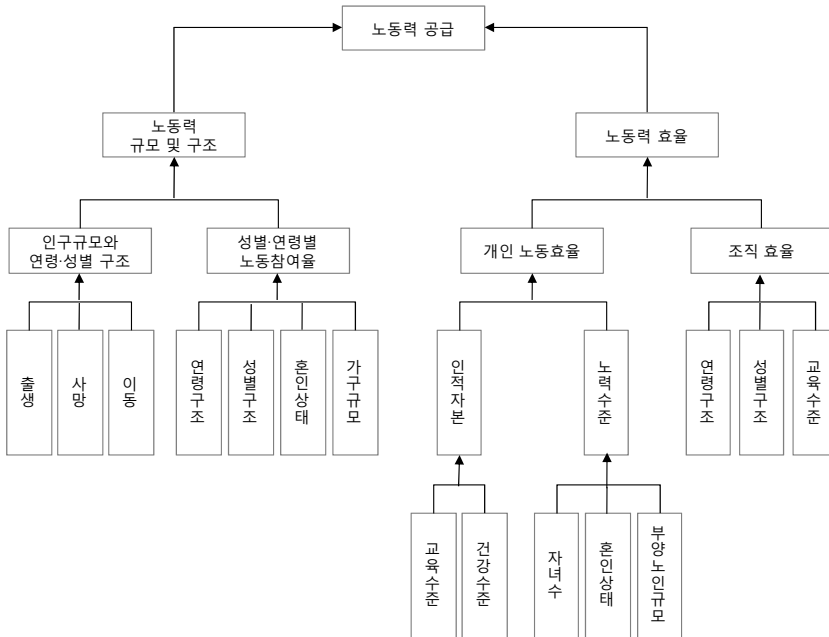
나. 노동력

인구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기초로 인구변동은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인구변동의 각 요소인 출산율, 사망률, 이동률 등은 한 지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구변동과 노동력의 공급·수요 사이에는 간단한 인과관계가 아닌 양방향, 심지어는 다방향의 각종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관계가 존재한다. 인구변동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출산수준 변동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출생 패턴 변동이 가구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 혼인상황 변화가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가구 규모 변동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해당된다.

노동력을 인구변동의 결과변수로 그리고 노동시장의 역방향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인구변동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일 방향의 작용 원리는 <그림 4-10>과 같다(郑真真, 廖少宏, 2007). 이는 인구변동과 노동력 공급에 관한 전체적인 분석 구조이다.

[그림 4-10] 인구변동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용원리



중국은 과거 몇 십 년 동안 빠른 발전과 변화를 겪으며 인구 변동 또한 컸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의 문헌자료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인구변동과 노동력 공급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미래

노동력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인구변동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전제로 단기·장기 전망에 대한 예측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인구변동과 노동력 수요 간 상호작용의 관계를 고려하여, 노동수요에 의해 노동력 공급(인구변동)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인구변동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적·질적 차원 모두를 고려한다. 우선 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구조의 변동이 노동력 공급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인 생각이다(표 4-3). 다만 현재 중국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노동력 공급의 전환점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론 연구와 정책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표 4-3〉 중국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 추이

(단위: %)

조사 년도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53	36.3	59.3	4.4
1964	40.7	55.7	3.6
1982	33.6	61.5	4.9
1990	27.7	66.7	5.6
2000	22.9	70.1	7.0
2005	20.3	72.0	7.7
2010	16.6	74.5	8.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각년도 인구센서스(人口普查) 자료.

2005년 자료는 1%의 인구표본조사를 근거로 추정

일부 학자들은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인구학적 이점이 점점 사라지는 단계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쇠퇴할 것이라 주장한다. 실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 추이와 전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생 구직난, 노동자 부족 등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¹⁴⁾을 맞이할 것이며, 인구변동

에 따른 노동력 공급이 중국의 미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王德文, 蔡昉, 2006; 都阳等, 2007).

일부 학자들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는 사회는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낮아지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노동력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단계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부양비로 특정 시점에서의 인구와 경제 간 관계를 일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부양비보다는 그간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경제가 성장하여 왔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구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잉여노동력의 공존에 따른 인구와 경제 간의 관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侯东民, 2007; 穆光宗, 2008; 刘元春, 孙立, 2009).

노동력 공급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교육수준과 노동력의 고령화가 비교적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 두안청룡(段成荣, 2006)은 중국 인구의 교육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 보급율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문맹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인구 자질의 상승은 노동력의 질적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도시와 농촌 인구 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크고, 남녀 간 교육수준의 차이도 여전히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력의 지역 분포, 취업률 및 산업 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수준 이외에도 인구구조 또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 중요한 영향

14) 개발도상국에서 농촌의 저렴한 인력으로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노동력이 고갈되는 시점에 임금이 급등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

을 미친다. 서로 다른 연령의 노동력은 생리적 기능, 생산 경험, 학습 능력 등 제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로 노동생산율은 30~44세 중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5~29세 청년노동력과 45~64세 노년노동력의 노동생산율은 중년층 노동력의 생산율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于学军, 1995). 중국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율에 큰 영향을 미쳐 사회 총생산효율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중국 경제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杨道兵, 陆杰华, 2006; 张车伟, 2010)

중국의 경제성장이 이미 혹은 미래에 인구학적 이점을 상실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는 인구구조(생산가능인구가 풍부한 경우)가 중국 경제 발전에 활력을 가져다준다는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구조가 변화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2012년 중국의 신규 진입 노동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에서 2013년 초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하였다.¹⁵⁾ 발표에 의하면 비록 신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향후 몇 년간 특히, 12·5(十二五) 기간¹⁶⁾ 동안 중국의 노동력 공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은 계속해서 직업기술교육 전개, 노동력 자질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화와 산업 개선 촉진을 통해 노동력을 저급 산업에서 고급 산업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업종에서 높은 업종으로 전환하여 산업패턴 변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15) <http://www.chinanews.com/gn/2013/01-25/4522296.shtml>

16) 국가인구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의미

다. 소비(내수)

중국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빠른 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나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지나치게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고, 소비(내수)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11)의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에서는 2000~2010년 중국의 최종 소비와 GDP대비 최종 소비율을 제시하고 있다(표 4-4). 이를 살펴보면 그간 주민 소비, 최종 소비 및 GDP는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최종 소비율 및 소비 지출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중국의 최종 소비와 GDP, 최종 소비율(2001~2010)

(단위: 억 위안, %)

년도	주민 소비	최종 소비	GDP	최종 소비율(%)
2001	49435.9	66933.9	109655.2	61.4
2002	53056.6	71816.5	120332.7	59.6
2003	57649.8	77685.5	135822.8	56.9
2004	65218.5	87552.6	159878.3	54.4
2005	72652.5	99051.3	184937.4	52.9
2006	82103.5	112631.9	216314.4	50.7
2007	95609.8	131510.2	265810.3	49.5
2008	110594.5	152346.6	314045.4	48.4
2009	121129.9	166820.1	340902.8	48.2
2010	133290.9	186905.3	401202.0	47.4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2011). 중국국가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에 근거하여 정리

인구는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구변동은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로 다른 연령의 인구는 서로 다른 소비, 저축, 투자 행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인구 혹은 인구의 연령구조는 한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개혁 개방 이래 경제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1인당 소득과 국민생활수준 모두 뚜렷

하게 상승하였으며 소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소득 수준과 소비 능력이 높아진 거대한 중국 인구는 다시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소비수요 시장을 형성하였다(王桂新, 2010). 이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구변동을 첫 번째로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于学军, 2009).

중국의 인구변동과 소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지는 않으나 그 간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모딜리아니와 카오(Modigliani and Cao, 2004)는 최근 50년간 중국의 저축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장기적으로 1인당 평균 소득 증가율과 유소년부양비의 변화로 중국의 저소비 성향은 설명이 가능하나, 왜 소비율이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고 하였다. 위엔쯔강과 송정(袁志剛, 宋錚, 2000)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1980년대 후반 이래 도시 주민의 평균 소비성향 하락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왕더원 외(王德文等, 2004)는 중국 자료에 Leff 패턴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인구구조가 저축률에 명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리원싱과 쉬창성(李文星, 徐长生, 2008)은 1952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국 거시경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인구의 자연 증가율과 실제 주민 소비 간에 뚜렷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최근 중국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거의 최저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향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이외에도 루지에화 외(陆杰华等, 2002)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래 인구가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변동에 따른 소비수요와 자원보호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요소의 변화가 소비 수요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총

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슈예쥘(于学军, 2010)은 중국의 인구규모, 인구 자질, 인구구조, 인구분포, 가구규모 등 인구요소의 변화가 내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구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즉, 인구를 경제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안정된 인구규모와 적절한 인구구조를 통해 내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거대한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경기(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발생에는 수요 증가와 자본 축진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이들은 다시 인구구조 변화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가속되는 사회는 노인부양비가 높아지고 저축률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 혹은 실증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가 없어 아직은 인구구조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구변동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론과 실제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웨이민과 장펑(陈卫民, 张鹏, 2013)은 정태적 패널과 동태적 패널, 비모수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1990~2010년 간 연령구조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소년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 비중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 대출 성장률 및 소비비중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더 나아가 비모수분석을 통해 인구고령화 정도가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상승이 촉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인력자원 개발, 노인의 직업능력 및 노동참가율 제고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초래되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종합

이상 중국의 인구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다. 실로 중국이 3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인구가 변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구변동과 경제활동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은 학계에서 중점 주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인구규모 변동, 인구구조 변동, 인구의 공간적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종 결과들에서 발생하는 세부적 차이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구변동과 경제활동 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는 경제활동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 역할도 한다. 인구구조 변화, 출산율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대규모 이동 등은 경제활동에 지속적이고 강렬한 충격을 주게 된다. 인구변동과 경제활동 간 높은 상관성은 정세에 유리하도록 발 빠르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장요소를 제외하고 인구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도적 요소로 결정된다. 향후 경제 발전전략의 제정은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의 특성과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인구규모를 억제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 단계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인구변동의 사회적 영향

지난 몇 십년간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새로운 인구 변화와 사회 발전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인구는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인구와 사회발전 간의 관계는 나날이 뚜렷해지고 밀접해지며 복잡해져가고 있다. 본질적으로 중국의 인구변동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이 가져온 사회보장 문제이다. 둘째, 인구의 성별구조 변동이 가져온 사회영향의 문제이다. 셋째, 인구이동 변동이 가져온 사회공공서비스 문제이다. 넷째, 인구계층 변동이 가져온 사회공평성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중국의 인구와 사회 간 협력적 발전을 저해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와 사회발전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해야 하며, 중국 인구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인구-사회 발전 간 총체적인 조화를 인구발전정책과 사회발전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李建民等, 2007). 중국의 인구변동은 사회발전에 각종 문제와 도전을 가져옴과 동시에 중국에 더욱 유리한 인구학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회보장체계와 공공서비스 기반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게 하는 등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인구변동이 사회보장, 사회안정, 공공서비스, 빈곤 및 사회공평성, 교육, 문화계승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사회보장

21세기에 들어 중국 인구 변동의 최대 특징은 인구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영향으로 고령화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정이 늘어나 보살핌이 필요한 (반)능력상실의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6차 인구센서스(人口普查)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1.78억명에 이르러 총인구의 1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구고령화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노인인구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즉, 노인인구는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이며 사회보장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지역 발전이 균등하지 못하고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노인관련 사회보장의 정체는 미래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커다란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노인 관련 사회보장체계에는 양로금, 의료, 보살핌 등 여러 방면의 사회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포함되는데, 중국의 노인 관련 사회보장과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임무, 새로운 수요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姜向群, 2009).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우선 총체적인 계획과 앞을 내다보는 예측이 부족하여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전체성, 연속성, 지속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 의료보험 및 보장은 고연령 노인의 보살핌 문제를 포함한 보다 진보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양로 관련 사회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여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다. 넷째, 위생기구와 양로원의 시설이 낙후되고 기능이 단순하여 돌봄 간호, 의료 재활, 심리적 위로 등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다섯째,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발전이다. 여섯째, 정부의 예산 투입이 부족하고 민간투자규모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자금모금액 체계가 미흡하다. 일곱째, 인원, 조직, 전문화 정도 등이 미흡하여 양로 업종의 발전이 양로 수요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국가의 지원(혜택)정책이 지역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홉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지원제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이 초래하는 또 다른 사회보장 문제는 농촌 지역의 인구고령화 압박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周其仁, 2013). 빠른 도시화, 인구의 대규모 이동에 따라 도시의 경제 발전이 촉진됨과 동시에 농촌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뒤바뀐 현상은 중국 중서부지역과 빈곤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농촌 거의 대부분에서 사회양로보험제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으며, 농촌의 신행합작의료제도(新型农村合作医疗)¹⁷는 아직 확산 단계에 있다. 따라서 농촌의 양로제도와 의료제도는 사회보장에서 가장 상위 단계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과 사회보장 간의 부조화는 주로 양로문제로 드러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원인은 제도적 요소에 있다(“中国社会保障体系研究”课题组系等, 2000). 즉, 인구제한정책과 사회발전정책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제한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모두 중국의 사회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 하나, 인구정책과 계획출산정책이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보장정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와

17) 농민을 대상으로 2003년 도입한 기본의료보험제도(이소양,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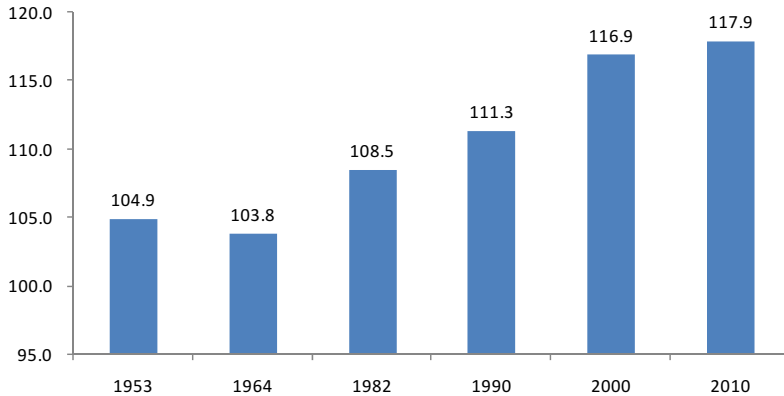
노동취업정책 및 사회이동·이전정책은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불안한 위기가 아닌 기회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술하였던 여러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의 사회보장, 특히 양로서비스 영역은 이전에 없었던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과 양로서비스 강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행인 점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투입이 국민생활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민의 개인적 보장 능력이 높아져 사회보장 및 양로서비스가 건실한 사회적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구고령화는 중국 사회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굳건한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고 양로사업과 사회발전이 균형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 사회안정

중국 인구의 성별구조 변동은 사회 안정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출생성비는 1980년대 초부터 점점 높아져 30여 년간 연속하여 정상수준(103~1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섯번의 인구센서스(人口普查) 결과, 중국의 출생성비는 1953년 104.9, 1964년 103.8, 1982년 108.5, 1990년 111.3, 2000년 116.9, 2010년 117.9로 나타났다(그림 4-11 참조).

[그림 4-11] 중국의 출생 성비 변화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인구센서스(人口普查) 각년도.

중국의 출생성비는 2009년부터 4년 동안 연속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상적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 인구의 성별구조 불균형은 중국 내외 학술회의의 연구 관심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중국 정부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중국 내 학계에서 출생성비에 관한 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국에 출생성비 불균형이 높아지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논쟁(刘爽, 1985; 乔晓春, 1992; 涂平, 1993)이 있었다면, 1990년대 하반기에는 여자 영아를 익사시키고 유산시키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顾宝昌, 徐毅, 1994; 张翼, 1997; 马瀛通, 1999) ‘중국의 심각한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과거 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생성비 추이, 지역 간 차이, 사회경제적 영향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실증 분석 및 정기 조사가 수행되었다(原新, 2007; 〈人口研究〉编辑部, 2009; 翟振武, 杨凡, 2009; 石人炳, 2013).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 심화 문제에 대해 심도

깊고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출생성비의 현황과 원인 및 영향에 초점을 맞춘 실증 데이터 및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간 전국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진행되었던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다년간 각 지역에서는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관여 프로젝트를 실시해 오고 있다. 출생성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국가인구계획위원회(国家人口计生委),公安部(公安部), 위생부(卫生部) 등 6개 부서들이 연합하여 8개월간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태아성별 감식과 성감별에 따른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2012년에 6개 부문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2012년을 ‘출생성비 중점 해결의 해(出生人口性别比的重点治理年)’로 정하고 12·5(十二五) 기간¹⁸⁾에 출생성비를 1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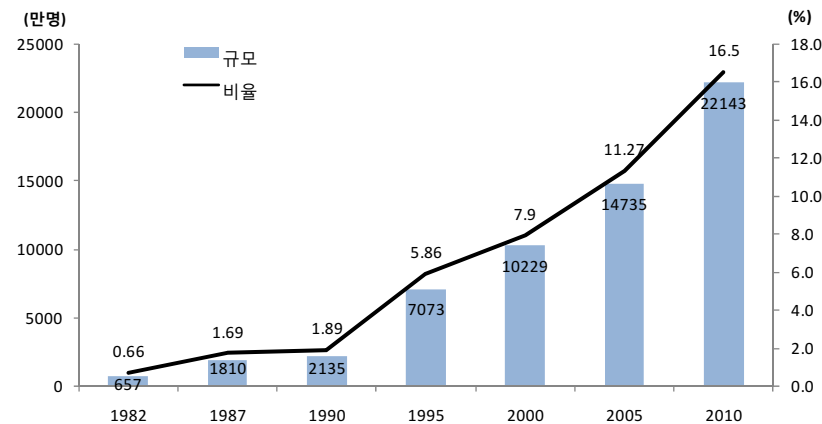
학계와 중국정부가 출생성비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계적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그간의 성별 구조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사회적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문제(혼인적령기 남녀의 불균형)가 인구의 안정문제를 야기하고, 남성 노동력이 넘쳐나 일자리의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하며 더 나아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인구학, 사회학, 여성학 등에서의 연구적 시야를 넘어서 정보자료와 방법을 확보하고, 동시에 관련 정책과 해결방안 그리고 미래 영향 전망에 연구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18) 국가인구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의미

다. 사회공공서비스

중국 인구변동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인구 이동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010년에 발표한 제6차 인구센서스(人口普查) 결과에 따르면 주거지와 호적 등기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고 호적 등기의 소재지를 떠난 지 반년 이상 된 인구가 2.2억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인구 6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은 규모는 2000년에 비해 1.1억 명(81.03%)이 증가한 것이며, 1980년대 초에 비해서는 33배가 증가한 것이다(그림 4-12).

[그림 4-12] 중국의 1982년 이래 유동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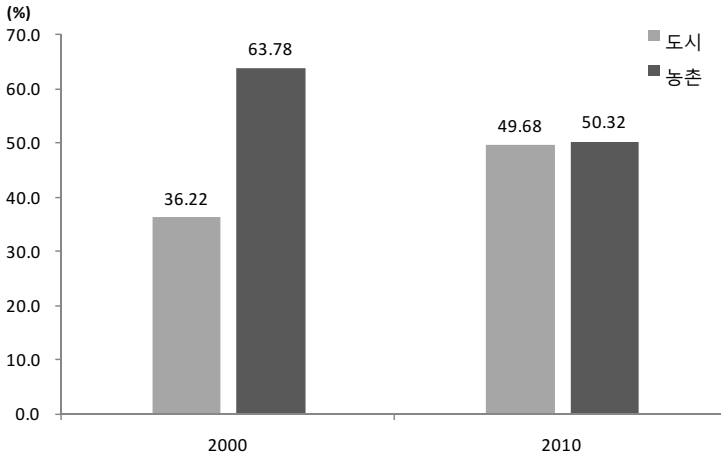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인구센서스(人口普查) 각년도.

이와 같이 전례가 없는 인구 이동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동인구는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유동인구로 인하여 도시가 발전하였음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온 유동인구와 도시의 기존 주민 간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유동인구

는 도시에 호적을 둔 주민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인구 해결에 대한 기본적 원칙은 호적제(戶籍制)에 따른 도시, 농촌 및 지역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는 것이다(王培安, 2012). 인구가 이동 변동으로 인한 사회공공서비스 문제가 중국의 인가와 사회 간 조화로운 발전에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중국의 경제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유동인구의 이동량, 이동방향, 구조, 유동인구의 혜택에 대한 욕구 등의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유동인구의 생존,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国家人口计生委)가 발표한 「중국 유동인구 발전 보고 2012」에서는 중국 유동인구의 현황에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유동인구 규모가 거대해졌으며, 젊은층 농민들이 주체가 되었다. 둘째, 인구 유동방향이 동남쪽 해안으로만 집중되던 것이 다방향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주로 국가 중점 교육도시와 도시화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셋째, 유동인구의 안정성이 강화되었고 가족 모두가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넷째, 유동인구의 보험가입률이 비교적 낮아 권익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国家人口计生委, 2012). 동 보고서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들이 유동인구의 주요 구성원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도시 진출 욕망은 1세대 농민들에 비해 더 크고, 생활행태와 욕구가 ‘일하며 농사도 짓는’ 것에서 ‘일을 하되 농사를 짓지 않는’ 형태로, 도시와 농촌 간 ‘쌍방향 유동’에서 ‘도시 정착’ 형태로 그리고 ‘생존 모색’에서 ‘평등 추구’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4-13] 중국의 도시 및 농촌 인구의 비율 변화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인구센서스(人口普查) 각년도.

유동인구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보장혜택 부족, 낮은 주거의 질적 수준, 자녀 교육 곤란 등 일자리 및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왔다. 이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더라도 도시 호적을 가진 주민들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호적 분할의 이원적 사회관리서비스 정책을 고수할 경우 유동인구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억여명이나 되는 유동인구가 희망하는 것은 호적 장애를 극복하여 평등하게 사회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중국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체계에 대해 12·5계획(十二五)¹⁹⁾에서는 인구가 유입하는 지역의 정부가 관리 주체가 되어 유동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대상을 호적인구에서 상주인구로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해 명확히 하고

19) 국가인구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의미

있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방안을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거주증 호적 전환 개혁, 광둥성(廣東省)의 60점 호적제도 등이 해당되는데, 이를 통해 유동인구에 대한 호적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기존의 호적 소지 인구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타지에서 온 인구의 자녀가 동등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동인구가 기존 호적인구와 평등하게 기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장시성(江西省)에서는 타지 진료 결산능력 구축을 강화하여 2015년에는 전면적으로 전 지역 내와 성(省) 내 의료비용 타지 즉시 결산 및 다른 성(省)의 의료비용 즉시 결산을 점차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난닝시(南寧市)에서는 농민공의 도시 정착 안정을 위해 농민공 거주조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농민공의 특성에 맞는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예금 및 활용 방법 등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장샤(長沙)에서는 농민공 자녀의 입학 및 일자리 체계 구축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법에 따라 농민공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人民日報, 2012).

이와 같이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실시된 조치와 방안은 중국 정부가 유동인구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동인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동인구가 도시 유입 과정 중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위하여 단순히 언급만을 하거나 지방 정부의 산발적인 제도에 의존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사회 공공서비스를 더 높은 수준으로 설계하고 유동인구의 서비스와 관리를 전국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유동인구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유동인구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빈곤 및 사회공평성

지속적인 개혁 개방은 중국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대규모 인구이동을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인구의 사회계층 구조도 빠르게 분화되고 재구성되었다. 오늘날 중국 인구의 계층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현대적인 사회계층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주된 특징으로 중간계층이 넓어지고 사회적 이동 체계가 개방되고 있다(陆学艺, 2002). 둘째, 사회계층 간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여 계층이 고착화되면서 사회 양극화현상이 더욱 쉽게 형성된다. 셋째, 자원분배와 수입 분배가 고르지 못해 계층 간 자산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수직적 이동통로가 위로 갈수록 좁아져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의 상승이 어렵고, 사회구조 조정 속도가 느려 제도 개혁과 조정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기에 더해 이제 막 빈곤에서 벗어난 수많은 계층은 발전 성과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매우 궁핍한 현상에 직면해 있다(蔡志强, 2011).

인구계층 변동에 따른 빈곤 및 사회 공평성의 주제는 중국 사회발전의 주요 목표 및 임무가 되었다.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2012)에서 발간한 「2012 중국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발전에서 인구압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빈곤기준에 따르면 빈곤인구는 2,688만 명에 이르고, 2011년 빈곤기준 조정치(농촌주민가정 1인당 평균 순수입 2,300위안 인민폐/년)에 따르면 1.28억 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절대 빈곤문제 외에도 상대적 빈곤과 도시 빈곤 등의 문제 또한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빈곤해지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발전에 커다란 난제가 되었다. 이 외에도 중국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가속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낮은 수입, 공공

의료서비스 취약으로 인해 빈곤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 존재하는 빈곤현상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결과가 매우 심각해졌다(李建民等, 2007). 따라서 중국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해 공평한 공공상품, 기본서비스, 사회 참여기회 등을 제공하여 계층 간 이동 통로를 원활하게 하고 빈곤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 교육

문화라는 개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것을 뛰어 넘는다. 문화는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교육은 문화계승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첫째,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인구집단에 교육을 하는 것은 문화의 선별, 정리, 보존 및 계승 과정과 연관된다. 둘째, 문화의 전파와 교류는 교육을 통해 전해진다. 인구변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오늘날 중국 인구변동과 문화계승에 내재된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규모 변동은 교육 수요 변동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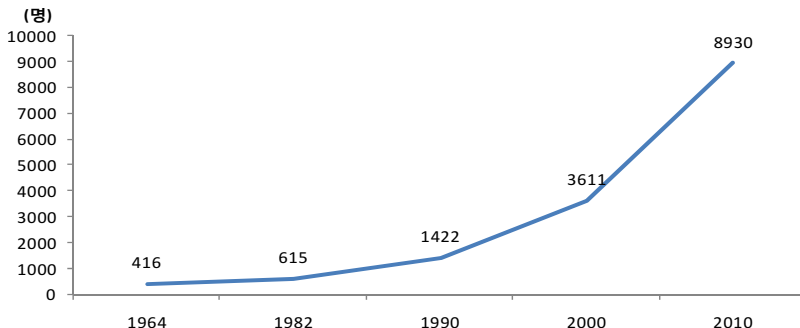
첫째, 인구규모의 절대적 증가는 교육사업 발전에 대한 압력을 가져온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더 많은 학교 건설, 교육설비 및 교육인원 확충을 의미한다.

둘째, 출산율 하락으로 인하여 학생인구가 점점 감소하여 적정한 교육 자원의 배치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장기간의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아동인구 즉, 재학생의 감소로 학교 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었으며 학교 설립 조건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이 높아지게 된다. 가족규모의 축소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더욱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현재 인구동향이 교육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刘铮, 1992).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 측면에서 보면 학생인구 감소로 일부 지역에는 교사의 과잉공급 문제 및 교육 자원의 방치 등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인구규모 변동은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중국 인구의 변화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정책적 개입에 의해 산출된 결과이다. 시기마다 달랐던 정책으로 인해 중국 인구는 수십 년 동안 몇 번의 등락을 경험하였으며, 연령 구조에도 비교적 큰 파동이 형성되었다. 특히, 혼인과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이 비교적 급격한 변화를 겪어 출생아수의 변동 폭이 크고 이에 따라 학령인구의 변동 폭도 크게 나타났다. 중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상주인구의 지역사회 분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령아동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교육자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郑真真, 吴要武, 2005).

[그림 4-14] 중국의 10만명 당 대학교육 수준의 인구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인구센서스(人口普查) 각년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유동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구이동은 현재 중국의 경제, 사회, 인구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거대한 유동인구의 규모는 교육사업 발전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첫째, 유동인구의 자녀 교육 문제이다. 교육은 미래 사회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인적 자원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최저 계층의 사람들은 대개 미래의 행복을 아이들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점점 많은 유동인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유동인구의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교육, 생활습관, 사회 비주류화 등의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다(張翼, 周小刚, 2012). 유동인구가 유입하는 지역의 교육국이 유동인구의 자녀와 호적인구의 자녀에게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일된 교재, 교육연구, 테스트, 학습관리, 교사편제, 교과평가, 입학 일체화 관리 등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자원이 유동인구 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공평한 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베이징 등 몇몇 대도시에서는 정부교육 체제와는 별도의 기본 교육기관이 생겨났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유동인구의 자녀를 전문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비정규학교가 출현한 것이다(趙樹凱, 2000). 더욱 심도 깊게 이야기하자면 교육의 세대 간 전이를 고려하였을 때, 유동인구 부모가 가진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행태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계층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동인구의 학령기 자녀는 해당 지역의 공공교육자원 부족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유동인구 자신의 지속적인 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인구 이동은 인구의 공간적 이동뿐만 아니라 이동 방식과 직업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는 유동인구로 하여금 보다 높은 교육수준, 학력, 직업기술 등을 요구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요구한다. 현재 유동인구의 교육에 관한 독립적인 조직이 형성되지 않았고 대신 수준이 낮고 비공식적인 조직이 산발적으로 존재해 실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石人柄, 2004).

현재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교육에 심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을 받는 주요 집단인 아동인구의 감소는 교육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생산가능인구의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더 높은 수준의 문화·직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노인인구비율의 상승은 노인인구에 대해 지식 및 건강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중국은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주로 양로보장과 돌봄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노인의 교육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도시에서 인구분포는 교육기구의 설치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도시 기능 지역의 조정에 따라 도시의 인구분포는 필연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예로 베이징의 경우 교육자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中国经济时报, 2011). 초·중고 교육망 설치가 비교적 발달된 도시핵심지역의 인구 비중은 현재 하락하는 중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상주인구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 도시의 학교 건설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인구분포와 연령구조 등의 변동 추세와 특징을 결합하여 교육기구와 네트워크를 배치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바. 문화계승

중국은 최근 건국 이래 최대의 인구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는 문화 전달의 주체로 인구 이동은 곧 문화의 이동을 의미한다. 유동인구의 경우 본래 거주하던 지역의 생활 방식과 명절 풍습, 종교 신앙, 언어·문자 등을 유지한 채로 이동한다. 이들이 가진 기존의 문화와 이동한 지역에서의 문화가 서로 교류 혹은 융화되어 중화민족의 다문화 소양이 풍부해지고, 현대문화와 주류문화에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전통문화, 특히 소수민족의 문화가 글로벌화와 도시화 등의 강력한 충격(영향)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속도로 변화하거나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의 급격한 변동 과정에서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해 가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첫째, 인구 변동은 새로운 문화 형성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유동인구는 혈연, 친족, 지연 등의 유대를 통해 사회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인구가 유입한 지역에서는 언어, 생활 습관, 풍속 규범 등을 상호 인정하는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본래 문화가 지속되므로 유동인구는 자신이 가진 원래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 문화에도 적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교류와 충돌 과정은 더욱 큰 포용성을 지닌 새로운 문화의 생성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농촌의 도시화, 도시의 현대화,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과정 중 지역적 색깔을 지닌 문화의 경계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여러 문화들은 용광로에 녹아들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다. 현재 베이징에서 ‘베이징 호적’이 없지만 베이징의 문화, 상하이의 문화 등은 모두 인구이동 변동 과정 중에 형성된 새로운 문화 현상이다.

둘째, 인구 변동에 따라 민족의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인구 변동 과정에서 도시화와 현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민족

의 전통문화는 두 가지 진퇴양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어떻게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보존 및 발전시켜 전통문화가 인구 변동과 사회 발전 과정 중에 버려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문화교류 과정 중 어떻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제거하는 등 다른 문화의 선진적 부분을 더욱 잘 흡수하여 자신의 민족을 끊임없이 발전·진보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모든 민족은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심각한 위기와 우려에 직면하게 되고, 우수한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중국은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다. 55개 소수민족 중 22개 민족은 인구 10만 명 이하이며, 일부 민족은 5,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수민족은 인구 변동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전통문화 존속능력이 비교적 약하고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구의 성별 구조가 불균형한 민족의 문화 유실에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부터 서남부 소수민족의 부녀자들이 외부로 대거 이동하는 문제가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소수민족 부녀자들의 외부 이동은 현지 사회와 소수민족의 생산(출산), 발전 및 문화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녀자들의 외부 이동이 심각하였던 이족(彝族)을 예로 들면, 부녀자들의 외부 이동으로 인해 그간 안정적이었던 인구구조가 파괴되었으며 전통사회 구조의 동요가 시작되었다. 농업과 수공업이 공존하였던 경제구조는 파괴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11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이족(彝族)의 전통문화도 앓아갔다. 부녀자들은 종종 전통문화의 계승자 또는 전승자라고 불리며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 가정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었는데, 부녀자들의 수가 급감하게 되면서 부락의 시집 문화와 성인식 등 부녀자들이

참여하는 이족(彝族) 풍속이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이족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 특히 의복 문화를 계승할 자가 사라지게 되었다(朱荟, 2009)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원천이며 다민족 국가의 귀중한 자원과 재산이 된다. 중국 인구의 급격한 변동과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민족 문화 보호 작업에 수많은 새로운 문제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진귀한 문화유산은 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보호와 발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3. 인구변동이 제도 개혁에 미치는 영향

제도 개혁이란 기존의 제도를 조정하여 새로운 내용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 합리성, 규범성 등을 높이는 행위이다. 인구정책을 개혁하는 목적은 인구 변화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인구와 사회경제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본질적으로 인구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은 이익구조가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사회구성원들 간에 사회발전결과가 공평하게 공유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인구문제에 대해 지방정부, 공공부문 및 관련조직이 공공정책을 통해 이익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杨瑞龙、杨其静, 2000)

정부는 사회에서 주도성을 지닌 공공부문이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주체로 기초적인 제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공공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관리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공공권력기구으로써 조화로운 사회 이익구조 실현, 사회적 모순과의 충돌 해소, 공평한 이익 공유 및 보상 체계 구축 등의 의무가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최대한으로 공공서비스와 공공

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刘爽, 2005). 따라서 정부는 인구 변동이 가져오는 인구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인구관련 정책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실로 중국은 30여년의 개혁개방을 겪으며 초기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인구 정책 및 제도를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호적제도, 취업제도, 사회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과거 중국 정부에서 추진한 인구규모 억제제, 도시 인구규모 억제제, 인구발전계획 제정 등을 통해 정부는 인구 발전과 인구감소 관리, 인구서비스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인구의 현대화와 도시화를 위해 더욱 여유롭고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역사상 유래 없는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로 인구 규모, 인구구조, 인구분포 등 인구 변동의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구 변동은 노동시장, 산업구조, 저축 및 소비 등 경제의 모든 방면에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도시 및 농촌 발전 구조, 사회계층의 이동, 문화계승 및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변동이 가져오는 일련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전략으로의 전환이 핵심 의제가 되었다.

현 상태에서 보면 인구의 균형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수많은 제도적 장애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와 사회사업 개혁, 종합적 인구 관리와 발전을 위한 개혁,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을 야기하는 강력한 규제, 인적자원의 개발·이용,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 사회계층 간 이동, 서로 다른 이익 집단 간 대화 체계 구축, 인구 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 제어, 종합적인 통치 체제 등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아 인구의 균형적 발전에 여전히 신뢰할 만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한 실정이다(周学馨, 2010).

제도적 장애의 가장 뚜렷한 예는 도시 인구규모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는 인구규모를 통제한지 50여년이 되었으나, 그간의 5개년 계획 중 '3·5(三五)', '6·5(六五)'²⁰⁾ 등 특정 기간에만 베이징의 인구규모를 당초 계획한 목표 범위 내에서 통제하였을 뿐, 그 외 기간에는 당초 계획하였던 인구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인구목표 및 인구 수용지표를 수정하였다(段成榮, 2005). 베이징시에서는 외부 유입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년간 외부 유입인구에 대하여 '제한', '허가', '금지' 직업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도 한계가 있어 인구 유입을 막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刘爽, 2005). 이와 같이 중국이 인구 문제를 장기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변동에 대한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형성된 제도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 변동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발전의 일반적 규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국의 특수한 상황과도 직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총인구의 규모가 거대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구구조 상 문제가 두드러진다. 호적제도에 따른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는 이원화 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 및 관리 문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중국의 인구제도 개혁은 중국만의 인구 특징과 동향에 부합해야 하고, 전체 국가사회경제 발전 과정 및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즉, 중국의 인구제도 개혁은 인구 규모, 분포, 구조에 초점을 맞춰 관리·제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구 및 사회 상황의 개선과 공공서비스 확장을 포함해야 하고, 인구 생산이 의존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20) 각각 국가인구발전 제3차 5개년계획, 제6차 5개년계획을 의미

이는 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방면에서 구현될 수 있다.

첫째, 사고 및 관념에 대한 개혁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구관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가치, 이념, 정치, 전략 및 목표, 기본 원칙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기 과정이자 복잡한 시스템이다(国家人口计生委课题组, 2010). 이를 고려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인구변동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산업구조 조정, 지역 기능 분포 등을 고려하여 경제정책, 사회정책, 인구정책 등을 조화롭게 조정하여야 한다. 규칙적 인구이동, 지역 간 인구 분포 조정, 인구규모 통제 및 인구구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도 촉진하여야 한다. 인구학적 이점과 에너지를 최대 한도로 활용하여 인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체제의 개선과 개혁이다. 이와 관련 3가지 부문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법적 차원에서 인구발전과 관련한 제도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구 관련 법령의 상당수는 1970~1980년대에 제정 및 공포된 것으로 현재의 인구동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예로 1996년에 통과된 「노인인구의권익보장법(老年人口权益保障法)」의 경우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지 않아 2012년 말 수정²¹⁾하였다. 두 번째 부문은 전국 단위로 호적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彭希哲, 郭秀雲, 2007).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유동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농업가정과 비농업가정 그리고 호적인구와 유동인구를 구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거주지 등기 호적에 근거하여 도시 및 농촌의 통일성을 목표로 호적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혁해나가

21) 자녀와 떨어져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떨어져 사는 노부모를 자주 찾아가지 않는 행동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였다.

야 한다. 세 번째 부문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다. 현재 사회보장의 범위가 넓지 않고 사회보장기금 조달이 어렵다. 인구고령화는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실업보험도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다. 관리체계는 분산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성이 크지 않는 등으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혁신적 발전 및 전면적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王国辉, 2011). 이를 예로 들면, 근로자에 대한 기본 양로보험제도 개선, 의료보험제도의 전진,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실시, 사회지원제도 개선, 농촌보장제도 수립의 가속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노동방식의 조절과 개혁이 필요하다. 중국의 인구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계로 인구와 관련한 부처, 사회조직들 간 공동 관리 및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공통의 조직 기구를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도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부처의 기능 전환 및 개혁이다. 부처의 기능 전환은 인구 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의 핵심적 요소이다. 2013년 3월 중국의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人民代表大会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上)에서 국무원(国务院)²²⁾의 개혁과 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 위생부(卫生部)의 업무와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国家人口和计划生育委员会)의 계획출산 관리·서비스의 업무가 통합된 ‘국가 위생 및 계획출산 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가 설립되었다. 동 조직의 주요 업무로는 의료 위생 및 계획출산 서비스 자원 배치의 통합 계획, 국가기본약물제도 제정 조직, 계획출산정책 입안, 공공위생 및 의료 서비스 관리감독, 계획출산 관리 및 서비스 책임 등이다. 기존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의 인구발전 전략, 기획 및 인구정책 연구 수행에 관한 업무는 국가발전및개혁위원

22)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관

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로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위생부와 국가인구 계획출산위원회를 통합한 취지는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자본 절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 관리·감독의 통합, 계획출산 및 위생서비스 간 통합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구분야에서의 체계 개혁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그간 인구 변동이 중국 발전에 가져온 기회와 도전은 현대화, 공업화, 도시화 등 모든 1차 대규모 사회·경제개혁에 뒤쳐지지 않는다. 향후 인구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와 곤경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와 활력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처해있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인구와 사회의 공공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만의 특색으로 인구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인구 변동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으며, 과거의 사상이나 관념, 정책 등을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인구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인구 관련 제도와 방법에는 수많은 이념적, 구조적, 체제적 함정이 존재하므로, 총체적인 인구문제의 해결과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고도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정책 조정이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제3절 일본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인구변동의 경제적 영향

가. 경제성장

일본에서 인구감소 사회가 도래한다는 점은 인구학적 연구에 의해 분

명하게 밝혀졌다. 일부에서는 향후 인구 감소가 일본의 경제적 쇠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인구 감소의 부정적인 효과가 다른 요인으로 보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 둔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개 인구 감소라는 용어에 대해 일본에서건 서유럽에서건 국가의 몰락, 쇠망, 파산과 같은 어두운 이미지가 강하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래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전후의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했던 적이 없으나, 서유럽 각국과 달리 섬나라여서 민족의 동질성·독자성 의식이 강한 만큼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특히 크다(河野綱果, 2007).

인구감소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용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발전이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이 국민의 의식에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일본이 세계, 특히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대규모 노동력에 기인한다. 높은 교육 수준과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숙련도, 당시 서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었던 노동력이 일본의 경제 발전을 지탱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로 1970년대 OPEC 석유파동 이후 연료 절약형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점차 경기가 회복되어 갔는데, 당시 일본에는 제조업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링, 과학자, 숙련기술자 등이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로 일본의 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내부적으로는 인구성장이 멈추고 고령화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상대적인 이점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 일본이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제조업과 전자기술에서의 역할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도 일본의 기술에 견줄만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oki, 2013).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261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로 돌아섰으며, 2030년에는 67,730천 명, 2060년에는 44,183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간 일본 내수시장을 지탱하여 왔던 대규모 인구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의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의 상승적인 경제력이 G7에서 일본을 비서유럽권에서는 유일한 회원국으로 만든 원천이었는데, 2050년 일본의 인구 순위가 16위로 떨어지면 일본은 아시아 경제에서의 탁월성과 국제 정치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河野綱果, 2007).

인구감소로 인해 장래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오해하거나 혹은 옛 경제 관행에 매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松谷明彦, 藤正巖, 2002). 인구 감소는 곧 소비자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 수요 축소, 기업의 매출 하락, 생산량 축소로 이어져 이른바 불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순환과 경제 성장을 혼동하는 데에서 오는 오해로, 인구감소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 후퇴기의 모습이다. 인구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에 맞춰 기업의 체질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영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松谷明彦, 藤正巖, 2002).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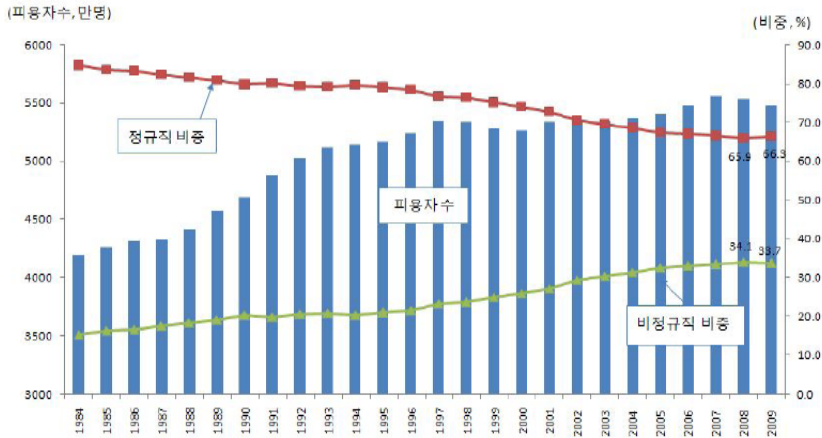
23) 마쓰타니 아키히코(松谷明彦)는 인구 감소가 일본 경제에 초래하는 영향은 상당하겠지만,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향후 30년 동안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현 시점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향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다. 언젠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점이 와도 기업 구조나 산업 구조를 개혁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나. 고용행태

국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적자원은 아주 큰 자산이 된다. 일본에서는 그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어 왔다. 전 생애 고용에 대한 기대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자신들의 투자를 회수할 것이라 기대하게 하였다(Aoki, 2013). 실제 1990년대 장기불황에 진입하기 이전 일본의 고용시스템은 장기·안정적인 고용(종신 고용), 연령 및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체계(연공서열제), 기업별 노동조합 등으로 요약된다(이의규 외,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은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은 되었으나, 인구성장이 멈추었을 때에는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Aoki, 2013).

저출산·고령화로 일본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15~34세)는 1980년 2,137만 명에서 2010년 1,902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 노동인구는 동 기간 912만 명에서 1,95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를 역전하였다(이의규 외, 2008).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과 경기 불황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노무비용 절감, 고용시장 유연성 증대 희망 등과 맞물려 비정규직이 확산 되게 되었다(이의규 외, 2008). 일본 총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피용자 중 정규직은 1984년 84.7%에서 2008년 65.9%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동 기간 15.3%에서 34.1%로 2배 이상 상승하였다(김은지, 2010).

[그림 4-15] 일본의 피용자수 및 정규직비정규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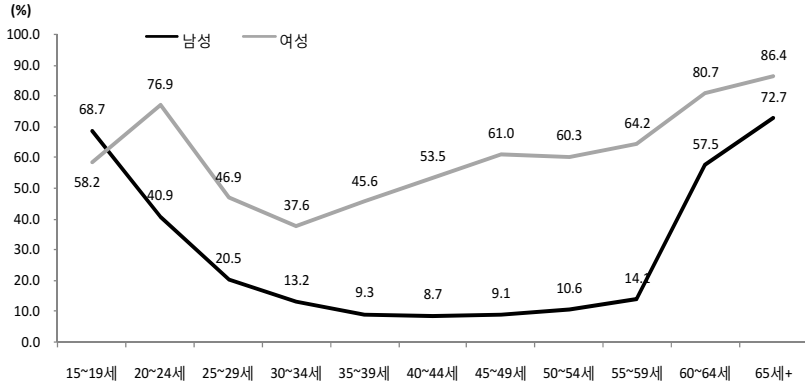


자료: 일본 총무성, 노동력조사 장기시계열 데이터; 김은지(2010)에서 재인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인적자본 향상 기회 불충분, 승진 기회 제한, 짧은 근로기간, 낮은 임금수준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Aoki, 2013). 2010년 기준 일본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34.4%(1,756만 명)였으며, 그 중 파트타임어가 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20%, 계약사원·촉탁 19%, 파견사원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는 정사원·정직원이 311.5천 엔인데 반해, 그 외 노동자들은 정사원의 63.6% 수준인 198.1천 엔으로 나타났다(울산저널, 2013.05.29일자).²⁴⁾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저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4) 비정규직 비율은 일본 34.4%, 한국 47.8% 그리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일본 63.6%, 한국 49.7%(울산저널, 2013.05.2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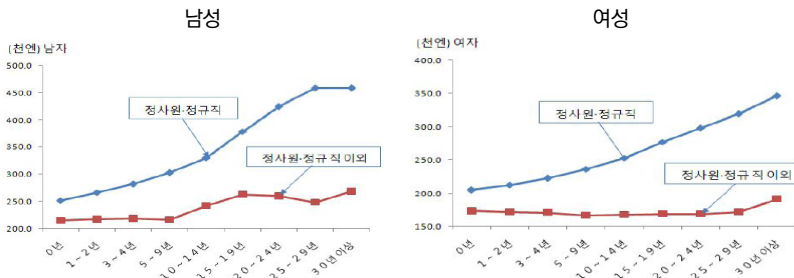
[그림 4-16] 일본의 연령별 남녀 비정규직 비율



자료: 후생노동성(2013). 2012년 국민생활기초조사의 개황;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²⁵⁾에서 재인용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속연수와 임금을 비교하면, 정규직은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상승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거의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은지, 2010).

[그림 4-17] 일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속연수 및 임금 비교



주: 2008년 기본(소정내)급여 기준으로 산정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労働統計データ検索システム.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김은지(2010)에서 재인용

25) <http://www.koilaf.org/board.do?boardConfigNo=4&menuNo=38&action=view&boardNo=27719>

비정규직 근로자 중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층 중 프리터족(Freeter) 혹은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리터족이란 15~34세 재학생과 기혼 여성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프리터는 2003년 217만 명을 점점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25~34세의 상대적 고연령계층과 고학력계층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의규 외, 2008). 니트족이란 15~3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가사에도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정의된다. 니트족은 2007년 약 61만 명 수준이었다(이의규 외, 2008).

고령화 및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 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급여 상승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은 젊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기간 근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젊은층에서의 고용형태 변화는 몇 가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Aoki, 2013).

첫째 기업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현재의 직업과 외부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축적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층으로 하여금 결혼 혹은 가족을 꾸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출산율 하락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인구고령화 가속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Aoki, 2013).

둘째, 젊은층에 대한 직업훈련기회의 축소는 기업차원에서 기존 고령 노동자들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고,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간 자신들이 잘 수행하여온 분야에 집중하도록 한다. 자동차, 전기제품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고령인력 및 과거의 기술과 지식에의

집착은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Aoki, 2013).

한편, 국내의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한다고 해도 향후 노동력의 축소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30년 동안 약 2,4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2030년 기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약 20% 수준이다. 즉, 인구 감소에 의한 국내 노동력의 부족을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으로 보완하려는 안은 실시한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松谷明彦, 2002).

2. 인구변동의 사회적 영향

가. 사회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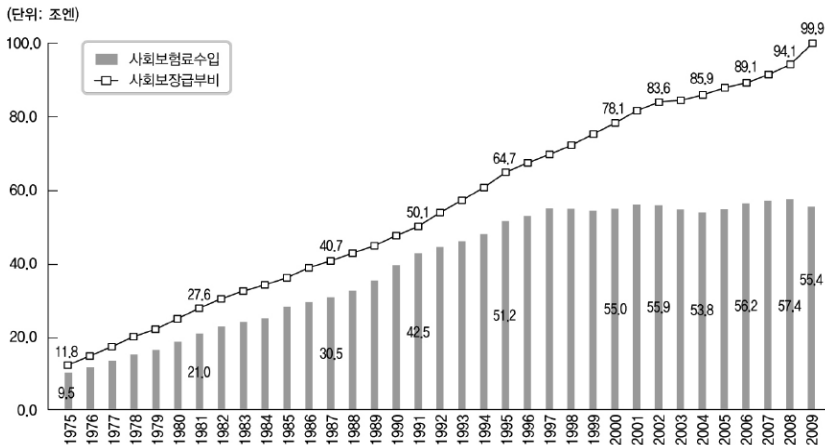
고령화는 다양한 방면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은 사회보장 각 부분에서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연금제도 유지에 대한 불안감의 증대나 의료비나 개호 비용의 부담 증가에 대한 불안감, 고령자 복지 시설의 양적 부족에 의한 대기 상황에 대한 불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연금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실로 일본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몇 가지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두 가지 공적연금 중 하나인 후생연금(kosei nenkin)의 대상연령이 55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물가에 연동하는 인덱스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이 통과되었지만,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아 물가하락 시에는 적용

되지 않도록 부칙을 만들었다. 그 결과 연금은 2005년 이후로 구매력 부문에서 과다하게 지출되어 왔다. 이러한 과지출을 수정하기 위하여 2012년에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Aoki, 2013).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지출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복지지출 중 고령자 복지지출이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1990년을 기점으로 세입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세출이 확대되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채를 발행하여 왔으며, 적자 확대 요인 중 사회보장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이른다(이지평·고가영, 2012). 실로 사회보장급부비와 사회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보험료 수입은 큰 변동이 없으나, 사회보장급부비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2012년 초 국가채무비율은 22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우, 2012).

[그림 4-18]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와 사회보험료수입



자료: 일본 재무성(2012); 서세욱(2012)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부가방식 즉, 현역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고령자세대가 급부를 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율이 높고 현역세대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현재 일본과 같이 현역세대의 비율은 낮고 고령화 비율은 높은 경우에는 현역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김명중, 2012). 의료보험도 고령자의 경우 부담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인데, 일본은 매년 의료보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국중호, 2012). 즉, 적자가 발생하면 다음해 혹은 그 다음해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어 ‘고령자/현역세대’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현역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국중호, 2012). 그 결과 국민소득대비 사회보장급여비 비율은 2011년 21.9%에서 2075년에는 40.8%로 상승할 전망이다(鉢木, 2010; 국중호, 2012에서 재인용).

〈표 4-5〉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비 전망

(단위: 조엔, %)

	2011	2015	2025	2035	2050	2075	2100
사회보장급여비	95.0	106.0	134.6	167.7	225.6	293.2	339.7
(국민소득대비 비율)	(21.9)	(23.1)	(25.3)	(28.9)	(36.2)	(40.8)	(39.2)
연금급여비	54.0	59.0	68.5	84.5	114.6	147.4	169.3
(국민소득대비 비율)	(12.5)	(12.8)	(12.9)	(14.6)	(18.4)	(20.5)	(19.5)
의료보험급여비	32.0	37.0	49.2	60.1	78.8	100.2	115.5
(국민소득대비 비율)	(7.4)	(8.0)	(9.3)	(10.4)	(12.6)	(13.9)	(13.3)
개호보험급여비	9.0	10.0	16.9	23.1	32.3	45.6	54.9
(국민소득대비 비율)	(2.0)	(2.3)	(3.2)	(4.0)	(5.2)	(6.3)	(6.3)
국민소득	433	461	531.2	580.4	624.0	718.5	866.3

자료: 鉢木, 2010; 국중호, 2012에서 재인용

나. 라이프스타일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구규모는 약 100년 전 고도경제성장기(1950년

대 후반~1973년)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기 이전의 인구규모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 쇠퇴를 초래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로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각 산업 분야에서는 합리화, 기계화, 에너지 절감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마스타니(松谷明彦)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회에서의 사회 환경 변화로 개인들은 생활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생활패턴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즉, 물질적 풍요로움에 관계없이 개개인이 자신에 맞는 생활스타일을 선택하는 사회로 변화해나간다는 의미이다.

그간 일본 사회는 개인보다는 ‘국민 모두’라는 공동체의 가치관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사회로 도래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는 결여되어 있었으나, 개인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일본 사회는 다양화 속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닌 다양화라는 새로운 풍요로움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는 ‘국민 모두’라는 의식보다 ‘개인’이 중심이 되는 의식이 생겨날 것이라는 의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감소의 경제로 원하는 이에게는 더욱 풍요로운 소득을 위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기술 혁신은 여가 시간을 확대하게 된다. 종신 고용·연공서열제가 점차 사라지면서 ‘일하지 않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다양한 취업 형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 아래에서 새로운 풍요로움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부여되고 사람들의 생활에 여가 시간의 증가라는 새로운 축과 그것이 가져 온 풍요로움이 더해질 것이다(松谷明彦, 2009).

물론 마스타니(松谷明彦)의 주장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자 거대한 변화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위한 제언이므로, 30년 후 혹은 50년 후에 일본 사회가 실제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후세 역사가의 검토에 맡길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변동의 영향 비교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의 국가별로 인구변동요인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에서의 향후 인구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가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전개된 관계로 인구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 변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관계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1995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인구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은지 오래이다. 경기 불황과 더불어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노무비용 절감, 고용시장 유연성 증대 희망 등이 맞물려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1990년대 이미 사회보장지출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220%까지 증가하였으며 젊은층의 부양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인구감소사회에서는 그간 ‘국민 전체’를 중시하던 의식이 ‘개인’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일부 등장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저출산현상이 여타 어느 국가에 비해서 아주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그간의 인구변동에 따른 효과가 가까운 미래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거대한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2020년경부터 그와 같은 변화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2017년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맞물려 고령근로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젊은층의 부양부담 증가 및 장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장기화되었던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통폐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비단 교육부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향후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구조의 재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인구변동, 사회경제적 발전, 인구정책 간 부조화로 현재 인구 규모의 급격한 증가, 성비불균형, 도시화 심화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사회·경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그간 생산성이 풍부하였던 인구구조로 인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경험하여 왔으나, 그 효과가 약해지고 있으며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²⁶⁾을 맞이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에는 신규 진입 노동자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노동력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진행과 자연증가율의 감소로 소비(내수)는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인구고령화가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는 개인이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거나 사회보장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가 아닌 상황

26) 개발도상국에서 농촌의 저렴한 인력으로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노동력이 고갈되는 시점에 임금이 급등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

에서 고령화가 먼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심각한 도심화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문제되고 있으며, 도시화에 더해 중국의 호적제로 인한 유동인구와 호적인구 간 차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적인 사회계층구조가 형성되는 중인데 계층 간 장벽이 높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유동인구의 증가로 문화 간 교류와 융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한 일부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문화 소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중국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으로 가까운 미래에 혼인시장과 노동시장 등에서 남녀 불균형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종합하면, 일본이 가장 먼저 인구규모 축소,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경험하였으며, 뒤이어 한국에서도 유사한 영향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아직까지는 인구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 상태가 아니나 현재의 인구추이가 지속될 경우 먼 미래에는 한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인구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경로나 그 영향 정도가 일본이나 한국의 그것들과 다소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 인구 및 사회가 지닌 특징(성비 불균형, 도시화, 대규모의 유동인구, 소수민족 해체 등)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인구구조 고령화 문제와 결합하여 증폭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나 경로를 변경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결국 한·중·일 3국은 시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인구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중·일 간 공유될 수 있는 인구의 장점(예로 풍부한 노동력 등)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인구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각국은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극동아시아의 국제적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즉, 한·중·일의 ‘인구 세력’ 약화는 세계 중심지의 한 축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극동아시아에서 타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전(shift)시키는 촉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중국 및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동은 각국의 자체적인 인구문제로만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접한 3국 간에 인구 문제에 의한 국력 쇠퇴는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작금의 인구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준다. 이는 각국의 인구전략과 지역공동의 인구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제5장 한·중·일 인구정책 변화

제1절 한국의 인구정책 변화

제2절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제3절 일본의 인구정책 변화

제4절 한·중·일 간 인구정책 비교

5

한중일 인구정책 변화 <<

제1절 한국의 인구정책 변화

한국의 현대사에서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 초 이래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1~1995),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기(2004~현재)이다.

1.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1~1995)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1955~1960년 기간 동안 연평균 3%로 아주 높았다. 이와 같은 높은 인구증가율은 당시 낮은 경제성장률을 잠식하여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에 가족계획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가족계획사업 초창기에 전국 183개 시군구 보건소 내 가족계획상담실을 설치하고, 무료로 피임방법(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등)을 보급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가임기 기혼여성(20~44세)의 피임실천율을 1971년에서 45%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이삼식 외, 2005). 사회지도층 홍보·계몽교육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해 전국 읍면에 배치한 가족계획요원을 훈련하였다(한국인구학회, 2006).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제1차 경제개발5개년 사업이 종료되는 1966년에는 인구증가율이 2.7%로 감소하였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인구증가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해 출생아수는 1백만 명 수준으로 높았다. 이에 한국정부는 가족계획의 목표를 1960년대

후반 ‘세 자녀 낳기’에서 1970년대에 ‘두 자녀 낳기’로 조정하였다. 두 자녀 낳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1973년 모자보건법을 공포하였다. 동 법으로 인하여 우생학적·유전적 이유, 특수 전염성 질환,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 불가한 혈족 내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母)의 건강에 유해한 경우에 한하여 임공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이삼식 외, 2005). 또한 불임시술과 피임기구를 활용한 피임법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정부 공인 하에 국고보조를 지원받아 합법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1974년에는 대상별(도시영세민, 예비군 등)로 가족계획을 추진하였으며 3자녀까지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최초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1975년에는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지원 아래 지역사회중심피임보급사업(CBD)을 전개하여 전문의료인이 아닌 지역사회 내 기존 인력 및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피임약 및 기구를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1976년에는 부총리 산하에 인구정책심의회(Populat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산 억제를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인센티브에는 소득세 면제 대상을 2자녀까지로 축소, 도시저소득층 및 영세민이 불임수술을 받는 경우 생계비 보조, 취로사업 참여 우선권 지급 등이 해당된다. 1978년에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던 각종 가족법으로 인한 상속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남녀 구별 없이 ‘둘 낳기 운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가족법을 개정하였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이와 같은 노력으로 198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1.54%까지 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국정부는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82~1986)의 일환으로 모든 부처가 참여한 인구증가억제

정책(49시책)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2000년까지 인구증가율을 1%수준까지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동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피임시술비의 인상 등 가족계획사업 관리제도 개선, ②새마을사업을 통한 사업 강화 등 피임보급의 확산을 위한 시책, ③피임실천 및 소자녀 가치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④자비피임실천의 촉진, ⑤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제도개선, ⑥홍보교육활동의 강화방안 등이 해당된다. 1983년은 총인구가 4천만을 돌파(1883년 7월 29일)한 시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인구폭발이 가져올 위기'에 대한 전 국민 홍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한편, 강력하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율 감소 목표의 조기 달성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출생성비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강하게 뿌리잡고 있던 시기에 자녀수 감소를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출생성비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것이다. 이에 태아 성감별 제공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의료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출가여성의 직계존속 포함, 가족법 개정 등의 노력이 있어 왔다.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결과로 1986년에 인구증가율 1% 이하, 합계출산율 1.6명이라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당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통하여 합계출산율을 1988년까지 인구대체수준까지 감소시키고자 하였으나 1983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제6차5개년계획(1987~1991) 수립 과정에서는 합계출산율의 목표를 1995년 1.75명까지 감소로 설정하였으나 1984년에 1.74명을 도달하는 등 출산율은 정책목표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감소하였다(이삼식 외, 2005).

2.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

한번 감소하기 시작한 출산율은 좀처럼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

다. 합계출산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는데 이에 그간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근간으로 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는 1995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 규모 및 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및 인구정책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현상의 지속은 노동력 감소,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의 가중과 노동생산성 감소,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 등을 유발하며, 당시의 비정상적인 출생성비 및 높은 인공임신중절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996년 출산율이 이미 1.57명이라는 낮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야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이삼식 외, 2005).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로 1997년부터는 그간 출산율 저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2자녀까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였다. 예로 2자녀 출산까지 지급하던 의료보험 분만급여, 소득공제, 승진 우선제도,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등의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은 것이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1999년에는 인구정책의 방향성 전환에 따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인구자질향상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출산수준 유지, 사망률 개선, 출생성비의 균형, 인공임신중절 예방, 남녀평등, 청소년의 성 활동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구분포의 균형, 가족보건 및 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이 해당된다(이삼식 외, 2005).

3. 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기(2004~현재)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는 지속되었다. 과거 30여년 이상 강력하게 추진

되어 온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가임기인구의 소자녀관이 고착화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및 사회진출 증가로 저출산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이 낮은 수준의 ‘1.08쇼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초저출산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저출산’은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저출산현상에 대응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에 법적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9월 1일 시행). 동년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는 국가 책무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거하여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시행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저출산분야, 고령사회분야 및 성장동력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저출산분야에서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에서 70개 이행과제, 매년 200여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저출산 분야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저출산 정책은 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결혼-출산-양육의 장애요인들에 대응하여 만혼화 예방, 육아지원,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일-가정양립 제고, 가족가치관(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함양 등을 주요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고령사회분야에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인

건강 및 의료보장 내실화, 주거·교통·문화 등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추진 등을 주요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성장동력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활용도 제고,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 등을 주요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08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5-1〉 한국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구조(중점추진과제)

저출산분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분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분야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기반 조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안정적인 노후생활 여건 조성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고령인력 활용 시스템 구축 ◦외국적동포·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학교·사회교육 강화 ◦가족생활 문화여건 조성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후건강관리 기반조성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확충 ◦평생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활용도 제고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조성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도입 ◦자산운용산업 육성 ◦장기국채시장 활성화
		-성장동력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인프라 조성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클러스터링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11년에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 22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저출산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차 기본계획에서는 ‘보육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양립 등에 주요 초점을 두었다. 이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정책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조성 등을 주요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분야에서는 총 9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주요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총 7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성장동력분야에서는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주요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과제로는 총 58개가 해당된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의 모든 분야에 대한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 강화 및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 강화 등의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표 5-2〉 한국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구조(중점추진과제)

저출산분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분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분야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 ◦노후생활 설계 강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가족형성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확충 및 체계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 보장 확대 ◦의료보장내실화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방안 마련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제공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고령화에 따른 주택 및 금융 수요 변화에 대응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자료: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제2절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중국의 인구정책은 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는 현재 중국의 상황이 “인구는 많지만 기본생활 인프라가 열악하고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 경제, 자원, 환경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구와의 관계이다. 중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주로 인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문제가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라는 인식도 있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1982년에는 계획생육(计划生育)정책이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정책 사안으로까지 중요시 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인구정책은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1949~1970년대 초반으로 인구 증가 억제에 대한 초기 논의가 진행되는 시기이며, 2단계는 1970~1990년대 초반으로 계획생육(计划生育)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시기이고, 3단계는 1990년대 초반~현재로 계획생육(计划生育)정책이 안정된 시기이다.

1. 인구증가억제정책 필요성 논의 등장(1949~1969)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고 분위기였다(Riley, 2004). 당시 조출생율은 30%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인구 증가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일부에서 인구증가 억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인추(馬寅初)의 신인구론(인구억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구 제한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비난을 받았다(伊藤正一, 2013). 그러나 마오쩌둥(毛澤東)의 인구사상은 1950~1960년대 중국의 인구폭발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였다(김범송, 2010).

한편, 마오쩌둥(毛澤東)은 경제부흥운동으로 대약진운동(1958~1960)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약진운동은 오히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농촌의 쇠퇴와 준비되지 않은 도시지역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더해 1959~1960년간 발생하였던 자연재해(홍

작 등)로 사망률이 급증하고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4.57%)로 나타났다(김범송, 2010). 대약진정책과 자연재해 시기의 억제되었던 출산은 1962~1963년 기간 동안 일시적인 베이비붐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60년대에 들어 산아제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말에는 ‘계획생육(计划生育)’이라는 용어가 정부 문서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계획생육(计划生育)’의 목표는 출산 및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는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이 주된 대상이었다(伊藤正一, 2013). 첫 번째 산아제한 캠페인은 1960~1966년 동안 이루어졌다.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소규모 가족의 이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만혼, 긴 터울의 출산, 소규모 가족 등을 장려하고, 피임이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하였다(Riley, 2004). 1965년 계획생육정책의 슬로건은 “하나는 적지 않고 둘에서 마치고 셋은 많다”였다(김범송, 2011). 동 기간(1960~1966년) 동안 일부 도시지역에서 출산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출산율 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Riley, 2004).

2. 인구증가억제정책의 본격적 추진(1970~1990년대 초)

1970년대에 들어 인구억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시기에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구정책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인구정책은 “晩·稀·少(더 늦게, 더 오래, 더 적게)²⁷⁾”로 요약된다. 동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으로의 보건서비스가 확대

27)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 간 터울을 길게 하고 출산을 적게 하자는 운동

되고,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출산수준목표도 최초로 설정되었는데, 1970년대 초반에는 2명이하의 자녀를 장려하였다면 1970년대 후반에는 1명의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는 출산을 중단하도록 장려하였다(Riley, 2004).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합계 출산율은 6에 근접한 높은 수준에서 1970년대 말 2.4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1.4까지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8년 신헌법에서는 “국가는 계획생육(计划生育)을 제창하고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尹豪, 2013), 1979년에는 마인추(馬寅初) 교수의 신인구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伊藤正一, 2013). 정부차원에서도 장래 인구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제기되었는데, 이와 같은 논의는 과거 대규모 출생코호트로 인하여 당장은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에코효과(echo effect)에 의하여 인구는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구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더해 덩샤오핑(鄧小平)은 과도한 인구성장이 그간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구 증가 억제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이 특별 관심 대상이었는데 이는 당시 농촌지역의 인구성장이 전체 인구성장의 75%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1979년부터는 한자녀정책이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국적으로 부부당 1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엄격히 하였으나, 소수 민족 등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1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 더 이상 출산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교육, 보건, 주택, 구직 등의 분야에서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 부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혜택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강력하게 시행되던 한자녀정책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거부반응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사회에서는 자녀 특히, 남아가 가족의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그간 엄격하게 추진하였던 정책을 지역 현실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반발을 완화하고 다자녀를 갖길 희망하는 지역에서도 한자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한 것이다(Riley, 2004).

1970~1990년대 후반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한자녀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개혁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말 2.3 수준(도시 1.4, 농촌 2.8)으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인구대체 수준(2.1) 이하로 감소하였다. 빠른 속도로 저출산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54%정도는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한자녀정책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실제 부모들이 희망자녀수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3. 인구자질향상정책 및 한자녀정책의 안정기(1990년대 초~현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정책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한자녀정책”에서 1995년을 전후로 “훌륭한 아이를 적게 낳자”라는 인구자질 측면의 정책도 추가된 것이다. 2000년 정부는 “인구와 산아제한 업무를 강화하여 출산율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여 부부 당 1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권유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2번째 자녀도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2년에 실시한 「중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을 근간으로 각 시(市), 성(省), 자치구(自治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아제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및 집단별로 차별적 특성을 반영함에 따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이고 단

기적인 측면도 고려함으로써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한자녀정책의 조정 및 “단독이태(單獨二胎)²⁸⁾”의 두자녀정책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국가인구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과 제18차 전당대회의 보고서 내에서도 한자녀정책에 대한 수정이 언급되었다. 2013년에는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国家卫生计生委)에서 한자녀정책에 대한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요컨대 최근 중국의 출산정책은 한자녀정책에서 “단독이태(單獨二胎)”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2015년 이후에는 “이태(二胎)정책” 즉, 두자녀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인구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을 전략을 임무로 삼아 국가 12·5(十二·五) 계획²⁹⁾과 “작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전체 부처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출산정책을 수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의 노인인구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노후보장과 장기요양 등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노후 서비스 시스템과 장기 보살핌을 위한 보험제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인구변동, 사회·경제 발전, 국가정책조정 간의 문제로 오랜 시간동안 우회하는 길을 걸어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70년대까지 계획출산정책을 20여년간 실시하였으나, 당시 인구변동의 복잡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미흡 및 잘못된 판단으로 1950~1960년대 중국 인구는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이는 취업난과 경

28) 부부 중 한명이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인 경우, 자녀를 1명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

29) 국가인구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의미

제 쇠퇴, 정치적 혼란 등이라는 일련의 결과를 야기하였다. 요컨대, 인구 변동 및 그 영향은 위험이 크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하고 주동적으로 나가야지만 인구변동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거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

4. 최근 인구동향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앞서 분석했듯이, 현재 중국이 당면해 있는 인구변동단계는 이전과 확연하게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 201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中华人民共和国2012年国民经济与社会发展统计公报)’(国家统计局, 2013) 등을 통해 현재 중국의 인구변동의 10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이들 특징은 과거 인구변동이 만들어낸 영향이 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요인이 되기도 한다.

첫째, 총 인구규모는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말 중국 총 인구는 135,404만 명으로 이 전년도 말에 비해 699만 명이 증가하였다. 과거 자료³⁰⁾를 종합하면 중국 인구의 성장 둔화는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경제발전과 출산정책이 출산율 하락에 많은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도시화 단계에 빠르게 진입하였다. 2011년 도시 인구는 처음으로 농촌 인구를 넘어섰으며, 2012년 도시 인구는 71,182만 명으로 총 인구의 52.6%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도 말과 비교하였을 때 1.3배 증가한 것이다. 1978년 중국 개

30) 1990년 제4차 전국인구센서스(全国人口普查到)~2000년 제5차 전국인구센서스(全国人口普查到)까지 10년 간 연평균 성장률은 10.7%이었으며, 매년 순증가 인구는 1,000여만 명이였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센서스(全国人口普查到)~2010년 제6차 인구센서스(全国人口普查到)까지 10년 간 연평균 성장률은 5.7%이었으며, 매년 순증가 인구는 700만 명이였다. 2011년 말에는 전년도 말에 비해 644만 명이 증가하였다.

혁개방 초기에 도시화 수준은 17.9%에 불과하였다. 즉, 총인구의 증가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빠른 도시화 수준 및 도시 규모 증가로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로 향후 10년간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매 년 1%대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셋째, 고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부를 축적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드는 현상”이 심각하다. 2012년 60세 이상 인구는 19,390만 명으로 총인구의 14.3%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도 말에 비하여 0.59% 포인트 상승한 규모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12,714만 명으로 총인구의 9.4%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1999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인구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만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사회·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먼저 진행된 탓에 “부를 축적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드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는 노인 부양 지출, 의료보장, 가정의 노인 부양부담 등 일련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출생인구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와 같은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말부터 출생성비 불균형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20년 동안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출생 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 수)는 1982년 제3차 전국인구센서스(全国人口普查)에서 108.47, 1990년 제4차 전국인구센서스(全国人口普查)에서 111.3,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센서스(全国人口普查)에서 116.9, 2010년 제6차 전국인구센서스(全国人口普查)에서는 117.94까지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한 117.7로 나타났다. 성비불균형은 혼인 문제 등의 문제를 유발할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지역에서의 취업 부담이 가중되었다. 2012년 15~59세 인구는 93,727만 명으로 전년도 말과 비교하여

345만 명이 감소하였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69.2%로 전년도 말에 비해 0.6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이 농업 대국에서 도시화된 공업국가로 변모해감에 따라 대규모의 농업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매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간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도시에서의 취업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여섯째, 유동인구의 규모가 커지고 호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난제로 부각되었다. 2012년 호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인구는 2.79억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유동인구는 2.36억 명이었다. 빠른 도시화가 유동인구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유동인구의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및 서비스 관리의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다.

일곱째, 지역 간 인구분포 불균형 및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는 빠른 속도로 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베이상광(北上廣)³¹⁾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도시 효율을 하강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와 도시의 발전, 기초 시설 및 자원·환경 문제를 악화시켜 도시 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여덟째, 인구, 자원,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구의 빠른 증가, 자원 부족, 환경오염 등은 중국 사회·경제 발전을 제약하여 중국 인구에게 생존 및 발전의 이중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홉째, 빈곤계층이 점점 감소하여 사회보장체계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2년 중국 농촌인구의 평균 순소득은 7,917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13.5% 증가하였는데, 가격적 요소를 감하면 실질적으로는 10.7% 성장하였다. 도시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은 24,565위안으로 전년

31)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의미

도에 비해 12.6% 성장하였으며, 가격적 요소를 감하면 실질적으로는 9.6% 성장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의 빈곤 인구 문제도 해소되고 있는데, 2012년 말 기준 농촌 빈곤 인구는 9,899만 명으로 전년도 말과 비교하여 2,33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농촌합작의료(新型农村合作医疗)³²⁾ 참여율은 98.1%에 달하였다. 개선된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등의 조치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열번째, 출생인구의 자질이 높지 않는 등 공공위생의 대폭적인 발전이 시급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인구 변화, 사회체제 변화, 건강 구조의 전환이라는 복잡하고 새로운 형세에 직면해 왔다. 출생인구의 자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촉진시키고, 공공위생 사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중대한 방향이 되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인구변동 및 그 영향을 매우 중시하여 경제상황과 사회발전 등 각 방면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중국의 인구문제를 조절하고 처리하고 있다.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과 높은 수준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인구변동의 발생 및 발전,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파악해야 하며 인구변동이 국가 경제 및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앞을 내다보는 예측과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이전의 인구 정책과 미래 국가 발전 전략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노동인구의 연령구조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의 '인구 보너스 시기'를 충분히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 노동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밀집형 산업은 감소하는 반면, 지식 및 기술밀집형 산업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노동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하여 보다 생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노동시장

32) 농민을 대상으로 2003년 도입한 기본의료보험제도(이소양, 2012)

에서의 정보 개방 등을 통해 구조적인 실업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杨道兵, 陆杰华, 2006). 노동인력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 시켜 과학기술로 생산력과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인력의 연령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층, 성년층, 노년층 노동력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한다. 지역 간 장점을 통해 서로 보완한다면 지역간 노동력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구 노령화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노인 소비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인구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는 거대한 관성을 가지고 있어 단시간 내에는 역전시킬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맞추어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인구 변화의 규율성에 따라 적절하게 출산정책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지역사회의 노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중시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와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킨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발전·홍보하도록 한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공공정책을 설계하고 개선하여 인구 고령화가 가지고 오는 각종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陆杰华, 2007). 특히 고령화를 사회적 부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의 거대한 노인인구로 노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陆杰华, 2000)³³⁾.

셋째, 도시와 농촌의 총체적 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공공자원의 균등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농촌인구의 경우 보장체제는 토지가 중

33) 중국의 현단계 노인산업은 초보적 단계로 향후 노인시장의 양성과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정책 부양과 유도가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에는 산업 발전 방향 제시, 투자 정책 동향, 업계 규범 및 관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심이고 이후 가족을 통한 보장이 이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의 보장체계는 도시지역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러 사회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향후에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를 도시의 사회보장체계로 편입시키고, 농업 종사자에게는 농촌 합작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등 최종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제도를 일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인구규모의 빠른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자원의 공급 부족, 유동인구에 대한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호적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호적제도는 지속적인 부작용을 보이며 인구 발전을 저해하는 거대한 근원이 되었다. 호적제도 개혁은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일체화 된 호적 등기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신분과 기회를 일체화하는 것이 향후 개혁 방향이 될 것이다 (陆杰华, 王伟进, 2012).

다섯째,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가임여성인구, 노동인구, 부양비, 도시 인구 비율 등에 있어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구문제를 경제 및 사회발전과 연관 지어 정책 설계, 위험 평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정부는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과 경제사회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전략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인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인구자질향상정책의 강화, 비정상적인 출생성비 완화, 유동인구의 합리적인 이동,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인구 발전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인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일본의 인구정책 변화³⁴⁾

일본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구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된다. 일본의 인구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강도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즉, 인구억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1945~1950년대 초반), 가족계획정책 및 인구자질향상정책(1950년대 중반~1980년대), 소자화대책(1980년대 후반~최근)이다.

1. 인구억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1945~1950년대 초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였다. 전쟁 후 국외로부터의 귀환자, 복귀병사, 전후 결혼 붐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베이비붐³⁵⁾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망률까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인구는 1950년까지 1천만 명 이상 급증하였다(竹前, 1996; 荻野美穂, 2008에서 재인용). 전후 사회시스템이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경기침체, 주택난, 식량부족, 전염병 만연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당시 일본의 인구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연합군최고사령부(Allied Forces General Headquarters, GHQ)였다. 동 사령부에서는 일본의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산아제한정책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당시 인구 규모가 국가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피임방법 보급으로 인한 성적 문란 등의 사회적

34) 일본의 인구정책 중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서는 荻野美穂(2008)의 「家族計画」への道—近代日本の生殖をめぐる政治. 岩波書店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참고자료도 활용하였다. 별도의 인용처가 없는 경우에는 荻野美穂(2008)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35) 오늘날의 단카이세대로 1947~1949년 3년에 걸쳐 약 80만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

문제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전쟁 중 실시하였던 “아이를 낳자(give birth and multiply)” 운동을 전쟁 직후 바로 수정하기에는 국민의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한편, 전후 식량난이나 생활난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하였고,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의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여성들이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갖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1948년 9월에는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인공임신중절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여전히 불법 인공임신중절이 행하여졌다. 이에 1949년에 법이 개정되어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을 더욱 활성화(1955년 1.17백만 건까지 증가)하게 하였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그 배경에는 일반 국민들이 자녀수 조절 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번거롭게 느껴진 피임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공임신중절로부터 모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우생보호법의 시행으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었으나 사망력의 감소도 빨라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전쟁 전보다 높았고 이로 인해 인구증가 및 노동력 과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후 사회경제 인프라의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증가는 경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인식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1951년에 들어서야 가족계획정책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정책을 수행할 조산사, 간호사 등 특별그룹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개별 가정을 방문하였

으며, 모성 및 영아 건강프로그램과 가족계획에 대한 풀뿌리 운동과 보급 활동을 펼쳤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2. 가족계획 및 인구자질향상정책(1950년대 중반~80년대)

1954년 7월 인구문제연구소 내 인구대책위원회에서는 ‘인구대책으로서 가족계획보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가족계획의 보급을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재단법인 인구문제연구회 인구대책위원회, 1954: 荻野美穂, 2008에서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동년 8월에는 인구문제심의회에서 ‘인구의 양적 조절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인구성장이 자본 축적 및 산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을 단순히 모성보호차원을 넘어서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⁶⁾ 후생성은 동결의를 바탕으로 3년 후 인구 증가를 연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인구증가억제시책요강(안)’을 작성하였다. 즉, 인구억제정책이 공식적인 국가의 정책으로 선언된 것이다.

한편, 일부 기업(철강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계획을 이미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가와사키제철소의 노무부장이 근무시간에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자녀 질병 등 가정생활의 불안”이라고 생각한 이후, 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수

36)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①가족계획추진을 위한 부처 설치 및 민간단체 협력 촉진, ②출산조절을 돕는 지도원의 적극적 활동 장려, ③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피임기구 등 배포, ④빈곤층에는 피임기구를 무상 또는 저비용에 배포, ⑤공장, 광산 등 사업소 후생기관에 대해 가족계획 실행 촉구, ⑥급여와 세제면에서 출산을 장려하지 않도록 주의, ⑦인구의 양적·질적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및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 ⑧의학교육 과정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기술 전수, ⑨인공임신중절 시 환자에게 가족계획 안내 규정 마련 등이 해당된다(인구문제심의회, 1955: 荻野美穂, 2008에서 재인용).

단으로서 가족계획을 지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가족계획을 실시하려는 기업의 경우, 일원화된 조직이 없어 공중위생원, 인구문제연구회, 후생성 공중위생국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했다. 이에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신생활지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가족계획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일부 기업(탄광, 철광회사)의 관계자도 포함되었다.

철강회사의 모범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신생활운동은 초반에는 기업차원에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품질개선, 복리후생비 감소 등을 통해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이 경영자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1955년 기업의 신생활운동이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는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기업들은 근로자의 출산과 인공임신중절을 줄여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억제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즉, 개인의 행복추구가 국가 혹은 기업의 이익과 모순되지 않고 하나가 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운동은 대기업에 한하여 추진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신생활위원회와는 별도로 1954년 가족계획운동의 또 다른 중심점이 된 민간조직 즉, 일본가족계획보급회(현 일본가족계획협회)도 설립되었다. 동 보급회의 설립으로 인하여 이전까지 가족계획이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기 되었다.

가족계획정책은 대도시부터 시작하여 중소도시, 농촌의 순서로 전파되었고 고립된 지역일수록 확산속도가 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6년 이후에는 도도부현 지역에까지도 어느 정도 정책이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산아제한을 국가적 이익 등과 연결하는 추상적 이념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여온 적극적인 정책으로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4~5명 수준을 유지하였던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1957년 인구대체수준(2.1명)에서 안정화되었다.

1962년에는 인구정책이 또 한 번 변화하였다. 기존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고도성장 하에 사회복지 향상이 경시되어있다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김범송, 2010).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주된 이유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1973년에는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여성 고용율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만혼화 경향 및 출산기피 현상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Retherford and Ogawa, 2005). 그러나 출산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인구 정책은 주로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변화되었다(김범송, 2010).

3. 소자화대책(1980년대 후반~최근)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온 출산율은 1989년 1.57명까지 감소하였고, 이는 ‘1.57쇼크’로 알려져 있다. 1.57쇼크로 인해 소자화(少子化)경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소자화 극복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저출산 “문제”라 칭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출산현상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또한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김범송, 2010).

소자화에 대응한 첫 번째 정책은 1994년 12월 수립된 엔젤플랜(1995~1999)이다. 엔젤플랜이란 육아를 부부와 가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과 중점대책을 수립한 계획이다. 엔젤플랜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확충 및 보육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엔젤플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에서도 알 수 있다. 동 플랜으로 인하여 공립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보육서비스로는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일시 혹은 시간제 보육, 초등학교생을 위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 등이 도입되었다. 1995년에는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되기도 하였다. 개선방안은 육아휴직급여로 임금대체수준의 25%까지 지원하였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로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불 대상에서 면제하였다(이삼식 외, 2009b).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bubble economy)가 붕괴됨에 따라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고용불안정 심화, 교육연장, 만혼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이삼식 외, 2009b).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 12월에 신엔젤플랜(1999~2004)을 공표하였다. 신엔젤플랜의 취지는 일-가정양립, 육아부담 제거,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통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신엔젤플랜은 종료 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보육서비스 확충 외에 고용, 모자보건,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소자화백서, 2008; 김범송, 2010에서 재인용).

2002년에는 ‘저출산대책 플러스원’이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신엔젤플랜에 더해 남성 등의 근로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등을 강조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육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방침에 근거하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되었다. 차세대육성지원법을 통해 지

자체와 기업주는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실천하게 되었다. 차세대육성지원법의 의의는 보육서비스에 치중한 소자화대책을 시정하고 잃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육기능을 재생하여 통합적인 차세대육성지원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차세대육성지원법이 제정된 시기에 소자화대책기본법도 제정되었다. 소자화대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간의 소자화대책(신엔젤플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2003년 2개 법(차세대육성지원법, 소자화대책기본법)의 제정은 일본의 가족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적 가족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김범송, 2010).

그러나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2005년에는 ‘아동육아응원계획(2005~2009)’이 추진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그간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의 범위를 넘어 젊은층의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방식 개선, 육아지원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130개의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에는 소자화대책의 강화 및 전환을 위하여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 그리고 2007년에는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이 책정되었다. 2008년에는 국제적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5가지 안심플랜’을 제시하였다. 동 안심플랜 내에서 소자화대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어린이기금, 육아응원특별수당, 임신부건강진단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아지원 촉진 등이 포함된다.

2010년에는 새로운 소자화대책인 ‘어린이·자녀양육비전(2010~2014)’이 제시되었다(표 5-3). 동 비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자녀양육을 지원한다’, ‘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진다’의 2가지 기본 원칙 하에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시책과 목표를 설정하였다(이삼식 외, 2009b).

〈표 5-3〉 일본의 어린이·자녀양육비전(2010~2014)

4대 정책	12대 주요시책
1. 자녀성장을 지원하여 젊은이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① 자녀를 사회전체가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기회의 확보를 - 자녀수당 창설(중학교 졸업까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원) - 고교의 실질 무상화, 장학금의 충실 등 학교교육 환경 정비 ② 의욕을 가지고 취업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 비정규 고용 대책, 젊은이의 취업지원(커리어 교육, 슝, 가이드 등) ③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기회를 - 학교, 가정, 지역의 구조, 지역이 함께 자녀 교육에 착수하는 환경 정비
2.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로	④ 안심하여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 조기의 임신 계출(임신에 이르도록) 권장, 임부 건강검진의 공공부담 - 상담지원체제의 정비(임신, 출산, 인공임신중절 등) - 불임치료에 대한 상담이나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⑤ 누구나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잠재적 보육필요성 충족을 고려한 보육소대기아동 해소(여유교실 활용 등) - 새로운 차세대육성지원을 위한 포괄적 일원적인 제도의 구축을 위한 검토 - 유아교육과 보육의 총합적인 제공(유·보 일체화) - 방과후 자녀플랜의 추진, 방과후아동클럽 내실화 ⑥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안심하여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소아의료체제의 확보 ⑦ 1인 부모가정의 자녀가 빈곤하지 않도록 - 아동부양수당을 부자가정에도 지급, 생활보호의 모자가산 ⑧ 특히, 지원이 필요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하여 생애단계에 맞는 일관된 지원의 강화 - 아동학대의 방지, 가정적 양호의 추진(패밀리리움의 확충 등)
3. 다양한 네트워크로 자녀양육의 힘이 있는 지역사회로	⑨ 자녀양육지원의 거점이나 네트워크의 충실이 이루어지도록 - 유아의 전가구방문 등(안녕하세요 아가야 사업 등) - 지역자녀양육지원 거점의 설치 촉진 - 패밀리리포트센터의 보급 촉진 - 상점가의 빈 점포나 학교의 여유교실, 유치원 의 활용 여유 - NPO법인 등의 지역 자녀양육활동의 지원 ⑩ 자녀가 집이나 시내에서 안전, 안심하여 살 수 있도록 - 양질의 패밀리 용 임대주택의 공급촉진 - 자녀양육장제 제거(차별 해소, 자녀양육세대에 편리한 화장실 정비 등) - 교통안전교육 등의 추진(유아2인 동승용 자전거의 안전이용의 보급 등)
4. 남성도 여성도 일과 생활이 조화되는 사회로 (work life balance 실현)	⑪ 일하는 방법의 개편을 - 〈일과 생활의 조화 현장〉 및 〈행동지침〉에 근거한 구성의 추진 - 장기간 노동의 억제 및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촉진 - 텔레워크(telework)의 추진 - 남성의 육아휴직의 취득 촉진(파파·마마육아휴직 플러스) ⑫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실현을 - 육아휴직이나 단기간근로 등의 양립지원제도의 정착 - 일반사업주행동계획(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책정, 공표 촉진 - 차세대인정 마크(Kurumin)의 주자·조성촉진

자료: 일본정부, 각의결정(2010년 1월 29일): 이삼식 외(2009b)에서 재인용.

제4절 한·중·일 간 인구정책 비교

한·중·일 3국의 현대사에서 전개되어 온 인구정책의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몇몇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의 변천은 대체적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이후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출산장려 혹은 출산억제 완화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다산소사에서 소산소사로 이어지는 제1차 인구전환(demographic transition)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요컨대, 시차는 존재하나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천에 대응하여 인구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표 5-4〉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 전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국		인구억제정책				자질향상	저출산대응정책
중국	인구억제정책 등장		인구억제정책 본격 추진			인구자질향상, 한자녀정책 안정기	
일본	인구억제소극	가족계획적극적 추진, 인구자질향상				저출산대응정책	

두 번째,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 시작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 출발점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중국은 건국 시기인 1949년, 한국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1년이다. 그러나 논의 내지 논쟁을 거친 후 실제 강력한 수단을 통해 출산을 억제하기 시작한 시기는 다르다. 일본은 1946년 이래 미군정 시

대에 인구증가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거친 후 1951년에 이르러서야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수단을 가동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1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듬해인 1962년에 바로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건국 이후 인구 증가에 대한 찬양 사상과 반대사상을 차례대로 거친 후인 1979년에 이르러서야 한자녀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요컨대, 출산억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이전의 논쟁 기간은 한국에서 1년으로 아주 짧고, 일본은 5년 그리고 중국은 무려 30여년에 이른다. 물론, 3국 모두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한 주된 이유로는 인구 성장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중·일 3국 모두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시기에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인구자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인구자질향상으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이미 낮아진 출산율을 그 수준에서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가하는 주된 이유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인공임신중절의 폐해로 많은 인구자질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구에 대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간의 조화 없이 출산율 억제만을 위한 일방향만으로는 정책이 인구 자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네 번째, 한·중·일 3국의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 혹은 출산억제완화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된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51년 가족계획사업 도입 이래 1989년 '1.57쇼크'를 계기로 엔젤플랜을 도입한 1994년까지 43년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 도입 이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까지 총 44년이 소요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기에 기존의 한자녀정책

이 다소 완화되어 단독이태(單獨二胎)³⁷⁾ 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1980년 한자녀정책이 본격화된 이래 약 35여년 만에 다소 완화되어 추진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쳐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이 정점에 도달하고 1인당 GDP 등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기 이전에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고, 조만간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도 빠르게 고도성장과 선진국에 도달하기도 전에 저출산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37) 부부 중 한명이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인 경우, 자녀를 1명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



제6장 미래 인구전략

제1절 인구변동, 인구정책, 경제성장 간 연관성

제2절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제3절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

제1절 인구변동, 인구정책, 경제성장 간 연관성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인구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서구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산업화, 현대화 및 도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인구변천과 사회경제적 발전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인구통제와 경제발전이 함께 맞물리면서 진행되어 왔다(Sodei, 1996). 즉,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통제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서구의 경험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산업화가 도시화와 핵가족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어서 경제발전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다주었고 이로 인해 영양의 증진, 공중위생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이루어지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게 된 것이다. 서구에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좀 더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구통제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보다도 늦게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중·일 3국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인구 및 산아조절을 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952년에 ‘공공위생 및 우생보호법(Public health and eugenic protection law)’의 실시로 가족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후 계속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에 전국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였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던 가족계획은 급속한 인구변천을 주도하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1979년에 개혁개방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한자녀정책을 공포하면서 강력하고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가족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중·일 3국에서 실시한 가족계획은 그 실시시기는 각각 달랐지만 강력한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에 관한 통계를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선진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총소득의 규모도 2005년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의 규모에 있어서는 2010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일본이 여전히 다른 두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보다 매우 높은 소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일본은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었으나 한국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연평균 10%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중·일 3국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세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경제성장의 과정을 시작했고 아직도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인구고령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돌입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늦게 가속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구고령화의 과정도 일본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며 노인인구의 비율도 일본보다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3나라 가운데에서 경제성장의 과정도 가장 늦게 시작하였고 인구고령화의 진행정도도 가장 늦게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비율도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 사이에 해당하는 고령화사회의 단계에 있으나 한국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중국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특징을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고령의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어서 노동가능연령층 인구비율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노인과 병약한 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일본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초저출산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침체는 세수 감소를 불러와 복지정책의 폐기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여기에다가 노동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노인과 병약한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의료비용의 부담을 비롯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국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저개발상태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구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인구고령화는 대체적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된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서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에 체계를 세우면서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에서는 총량적인 경제성장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어 세계 2위의 막강한 경제적인 위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Hong, 1996). 중국 인구고령화의 또 다른 특징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이미 1억명을 넘어 섰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의 절대인구는 일본의 전체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며 한국의 전체 인구보다는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중국에서의 인구고령화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 주는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 사회경제적 영향 및 인구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미래의 인구전략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 번째 시사점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가 인구변천이론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명료하게 변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인구정책은 그러한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초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고 인구고령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진입한 후에서야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구정책의 미래대응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정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가시적인 미래의 인구변동에 대해 사전예방적인 기

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구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두 번째 시사점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은 속도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변화해 왔다. 무엇보다도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출산장려 또는 출산억제완화로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고령화대응정책을 시작함으로써 21세기에 들어 한·중·일 3국 간 인구정책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중·일 3국 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실로 본 연구의 목표는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 추이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그리고 그간 인구정책 추진내용을 토대로 미래의 인구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의 미래 인구 변동은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로 압축된다. 그로 인하여 한·중·일 3국에서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지출 부담,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의 수급 불균형 등이 야기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과 이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에 과연 어떠한 인구전략을 통해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한·중·일 3국 간 공동의 미래 인구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을 논의하고, 이어서 한·중·일 3국의 미래 공동인구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는 적어도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로

해결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의 인구문제를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 국제이동에 의존하여 해결하려한다고 하면 인접한 중국과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region)의 국가들의 인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론상 문화권이 다른 국가의 인구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세계적 인구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등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중·일 간 해외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관계가 치열해질 수 있다. 이는 해외인적자원의 유치에 보다 큰 고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자국 스스로의 인구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주된 전략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국내 인적자원의 질 향상과 활용도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를 세계 GDP에 대한 기여도 2.2%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성장과 복지 간 균형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인구로 간주할 경우,³⁸⁾ 2020년 4,960만 명, 2040년 5,031만 명, 2060년 4,747만 명, 2080년 4,299만 명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인구동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2040년 5,109만 명, 2060년 4,396만 명으로 변화할 전망이다(통계청, 2011). 즉, 현 추세대로 인구가 변화한다면, 2045년경부터 적정인구보다 적어지고 그 차이(gap)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적정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30년 3,210만 명, 2040년 2,870만 명, 2050년 2,627만 명, 2060년 2,423만 명, 2080년 2,285만

38) 기존의 적정인구론은 주로 인구학적, 경제학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다(이삼식 외, 2011).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적정인구는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화하는 인구로 논의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적정인구는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로 논의된다. 환경학적 관점에서의 적정인구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여 후세대의 복지가 지속될 수 있는 인구로 논의된다.

명으로 추정된다(이삼식 외, 2011). 최근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196만 명, 2040년 2,805만 명, 2050년 2,460만 명, 2060년 2,140만 명이다. 즉, 2025년경부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적정인구 미만으로 감소하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급을 진단한 결과, 2010년대~2020년대에는 408천 명의 노동력 과잉이 발생하나, 2030년대에는 15천 명 그리고 2040년대에는 약 1백만 명(954천 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전망이다(이삼식 외, 2011).

적정인구와 최근 추세 지속 시 인구를 대비하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을 비교하였는데, 총인구 부족은 내수시장, 사회보장, 경제성장 등과 관련이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부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2045년경부터 시작되는 총인구 부족(총인구 감소는 2031년부터), 2025년경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부족(생산가능인구 감소는 2017년부터), 2030년대부터 시작되는 노동력 부족은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를 시사해준다. 즉, 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력(국제적 위상)이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가 상생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총인구의 지나친 감소(적정인구 미만으로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지나친 감소(적정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미만으로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래 인구전략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학적인 수단으로는 크게 출산력 변경과 국제이동수준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사망력은 인류가 열망하는 장수(longevity)를 위하여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인구학적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적정인구 대비 총인구 부족(2045년경부터), 생산가능인구 부족(2025년경부터),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2030년대부터) 등의 시기를 고려해보면, 외국인구 유치는 그 특성상 당장 필요한 전략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주로 성인(생산가능인구)으로 입국 시 바로 가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출산력 제고는 지금부터 필요한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신생아들은 바로 총인구에 그리고 20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어 미래의 총인구 부족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 부족을 예방(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표 6-1〉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시기 구분

	2010년대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총인구			감소시작 (2031년부터)	적정인구 미만으로 감소시작(2045년경)
생산가능인구	감소시작 (2017년부터)	적정 생산가능인구 미만으로 감소시작(2025년경)		
적정인구 유지 필요 노동력	공급초과	공급초과	공급부족 (15천 명)	공급부족 (954천 명)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이삼식 외(2011)의 적정인구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한편, 출산율 제고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성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정부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 부족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출산율이 충분하게 높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삼식 외(2011)는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을 1.8로 추정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인구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출산율이 1.8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 정

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출산력 제고 전략의 보충적인 전략으로 잠재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인구 구성적인 측면이나 시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전략과 외국인력 유치 전략 간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즉, 출산율 제고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국내 잠재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를 제고하며, 이들 대내적인 전략들만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인구문제의 실제 도래 시기 즈음에 외국인력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 간 구성적 및 시간적 메커니즘(mechanism)을 토대로 이하에서는 각 전략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출산율 제고 전략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 의거한다. 하나는 만혼화와 비혼화 현상이다. 특히, 법률혼이 이루어진 후에 출산을 시작하는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만혼화는 출산율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한국 여성의 혼외출산비율은 2% 수준으로 아주 낮다. 또한, 최근의 경향으로 비혼화 경향도 적어도 미래에 중요한 출산력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인의 평균 이상자녀수인 2.1~2.3명 미만에서 출산을 완료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배우출산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혼화와 유배우출산율 감소의 두 경향은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경직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원하는 수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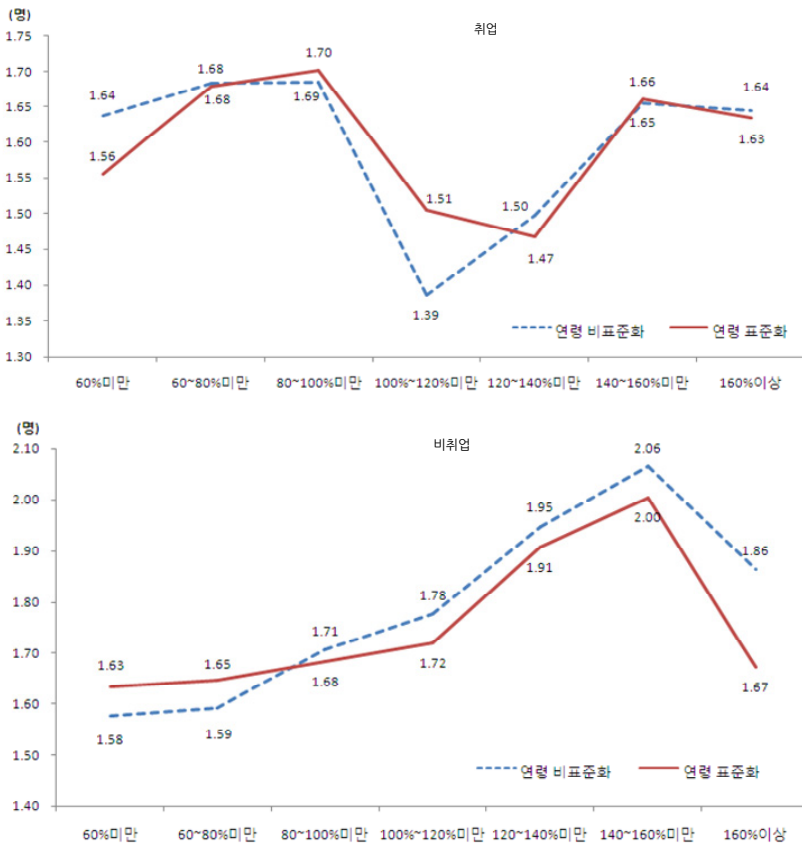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노동시장 연계구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착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 고학력 경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하였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들이 원하는 이른바 좋은 직장(고용이 안정되고 좋은 수입이 기대되는)이 한정되어 있어 취업을 쉽게 하지 못하여 취업대기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대학 이수기간이 연장되고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학력화와 입직연령의 증가는 만혼화와 비혼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등에서는 젊은 인력의 수혈이 어려워져 구인난과 함께 기존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의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도 만혼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 구입은 물론 전세마저 매우 비싼 상황에서 취업을 할지라도 바로 결혼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안정적인 직장 마련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데 이어서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시간을 소요하여야함으로써 만혼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혼 후 출산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만혼화의 영향으로 늦게 출산을 시작함으로써 희망하는 자녀수 모두를 출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만혼으로 후천성불임증 등 생리적인 장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뒤늦게 태어난 자녀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은퇴를 함으로써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이 억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취업여성들 중 중산층의 경우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인하여 출생아수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곤란은 가부장적인 고용문화와 가족문화

에 기인한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남녀의 육아가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직장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과 직장 중 택일이 강요되어 결국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늦추고 (혹은 비혼상태로 계속 남게 되고) 출산을 축소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남성의 육아 및 가사예의 참여 부족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6-1] 한국의 취업 및 비취업 유배우여성의 평균 자녀수



자료: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국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의 개혁, 주택공급 활성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즉, 그간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보육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보육이나 자녀양육비용 경감은 결혼 후 출산 시에 한정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세부전략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간 임금수준과 승진기회 등에 있어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고졸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로교육, 취업 알선에 이어 취업 후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졸자 취업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학력 간 차별을 제거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후진학(後進學) 체제 구축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졸 청년층에 대해서도 졸업 전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여 미스매칭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만혼화 방지를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세부전략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일환으로 주택구입 비용을 융자해주거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들은 이미 자녀를 많이 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가구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취업 기간이 짧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결혼생활을 위한 집 마련이 곤란하여 결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만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을 배정하여 소득수준(전세금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이나 자녀수와 무관하게 연령만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아파트 등 신축 시 일정한 물량을 신혼부부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케 하며, 기존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근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혼부부용 주택단지는 산업단지 등의 배후도시 건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한국사회에 일-가정양립 환경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세부전략이다.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하다. 즉, 자녀와 성장 주기의 관점에서는 영유아기에는 보육과 근로 간 연계가 용이하도록 맞춤형 보육서비스(시간제 보육 등) 제공을 강화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전담 교사(정규교사)를 배치하도록 방과후학교 운영을 의무화하여 자녀들이 정규수업 이후에도 동일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적성을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부·모의 직장생활주기의 관점에서는 일하는 부와 모 모두 마음 놓고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을 위한 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 이용 제공),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현행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 또는 상한액 100만원 한도 내의 임금대체수준 제고), 원활한 인력대체(휴직자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칭 “인력대체개발원” 설립·운영)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필수적인 일-가정양립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일-가정양립은 궁극적으로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직장문화와

가족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2. 잠재인력 활용 전략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기 태어난 인구 중 잠재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노동이 가능한 잠재인력으로는 청년인력, 여성인력 및 고령인력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있어서의 청년인력 중 잠재인력은 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일 것이다. 청년실업자는 주로 미스매칭에 의한 것으로 학교교육과 직장업무 간의 일치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앞서 출산력 제고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다루었던 진로교육-직업 알선-취업 후 전문교육 등 연계,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더불어 중소기업 등의 취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의 생활패턴(라이프스타일)과 적합한 직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시기에도 유희인력으로 남게 될 여성인구는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에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포기한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들 인력이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출산력 제고 전략에서 다루었던 일-가정양립 관련 세부전략들이 주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시기에 고령인력 중 유희인력은 주로 건강하면서도 일할 의지가 있으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고령인구일 것이다.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선택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 후 경력과 신체적 기능 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직 교육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한다.

3. 외국인력 유치 전략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잠재인력 활용도 한계에 부딪칠 경우에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력 유치를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정부의 외국인·이민정책은 선별유입정책(고용허가제)으로 미스매칭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외국인노동력을 단기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필요한 시기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된 출발지국가들(origin countries)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력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 역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다른 변수로는 기술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현재와 같이 많은 육체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첨단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의 유치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전략은 우수인력으로 한정하여 국내에 장기간의 체류를 위한 조건 내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 취득조건 완화, 이중국적 허용, 가족동반 이민 허용, 정착에 용이한 생활기반 구축 및 제공 등이 포함된다.

제3절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문제와 관련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실로 한·중·일의 인구문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한·중·일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중·일 각각은 인구문제로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거대한 고령인구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출산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중국 및 일본 각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 등은 상대방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한 국가에서의 인구정책이 인구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국가들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수준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중·일의 각국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분석했듯이 한·중·일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유럽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중·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공동의 인구전략이 필요하다.

한·중·일 간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미래의 인구전략으로는 크게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 3국 간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의 공동 전략이다. 한·중·일의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경제·사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원인 진단, 파급효과 측정, 효과적인 대응 방안 개발 등을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간 공동으로 인구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 인구문제 연구를 위한 상설적인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한·중·일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에 관한 공동 전략이다. 한·중·일 정부 간 정책포럼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여 각국의 정책 시행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한·중·일 3국의 정부 간 공동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문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3국 간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한·중·일 각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공급과잉 부문과 공급부족 부문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일 3국 간 노동력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력 교류의 한 방편으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한·중·일 3국 간의 유학생 교류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노인인구 급증에 대응한 공조체계 구축에 대한 공동 전략이다. 미래에 한·중·일 3국 모두 노인인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들 노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권이 유사한 한·중·일 국가들로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 한·중·일 3국 간 금융, 관광, 보건의료 등 제 분야에서의 고령친화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론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ulation)로 유지될 수 없다. 국제인구이동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국제무역 등은 국가의 인구규모와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로 압축되는 미래의 인구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변화와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에 따른 미래 인구전략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간의 인구정책을 진단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고찰, 기존통계 분석, 현지방문을 통한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무엇보다도 한·중·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한·중·일의 인구동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구동태요인 변화는 근대화 시기와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출산율과 사망률은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한 변천 과정을 겪고 있다. 근대화 진행 순대로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먼저 1974년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졌고, 이어서 한국은 1983년 그리고 중국은 1992년에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졌다. 한·중·일 3국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인구대체수준 도달 시기가 대체적으로 약 10년씩 차이가 있으나 늦게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한국과 중국에서 출산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커 최근에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소폭이

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사망률도 근대화 수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평균수명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후발 근대화된 국가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선발 근대화된 국가의 평균수명을 따라 잡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결국 3국이 어느 정도 근대화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평균수명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구동태율의 변화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인구변천은 시기와 속도는 다르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먼저 2007년부터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상회하여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은 2028년에 그리고 중국은 2030~2035년경에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중·일의 인구변동을 분석한 결과, 한·중·일 인구의 변동패턴은 유사하나 변동 시기와 속도는 상이하다. 고출산·저사망 시기에 인구가 급증하고, 이어서 장기간 저출산현상으로 유소년인구에 이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지면서 총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인구감소 시기는 일본 2011년, 한국 2031년, 중국 2026년으로 중국의 인구변천이 한국보다 다소 늦게 시작되었으나 인구감소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구조는 근대화 순으로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초저출산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수준이 일본에 비해 높아지거나 유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미래에 한·중·일 3국 모두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수준도 높아 한·중·일 3국의 '인구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인구는 1980년대 세계인구의 약 1/4에서 2010년에 1/5, 2100년에 약 1/10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중·일의 인구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 변동 시기와 속도가 상이한 관계로 그 영향력에서도 다소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반면, 사회보장지출의 재정적자가 이미 발생하여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보다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을 지라도 초저출산현상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부담 급증,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도 일본과 한국에 이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보장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은 경제발전기간이 충분히 길거나 사회보장 대응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성비불균형, 도시화, 대규모의 유동인구, 소수민족 해체 등의 문제가 향후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와 결합하면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증폭되고, 이에 따라 인구변동이 미치는 영향의 속도나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중·일의 인구정책을 분석한 결과, 3국은 인구 변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 이후에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출산장려 혹은 출산억제완화의 순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3국의 인구변천 시기에 따라 출산억제정책은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한국의 경우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1년, 중국의 경우 건국 이후 찬반 논의를 거쳐 197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3국 모두 출산억제정책의 수단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하였다. 한·중·일 3국 모두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시기에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인구자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주된 배경으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출산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유증

으로 인공임신중절의 폐해가 인구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43년이 지난 2004년에 엔젤플랜을 계기로, 한국은 44년이 지난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계기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중국은 약 35년이 지난 2014년 단독이태(單獨二胎)를 계기로 출산억제정책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과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을 제안하는데 있어서의 전제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는 적어도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각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중·일 간 해외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관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은 자체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국내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총인구 감소(2031년),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 적정인구 대비 총인구 부족(2045년경), 생산가능인구 부족(2025년경),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2030년대) 등의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잠재인력 활용도 한계가 부딪칠 경우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 전략을 고려하도록 한다. 즉, 출산율 제고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국내 잠재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를 제고하며, 이들 대내적인 전략들만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인구문제의 실제 도래 시기 즈음에 외국인력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우선 출산율 제고 전략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만혼화와 유배우출산율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모색하도록 한다. 만혼화와 유배우출산율 감소의 두 경향성은 사회구조적으로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경직성, 고비용 주거환경, 일-가정양립 곤란 등에 기인한다. 결국 한

국사회에서 실질적인 출산을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의 개혁, 주택공급 활성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만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원인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전략으로 진로교육-취업 알선-취업후 직업교육 등 생애주기별 접근 강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고졸취업할당제, 후진학(後進學)체제 구축, 전공과 직무간 연계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신혼부부용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연령기준만 적용), 신혼부부용 주택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자녀의 성장주기와 부모의 경제활동주기에 따라 보육-근로간 연계 강화(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전담교사(정규교사) 배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의무화, 휴가·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이용대상 확대),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인력대체개발원(가칭) 설립, 결혼과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 철폐, 직장의 필수적인 일-가정양립 인프라 구축 의무화, 가부장적인 직장문화와 가족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 문화적 접근 강화 등이 필요하다.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잠재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있어서의 잠재인력은 청년인력, 여성인력 및 고령인력이다. 청년층의 잠재인력은 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학교교육과 직장업무 간의 일치도 제고, 진로교육-직업 알선-취업 후 전문교육 등 연계,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중요하다. 여성잠재인력은 주로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포기한 여성들로 일-가정양립 제고(출산을 제고 전

략에서와 같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령잠재인력은 주로 건강하면서도 일할 의지가 있으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고령인구로 정년 철폐나 정년선택제 도입, 전직 교육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외국인력 유치 전략은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잠재인력 활용도 한계에 부딪칠 경우에 필요한 전략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에는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랜 기간 동안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력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 역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기술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육체적 노동력 대신 첨단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미래에 우수 외국인력의 유치 및 정주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국적 취득조건 완화, 이중국적 허용, 가족동반 이민 허용, 정착에 용이한 생활기반 구축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문제와 관련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실로 한·중·일의 인구문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한·중·일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중국 및 일본 각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 등은 상대방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간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미래의 인구전략으로는 크게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공동인구프로젝트 실시, 상설 인구문제연구 공동기구 설치 등),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한·중·일 정부 간 정책포럼 등 구성), 3국 간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노동력 교류 공조체계 구축, 유학생 교류 체계화 등),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금융, 관광, 보건의료 등 제 분야에서
의 고령친화산업 공동 육성 등)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의 인구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연구들이
있으나 다소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부문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중·일 3국의 인구에 관한 향후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
는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각국의 이해정도
가 깊은 상황에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렇다. 아직까지 적어도 인구관련 연구 분야에서 인구 변동은 경제·사회
변화와 연관되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기술되고 분석되어 왔다. 이번 연구
는 한·중·일 3국의 인구와 경제·사회·문화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에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심
화될 뿐 아니라 그러한 심화된 인구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이
라는 점에서 보면, 미래의 인구전략은 국내적인 상황만을 고려하여 수립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에 경
제·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 국중호(2012). 일본의 사회보장·조세의 일체개혁과 한국에의 시사. 한국조세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 강동욱(2011). 경쟁과 학력 과잉의 미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적정 인구 가능성 탐색 I. pp.13~112.
- 김명중(2012). 최근 일본의 인구 및 사회보장 관련 문제: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사라진 기업연금.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3월호. pp.64~76.
- 김범송(2010).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 연구: 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역락.
- 김상호·문형표(2011). 인구고령화와 저축의 명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 pp.91~138.
- 김소영·이종화(2006).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Vol.12, No.1.
- 김용하·이삼식·배다영·최효진·이지혜·김태홍·서문화·이규용·이미화·이석·이진면·장지연·정기선·황수경(2011). 미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지(2010). 일본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강화 배경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Vol.4 No.19.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 박일수·이동현(2010).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2013).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2013.03.29.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3).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2013.10.08. 보도자료

- 서세욱(2012). 일본 재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12.11. pp.203~235.
- 선우덕·박영란·윤홍식(2004). 고령화와 보건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의철 · 박종연 · 이은환 · 차승현(2011). 질병구조 Evolution.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저출산 고령화와 삶의 질 III. pp.14~125.
- 오호영(2013). 산업현장의 숙련단절이 다가온다. 국제무역연구원, Vol.12 No.51.
- 유기홍(201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대학교육연구소.
- 이동렬(2013).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Issue Paper Series, No.2013-5.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운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화·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박종서·윤홍식·조영태·김필숙·최은영·신윤정·오영희·김수봉(2007).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a).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김윤경·김영아(2009b). 선진국의 인구문제 및 정책방향: 저출산대책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이지혜·최효진·한진희·방하남·김현숙·우석진·최준욱·김순옥·배성일·박효정·서문희·김혜원·이태진·신윤정·최성은(2009c).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오상훈·이상돈·구성열·최효진(2011). 미래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우(2012). 일본 사회보장 개혁 방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주간포커스, pp.10~13.
- 이소양(2012.09.10.). 저소득층을 위한 중대질병보험제도 도입. 보험연구원. 해외금융 뉴스.

- 이의규·강일규·류지영·조준모·김삼수·오학수(2008). 日本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평·고가영(2012). 국가재정 깃누를 인구고령화:일본식의 부채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LG경제연구소. LG Business Insight, 2012.12월호.
- 이진면(2011). 고용촉진형 경제 성장 구조 변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 pp.139~226.
- 이찬영·태원유·김정근·손민중(2011).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성장잠재력, 생산성, 세대간 일자리 대체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 이혜영·강영혜·박재운·김태은·한준(2007). 교육비전 중장기 계획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최정윤·김지하·김철화·이선현(2011).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 부문 구조 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인구보건복지협회(2011). 인구보건복지협회 50년사.
- 장인성(2010).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 전영준(2011). 출산과 경제 성장의 Dynamics.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 pp.13~89.
- 정우진(2005).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및 정부재정 지원규모 중 장기 예측(제2장). 윤희숙 외(편). 고령화와 공공의료비. 한국개발연구원.
- 채창균(2012). 고등교육 충원율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Issue Brief, 제1호.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출생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사망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 한국인구학회(2006). 인구대사전. 통계청.
- 한국장학재단(2011). 미래 고등교육 수요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황양주·최유성(2011). 인구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변화 예측: 장래인구 추계자료와 교육기관 현황 비교분석을 중심. 통계개발원.

뉴시스(2012.07.12.). 소규모 학교 통폐합.. 경북도 전국 최고.

울산저널(2013.05.29.). 비정규직 비율 일본 34.4%, 한국 47.8%.

蔡昉(2004). 人口转变. 人口红利与经济增长可持续性. 《人口研究》. 2004年第2期.

蔡志强(2011). 社会阶层固化的成因与对策. 《学习时报》. 2011年6月27日.

陈卫民, 张鹏(2013). 人口年龄结构变化如何影响通货膨胀: 理论解释与经验证据. 《南开经济研究》. 2013年第2期.

都阳, 侯东民, 陈卫(2007). 是人口红利 还是人口问题. 《人口研究》. 2007第2期.

段成荣(2005). 要发展地看待城市人口容量问题. 《人口研究》. 2005年第5期.

段成荣(2006). 中国人口受教育状况分析. 《人口研究》. 2006年第1期.

冯立天(2000). 中国人口政策的过去. 现在与未来. 《人口研究》. 2000(4).

顾宝昌, 徐毅(1994). 中国婴儿出生性别比综论. 《中国人口科学》. 1994年第3期.

郭志刚(2012). 你不知道的世界人口变化. 《光明日报》. 2012年11月4日第9版.

国家人口和计划生育委员会编(2007). 中国人口和计划生育史. 北京: 中国人口出版社.

国家人口计生委(2012). 中国流动人口发展报告2012. 中国人口出版社. 2012年出版.

国家人口计生委课题组(2010). 城镇化背景下的人口管理制度创新. 《中国人口报》. 2010年10月29日.

国家统计局(2013). 中华人民共和国2012年国民经济与社会发展统计公报. 《人民日报》. 2013年2月23日第5版.

国家统计局(2011). 中国统计年鉴2011. 中国统计出版社. 2011年出版.

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统计司(2012). 2011中国人口. 北京: 中国统计出版社.

侯东民(2007). 新的神话: 人口红利说. 《中国图书评论》. 2007第9期.

姜向群(2009). 改革开放以来中国老年社会保障制度的发展变革及政策思考. 《人口研究》. 2009年第2期.

李建民, 原新, 陈卫民, 朱镜德, 黄乾, 姚从容, 吴帆(2007). 中国人口与社会发展关系: 现状, 趋势与问题. 《人口研究》. 2007年第1期.

李文星, 徐长生(2008). 中国人口变化对居民消费的影响. 《中国人口科学》. 2008年第3期.

- 李昕, 徐滇庆(2009). “人口陷阱”与经济发展. 《中国人口科学》. 2009年第6期.
- 刘爽(1985). 我国人口出生性别比差别问题初探. 《人口研究》. 1985年第2期.
- 刘爽(2005). 城市人口规模调控需要制度创新. 《人口研究》. 2005年第6期.
- 刘元春, 孙立(2009). “人口红利说”: 四大误区. 《人口研究》. 2009第1期.
- 刘铮(1992). 人口现代化与优先发展教育. 《人口研究》. 1992年第2期.
- 陆杰华(2000). 关于我国老年产业发展现状, 设想与前景的理论思考. 《人口与经济》. 2000年第4期.
- 陆杰华, 王广州, 李建新, 吕萍(2002). 经济转型期我国人口变化对水产品消费的影响. 《经济问题》. 2002年第4期.
- 陆杰华(2007). 快速的中国人口老龄化进程: 挑战与对策. 《甘肃社会科学》. 2007年第6期.
- 陆杰华, 王伟进(2012). 城市化北京下的我国户籍改革新政的理论思考. 《人口与计划生育》. 2012年第5期.
- 陆学艺, 主编(2002). 当地中国社会阶层研究报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2年出版.
- 马瀛通(1999). 对中国近期出生性别比升高的另一种理论解释. 《中国人口科学》. 1999年第4期.
- 孟令国(2013). 二次人口红利视角下年龄结构变化对经济增长的影响. 《广东社会科学》. 2013年第3期.
- 穆光宗(2008). 中国的人口红利: 反思与展望. 《浙江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08第3期.
- 彭希哲, 郭秀云(2007). 权利回归与制度重构. 《人口研究》. 2007年第4期.
- 乔晓春(1992). 对中国人口普查出生婴儿性别比的分析与思考. 《人口与经济》. 1992年第2期.
- 《人口研究》编辑部(2009). 新中国人口60年. 《人口研究》. 2009(5).
- 《人口研究》编辑部(2009). 生育政策与出生性别比的失衡相关吗. 《人口研究》. 2009年第3期.
- 《人民日报》编辑部(2012). 2.3亿流动人口, 公共服务均等化提速. 《人民日报(海外

- 版》, 2012年8月9日. 第1版.
- 石人炳(2004). 人口变动对教育的作用. 《市场与人口分析》. 2004年第2期.
- 石人炳(2013). 我国出生性别比变化新特点——基于“五普”和“六普”数据的比较. 《人口研究》. 2013年第2期.
- 涂平(1993). 我国出生婴儿性别比问题探讨. 《人口研究》. 1993年第2期.
- 王德文, 蔡昉(2006). 人口红利的获得与丧失, 蔡昉主编, 《中国人口与劳动问题报告No.7—人口转变的社会经济后果》,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年出版.
- 王德文, 蔡昉, 张学辉(2004). 人口转变的储蓄效应和增长效应—论中国增长可持续性的人口因素. 《人口研究》. 2004年第5期.
- 王丰, 安德鲁, 梅森(2006). 中国经济转型过程中的人口因素. 《中国人口科学》. 2006年第3期.
- 王桂新(2010). 中国人口变动与经济增长. 《人口学刊》. 2010年第3期.
- 王国辉(2011). 人口老龄化与城市化呼唤社会保障制度创新发展. 《中国人口科学》. 2011年第4期.
- 王培安(2012). 推进人口和计划生育基本公共服务均等化. 《人民日报》. 2012年9月23日.
- 吴瑞君(2012). 人口变动与社会公共资源协同的新思路. 《东方早报》. 2012年6月12日.
- 杨道兵, 陆杰华(2006). 我国劳动力老化及其对社会经济发展影响的分析. 《人口学刊》. 2006年第1期.
- 杨瑞龙, 杨其静(2000). 阶梯式的渐进制度变迁模型——再论地方政府在我国制度变迁中的作用. 《经济研究》. 2000年第3期.
- 叶建亮(2006). 公共产品歧视性分配政策与城市人口控制. 《经济研究》. 2006年第11期.
- 于学军(1995). 中国人口老化的经济学研究, 北京: 中国人口出版社. 1995年出版.
- 于学军(2009). 人口变动, 扩大内需与经济增长. 《人口研究》. 2009年第9期.
- 原新(2007). 对我国出生性别失衡人口规模的判断. 《人口研究》. 2007年第6期.
- 翟振武, 杨凡(2009). 中国出生性别比水平与数据质量研究. 《人口学刊》. 2009年

第4期.

张车伟(2010). “人口红利”与中国经济持续增长前景. 《人口与计划生育》. 2010年第8期.

张翼(1997). 中国人口出生性别比的失衡, 原因与对策. 《社会学研究》. 1997年第6期.

张翼, 周小刚(2012). 周小刚, 我国流动人口子女受教育状况调查报告. 《调研世界》. 2012年第1期.

赵树凯(2000). 边缘化的基础教育. 《管理世界》. 2000年第5期.

郑真真, 吴要武(2005). 人口变动对教育发展的影响. 《北京大学教育评论》. 2005年第2期.

郑真真, 廖少宏(2007). 人口变动对劳动力供给的影响. 《中国劳动经济学》. 2007年第1期.

《中国经济时报》编辑部(2011). 教育资源分布不均, 北京“学区房”价格畸形, 中国经济时报. 2011年6月9日.

中国科学院可持续发展战略研究组(2012). 2012中国可持续发展战略报告. 科学出版社. 2012年出版.

“中国社会保障体系研究”课题组系等(2000). 中国社会保障制度改革: 反思与重构. 《社会学研究》. 2000年第6期.

周其仁(2013). 农村社会保障的未来. 《社会科学报》. 2013年6月13日.

周学馨(2010). 实现人口均衡发展贵在制度创新. 《中国人口报》. 2010年6月28日.

朱荟(2009). 少数民族服务外流为哪般-以凉山彝族妇女为例. 中国民族. 2009年第5期.

京極高宣, 高橋重郷編(2008). 『日本の人口減少社会を読み解く』. 中央法規出版.

松谷明彦, 藤正巖(2002). 『人口減少社会の設計』. 中央公論新社.

松谷明彦(2009). 『人口減少経済』の新しい公式』. 日本経済新聞出版社.

広井良典(2013). 『人口減少社会という希望』. 朝日新聞出版.

河野稠果(2007). 『人口学への招待』. 中央公論新社.

内閣府(2013). 『高齢社会白書』.

小田利勝(1995). 「高齢化」『生活問題の社会学』学文社.

奥山正司(2010). 「生活と福祉」『社会の理解』ミネルヴァ書房.

総務省統計局(2013).『我が国人口・世帯の概観』.

渡辺京二(2005).『逝きし世の面影』平凡社.

尹豪(2013). 中国の人口高齢化と高齢者の年金制度, 鈴木 透. 東アジア低出生国における人口高齢化の展望と対策に関する国際比較研究, 平成24年度総括研究報告書.

伊藤正一(2013). 中国の高齢化の現状と政策対応, 鈴木 透. 東アジア低出生国における人口高齢化の展望と対策に関する国際比較研究, 平成24年度総括研究報告書.

荻野美穂(2008).「家族計画」への道—近代日本の生殖をめぐる政治. 岩波書店.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平成23(2011)年~平成72(2060)年.

Aoki, R.(2012). A Demographic Perspective on Japan's "Lost Decad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supplement):103-112.

Coale, Ansley J (1973).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Vol.1. Liege: IUSSP.

Hong, G.(1996). *China's population and population aging*, In 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 Decline of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East Asia.

JICA Research Institute(2003). Japan's Demographic Experienc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ed.). Second Stud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New Insight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pp.18~28.

Modigliani F. and S. L., Cao(2004). The Chinese Saving Puzzle and The Life2Cycle Hypothesi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2 (1), pp145-170.

OECD(2013). OECD 교육지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Retherford, Robert D., and N. Ogawa(2005). Japan's Baby Bust:

-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East-West Center,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18.
- Riley, N. E.(2004). China's Population: New Trends and Challenges,
Population Bulletin, June 2004, Vol. 59, No. 2.
- Sodei, T. and Y. Kudo.(1996). The aged society with fewer children
and social policies for the elderly, In *Decline of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East Asia*, 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
- Statistics Bureau(2012). STATISTICAL HANDBOOK OF JAPAN 2012.
- U.N.(2013).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www.koilaf.org>)

일본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

중국 국가 통계국(<http://www.stats.gov.cn/>)

<http://www.chinanews.com/>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기금운용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옥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 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금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매일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형평화 연구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 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 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C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 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